국제기구 | 보고서요약

2025
NO. 01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2025.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본 보고서는 2024년 12월 OECD에서 발표한
“Economic Outlook Volume 2024 Issue 2”의 주요 내용을 요약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원문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람.

연구진

김빛마로	재정지출분석센터장
김정환	재정제도분석팀장
김인유	선임연구원
박신아	선임연구원
장준희	선임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Contents

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1. 서론 ····· 1
2. 동향 ····· 6
3. 전망 ····· 19
4. 위험 ····· 25
5. 정책 ····· 34

Ⅱ 노동력 부족 문제의 이해: 구조적 요인 분석 49

1. 서론 ····· 49
2. 팬데믹 회복기 이후 안정세로 전환된 OECD 국가의 노동시장 ····· 51
3. 기업 단위에서의 증거: 고용주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 ····· 59
4.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혁의 필요성 ····· 74
5. 결론 ····· 91

Ⅲ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93

1. 호주 ····· 93
2. 캐나다 ····· 96
3. 중국 ····· 101
4. 유로지역 ····· 106
5. 프랑스 ····· 110
6. 독일 ····· 114
7. 일본 ····· 118
8. 한국 ····· 122
9. 네덜란드 ····· 125
10. 스웨덴 ····· 128
11. 영국 ····· 131
12. 미국 ····· 135

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1. 서론

○ 세계 경제는 여전히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물가상승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세계 무역은 회복되기 시작

- 낮아진 물가상승률이 실질 가계소득 성장과 지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소비자 신뢰는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노동시장 압력은 완화되고 있으나, 실업률은 대체로 사상 최저 수준에 근접하고 있음
- 실질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명목 금리가 낮아지면서 주택 및 신용시장과 같이 금리에 민감한 부문의 초기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부문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음

○ 2024년 세계 GDP 성장률은 3.2%, 2025년과 2026년에는 모두 3.3%로 전망됨(표 Ⅰ-1)

- 많은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정책 긴축으로 인해 약간의 역풍이 있겠으나, 낮은 물가상승률, 안정적인 고용 성장, 그리고 덜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수요를 뒷받침할 것임
- 국가 간 차이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과 브라질의 강력한 성장이 둔화되고 유럽의 경제 회복이 속도를 내면서 이러한 차이는 점차 소멸될 전망
-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활발한 내수, 중국과 일본의 최근 발표된 경기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강한 아시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G20 국가들의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4년 5.4%에서 2025년과 2026년 각각 3.5%와 2.9%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까지 거의 모든 주요국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됨

○ 전망에는 상당한 하방위험이 존재

-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어 이 지역의 석유 공급 위험을 초래할 경우, 높은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
  - 예상치 못한 유가 급등은 세계 물가상승률을 크게 증가시키고, 특히 석유 수입국에서는 시장 신뢰와 성장을 저해할 것임
- 최근 몇 달 동안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주요국들이 시행하는 수입 제한 조치 증가로 그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세계 무역 제한 조치의 증가는 수입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며 소비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킬 것임
-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낮거나 물가상승률이 점진적인 예상 하락 경로에서 벗어나는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과 신흥국의 자본 이동 또는 환율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높은 채무 수준, 과도한 자산 평가, 일부 차입자의 신용 질 악화(특히 상업용 부동산시장 포함)로 인한 금융 취약성도 여전히 지속
- 규제가 덜한 비은행 금융 기관의 규모와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시장부문 간 부정적인 충격이 급속히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 반면,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 요인들도 존재

- 구매력이 더욱 회복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가 개선되면 가계 저축률이 예상보다 낮아져 소비가 증가할 수 있으며, 단, 이와 동시에 물가 상승압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음
- 주요 지정학적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면 시장 심리가 향상되고 (특히 내년 석유시장의 초과 공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에너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음
- 예상보다 강력한 경제활동인구 증가 또는 금융여건 개선에 따른 투자 회복 등의 긍정적인 공급 충격도 더 높은 성장을 지원할 것임

○ 이러한 배경에서 주요 정책 우선순위는 물가상승률의 지속적인 하락을 보장하고, 채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재정 경로를 수립하며, 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야심찬 개혁을 추진하는 것임

■ (통화정책) 선진국은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에 가까워짐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해야 하며, 신흥국은 신중한 속도로 진행해야 함

- 선진국의 금리 인하 시점과 범위는 기조적 물가 상승압력이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게 신중히 판단해야 함

- 대부분 국가에서 예상대로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도달할 경우, 성장이 안정적으로 추세를 따르고 물가상승률이 목표를 밑돌지 않도록 금리가 중립 수준에 근접하거나 도달해야 해야 함

  • 일본에서는 예상대로 물가상승률이 약 2% 수준으로 안정화된다면, 향후 2년간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선진국의 금리 인하는 신흥국들의 정책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됨

- 신흥국들도 향후 2년간 정책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있으나, 물가상승률 기대가 안착되고 자본 유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속도로 진행해야 함

■ (재정정책) 채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미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며, 대규모 지출 압박에 대응할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단호한 재정 조치가 필요

- 지출 억제 및 재배분, 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고, 국가별 상황에 맞춘 신뢰할 만한 중기 조정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채무 부담을 안정화하는 핵심임

- 통화정책 기조가 덜 긴축적으로 전환되고, 성장이 추가적인 재정 역풍을 견딜 만큼 충분히 강건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함

- 국가별로 정책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기후 변화 대응 및 고령화와 같은 장기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보존하고 취약층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국가에서나 조정의 속도와 방식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함

■ (구조개혁) 미래의 저성장 전망에 직면하여 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개선하고 재정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야심찬 구조 정책 개혁이 필요

- 중위 OECD 국가에서는 1인당 잠재 산출량의 연 성장률이 세계 금융 위기 이전보다 0.7%p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일부 신흥국에서는 더욱 급격한 감소가 발생했음

- 생산성을 개선하고,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촉진하며, 노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교육 및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투자와 노동 이동성을 저해하는 노동 및 상품시장의 제약을 줄이는 개혁이 필수적임

- 이러한 개혁은 저임금 부문에서의 일자리 질 향상 조치와 함께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는 데 필요

■ (국제협력) 국제 무역을 지원하고 지정학적 분열 위험을 줄이며, 더 빠르고 더 잘 조정된 배출 감축 노력을 보장하며, 저소득 국가의 채무 문제를 지나친 어려움 없이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함

〈표 Ⅰ-1〉 향후 2년간 세계 GDP 성장률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단위: %)

	2013~2019 평균	2023	2024	2025	2026	2024 Q4	2025 Q4	2026 Q4
실질 GDP 성장률[1]								
세계[2]	3.4	3.2	3.2	3.3	3.3	3.3	3.3	3.2
G20[2]	3.5	3.6	3.3	3.3	3.2	3.3	3.2	3.1
OECD[2]	2.3	1.8	1.7	1.9	1.9	1.8	2.0	1.8
미국	2.5	2.9	2.8	2.4	2.1	2.5	2.2	2.0
유로지역	1.9	0.5	0.8	1.3	1.5	1.1	1.4	1.5
일본	0.8	1.7	-0.3	1.5	0.6	0.6	1.3	0.3
Non-OECD[2]	4.4	4.4	4.4	4.4	4.3	4.5	4.3	4.3
중국	6.8	5.2	4.9	4.7	4.4	4.7	4.6	4.3
인도[3]	6.8	8.2	6.8	6.9	6.8	-	-	-
브라질	-0.4	2.9	3.2	2.3	1.9	-	-	-
OECD 실업률[4]	6.5	4.8	4.9	4.9	4.8	4.9	4.9	4.8
물가상승률[1]								
G20[2),5)]	3.0	6.1	5.4	3.5	2.9	4.4	3.1	2.8
OECD[6]	1.7	7.1	5.4	3.8	3.0	4.7	3.3	2.7
미국[7]	1.3	3.8	2.5	2.1	2.0	2.5	2.1	2.0
유로지역[8]	0.9	5.4	2.4	2.1	2.0	2.3	2.0	2.0
일본[9]	0.9	3.3	2.6	1.9	2.1	2.3	1.7	2.1
OECD 재정수지[10]	-3.1	-4.8	-4.8	-4.6	-4.4			
세계 실질 무역성장률[1]	3.4	1.0	3.5	3.6	3.5	4.1	3.4	3.5

주: 1) %, 마지막 3열은 전년 동기 대비 변화
2) 구매력 감안한 명목 GDP 이동 평균(Moving nominal GDP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3) 회계연도 기준
4) 경제활동 인구 대비 %
5) 헤드라인 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
6) 구매력을 감안한 명목 민간소비 이동 평균(Moving nominal private consumption weights, using purchasing power parities)
7) 민간소비지출 디플레이터(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8) 조화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consumer price index)
9) 전국 소비자물가지수(National consumer price index)
10)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Table 1.1.

2. 동향

가. 실질 소득 회복이 세계 성장을 뒷받침

○ 2024년 세계 경제는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음(그림 Ⅰ-1, 패널 A)

- 물가상승률 하락은 가계 소비를 뒷받침하고 주요국 대부분에서 통화정책 완화를 가능케 해, 지정학적 및 지역적 긴장과 지속적인 생계비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을 상쇄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별로 경제 활력과 소득 회복 수준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며, 2024년 1~3분기에 OECD 회원국의 약 1/5과 아르헨티나에서 1인당 실질 GDP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그림 Ⅰ-1] 세계 성장은 안정적이고, 서비스업 활동은 제조업 활동을 능가

(단위: %, 50=중립)

주: 패널 A의 연간 성장률은 표시된 분기까지의 연간 성장률, 분기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성장률의 연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

○ (선진국) 미국 등에서는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부진한 경제 성과가 보이고 있음

- 미국에서는 성장세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실질 임금 상승이 민간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음
-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도 분기 GDP 성장이 비교적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음

■ 반면, 헝가리와 라트비아는 3분기에 기술적 경기 침체에 진입하였으며, 독일은 분기별 산출량이 소폭 증가했지만, 낮은 경기심리가 투자 활동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음

○ (신흥국) 최근 신흥국의 경제 동향은 혼재되어 있음

■ 중국에서는 3분기 동안 GDP 성장이 유지되었으며, 수출 증가로 산업 생산이 뒷받침되었으나,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부동산부문의 장기적인 조정이 지속되고 있음

■ 반면,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는 내수가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민간 소비 증가와 정부 지출 강화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아르헨티나에서는 2022년 중반부터 이어진 경기 수축 이후 최근 몇 달간 회복 초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월간 지표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안정적인 단기 성장 모멘텀을 시사

■ 기업 조사에 따르면 성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 몇몇 유럽 주요국에서 약화되고 있음

■ 제조업 성장세는 서비스부문보다 온건하게 유지되고 있음(그림 Ⅰ-1, 패널 B)

■ 소비자 신뢰는 유럽과 성장세가 강화된 일부 신흥국(브라질 등)에서 상승하고 있음

■ 선진국에서는 산업 생산이 침체 상태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소매 판매는 지난 몇 달 동안 OECD 및 비OECD 국가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음

■ 자동차 판매는 미국과 유로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정체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상승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

○ 노동시장의 타이트함은 여러 국가에서 점차 완화되고 있음

■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빈 일자리 대비 실업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 비율이 현재 2019년 수준에 근접

- 이는 경제활동인구 부족의 심각성이 주기적으로 완화되는 것과 일치

■ 실업률은 대체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상승했고,

이러한 상승은 주로 고용 성장 둔화보다 노동시장 참가율 상승을 반영하고 있음

- 강력한 이민 유입이 여러 국가에서 노동 공급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노동 수요 감소로 인해 고용주가 근로 시간 축소를 크게 단행했다는 징후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 시간은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부문이 최근 노동 수요의 강력한 원천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캐나다,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 2024년 총 고용 성장에 대한 공공부문의 기여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명목 임금 상승률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 불균형 완화와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하락에 따라 2023년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노동소득분배율(자영업자 포함)은 상승했으며, OECD 국가의 약 1/3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음
- 임금 상승이 완화되면서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은 대체로 둔화되었으며, 특히 덴마크, 스페인, 영국, 미국처럼 노동 생산성 성장이 회복된 국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짐
- 반면, 호주, 독일, 일부 유럽 소국(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에서는 최근 노동 생산성 성장세가 매우 약하여 단위 노동 비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음

○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이 고용 성장 지속, 강력한 명목 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하락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1인당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초과했으며, 포르투갈, 헝가리, 슬로베니아, 그리스와 같이 팬데믹 이전 추세를 기준으로 예상되었던 수준을 초과한 국가도 많음
- 그러나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라트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 성장은 다소 부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 스페인, 브라질, 인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비 지출이 강력하게 증가했으나,

2024년 2분기까지의 연간 OECD 중위 민간 소비 성장률은 1.3%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평균 연간 성장률 2.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특히 주요 선진국과 중국에서 소비자 신뢰는 역사적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가계 저축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 최근의 매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가계가 구매력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소비 심리 부진의 원인일 수 있음
  - 소비자들이 높은 물가 수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
- 최근 물가상승률 국면에서 식품과 에너지처럼 가계 예산에 특히 중요하고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도 원인일 수 있음

■ OECD 주요 선진국 그룹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소비자 신뢰는 다른 요인들보다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에 더 민감하게 반응(참고 Ⅰ-1)

■ 더욱이,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여러 국가에서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을 상회

-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식품 및 에너지 물가가 명목 가계 가처분 소득보다 약 15%p 더 많이 상승했음

[참고 Ⅰ-1] 물가상승률이 소비자 신뢰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고 있지만, 많은 선진국에서는 역사적 기준에 비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상승은 잠재적으로 심리를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 확인됨(OECD, 2024b; ECB, 2024a)

■ 가계의 물가상승률 기대 형성과 관련해, 과거 연구들은 가계가 식료품과 에너지 같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에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Anesti et. al. 2024; Binder and Makridis, 2022)

■ 유사한 품목이 소비자 신뢰를 결정하는 데 비교적 중요할 수 있음

○ **2001~2024년 OECD 7개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패널 모형을 추정해 소비자 신뢰 변동 요인을 조사

- 소비자 신뢰를 표준화한 값의 월별 변화를 식품, 에너지 연간 물가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의 월별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
- 기타 통제 변수로 경기 순환, 금융 여건을 반영
- 코로나19 팬데믹이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팬데믹 동안 시행된 공공정책 규제의 요약 지표인 Oxford Stringency Index를 포함
- 시간 불변 국가별 영향을 제어하기 위해 국가별 고정 효과를 포함

○ **분석 결과,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은 소비자 신뢰 변동에 특히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근원 물가상승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 이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과 소비자 심리 간의 관계를 발견한 다른 연구들이 특정 가격 변화의 역할을 과소평가했을 수 있음을 시사
- 모형 식별 시 각 요인 대신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을 사용하면 소비자 신뢰에 대한 물가상승률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덜 유의해짐
- 경기 순환, 금융 여건 및 Oxford Stringency Index와 관련된 추정치는 모두 소비자 신뢰와 유의했고 계수 부호도 예상과 일치
- 어떤 경우에는 변수가 시차를 두고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에너지 물가상승률, 복합 PMI, 주식 시장 가치는 동 시점 영향 외에도 1기간 지연되어 영향을 미침
- 추정된 회귀식은 대부분 국가에서 최근 소비자 신뢰 변동의 상당 부분을 설명
-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은 2021년 이후 소비자 신뢰의 변동을 설명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본 국가에서 근원 소비자물가(식품 및 에너지 제외) 대비 식품 및 에너지 물가는 팬데믹 이전 기간에 비해 높게 유지됨**

■ 예를 들어, 2024년 9월 독일의 근원 물가 대비 식품 및 에너지 물가 비율은 2019년 12월보다 16%p 높았음

○ 이 비율에 대한 소비자 신뢰와 상술한 주요 변수들을 넣어 회귀분석한 대안적 모형에서도 이 상대가격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했음

■ 이를 통해 근원 소비자 물가 대비 식품 및 에너지 물가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경우, 예를 들어 근원 물가 대비 식품 및 에너지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하락하면 소비자 신뢰 상승 추정치를 계산할 수 있음

■ 독일에서 이러한 하락은 표준화된 소비자 신뢰가 장기 평균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는 식품 및 에너지 가격 물가상승률이 추가로 상당히 하락하면 소비자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줌

○ 주택 투자는 2024년 3분기까지 OECD 중위 국가에서 약 4%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부분적으로 높은 금리에 대한 반응임

■ 중국에서도 부동산 투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명목 기준으로 2020년 말 고점 대비 40%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한국, 스페인, 영국에서는 주택 거래 건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등 일부 주택시장에서는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OECD 국가들의 실질 주택 가격은 2023년 초 저점을 찍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가 주택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음

○ 실질 기업 투자는 대체로 약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제한적인 금융여건, 일부 국가의 부진한 수요, 상당한 정책 불확실성에 기인

■ 가용한 자료가 있는 OECD 국가의 절반 이상이 2024년 2분기에 기업 투자 감소를 보고했으며, 덴마크, 프랑스, 일본을 포함한 몇몇 국가에서는 3분기에도 감소세가 지속됨

■ 그러나 일부 주요 선진국에서는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특히 미국에서는 올해 민간 지식재산권 및 운송 투자가 빠르게 증가했음

나. 물가상승률이 추가적으로 하락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2024년 대부분 국가에서 계속 완화되고 있으며(그림 Ⅰ-2, 패널 A) 식품, 에너지, 상품 물가상승률의 추가 하락이 이를 주도

■ OECD 중위 국가에서는 연간 물가상승률이 2023년 10월 3.8%에서 2024년 10월 2.3%로 하락

- 브라질과 인도에서도 이 기간 중 대부분 동안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상당히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두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상승

- 중국에서는 식품 가격의 낮은 상승세가 전체 물가상승률을 끌어내리면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2024년 10월 기준, 약 2/3의 선진국과 3/5의 신흥국에서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치에 도달했음(그림 Ⅰ-2, 패널 B)

■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근원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바람직한 수준보다 높은 상태로, 일부 잔존하는 물가 압력을 나타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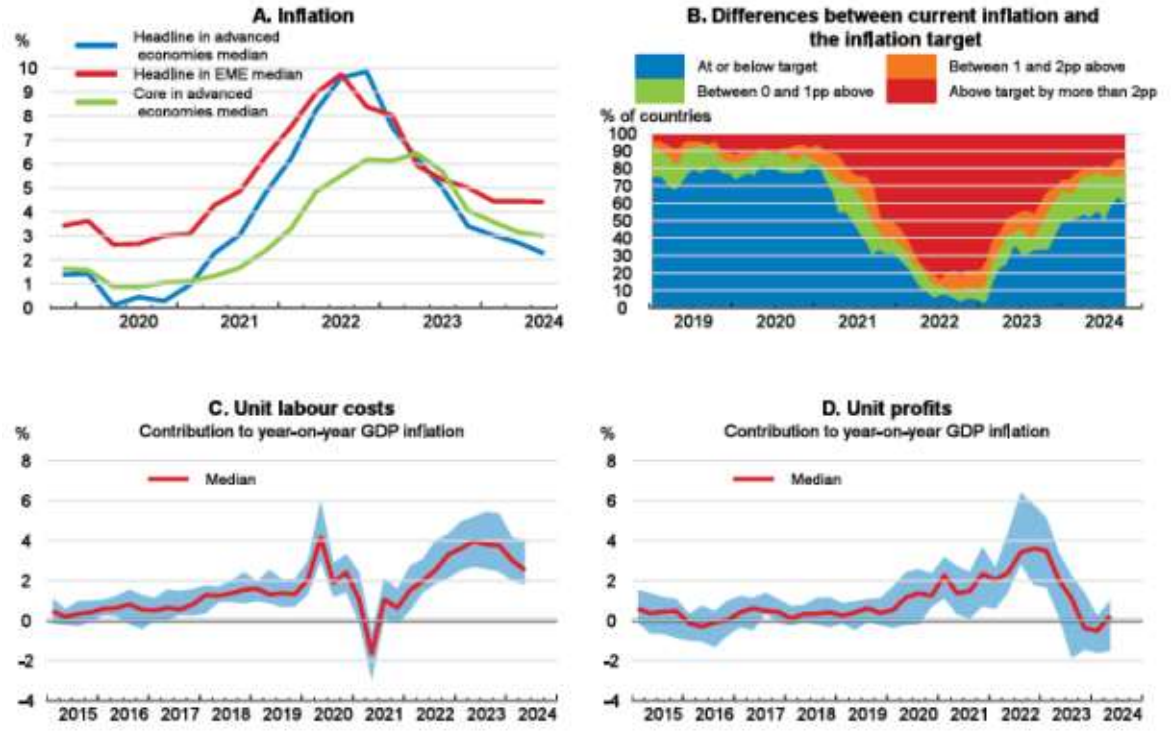
- 예를 들어, 2024년 10월 현재 영국과 미국 물가 지수 품목의 약 절반은 여전히 연간 3% 이상 상승하고 있음

■ 9개 주요국의 GDP 디플레이터 상승을 분해한 결과, 단위 노동 비용이 최근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음(그림 Ⅰ-2, 패널 C)

- 반면, 단위 이익 성장률은 완화되어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기여도가 낮아졌으며, 다른 비용 압력을 상쇄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음(그림 Ⅰ-2, 패널 D)

[그림 Ⅰ-2]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해 중앙은행 목표와 점차 일치

(단위: %)



주: 패널 B는 2024년 10월까지 OECD 22개국(유로지역은 포함되지만 개별 유로지역 회원국은 포함되지 않음)과 비OECD 25개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다룸. 패널 C와 D에서 중앙은행이 특정 구간을 목표로 하는 OECD 27개국의 경우 구간 상단을 적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8.

○ 2024년 10월 기준 OECD 중위 국가에서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4%로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음

- 2022년 초 팬데믹 제한이 대부분 해제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서비스 부문으로 수요가 재균형을 찾기까지 기간이 길었음
- 높은 서비스 수요와 일부 서비스부문의 노동력 부족은 서비스 비용 및 물가의 상대적으로 빠른 상승을 초래
- OECD 중위 국가에서는 서비스 대비 상품 소비 비율이 이제 팬데믹 이전 추세로 돌아왔지만, 서비스 대비 상품 가격 비율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상태임
- 팬데믹 이전 추세에서는 일반적으로 상품 가격 상승률이 서비스 가격 상승률보다 약 0.8%p 낮았음

■ 이러한 상대 가격이 팬데믹 이전의 추세로 조정되려면, 이 격차는 한동안 더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서비스 물가상승률, 낮은 상품 물가상승률 또는 이 두 가지의 조합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서비스 물가상승률의 구성 요소인 주택비용은 여러 국가에서 물가상승률에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가하고 있음

■ 이는 국가별 물가 지수에서 주택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남

■ 최근 몇 년간 주택 공급이 인구 증가(이민 포함)를 따라가지 못했음

■ 긴축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주택 수요와 팬데믹 이후 노동 이동의 반등으로 물가가 높게 유지되었고, 영국, 캐나다, 호주, 라트비아, 포르투갈 등 여러 선진국에서 주택 임대료가 크게 상승

■ 역동적인 국가들에서 저렴한 주택이 적어지는 상황은 개인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음(제2장 참조)

■ 금리가 더 하락할 경우,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에 대한 상승압력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

다. 무역 성장 회복

○ 2024년 세계 무역량은 꾸준히 회복되고 있음(그림 Ⅰ-3, 패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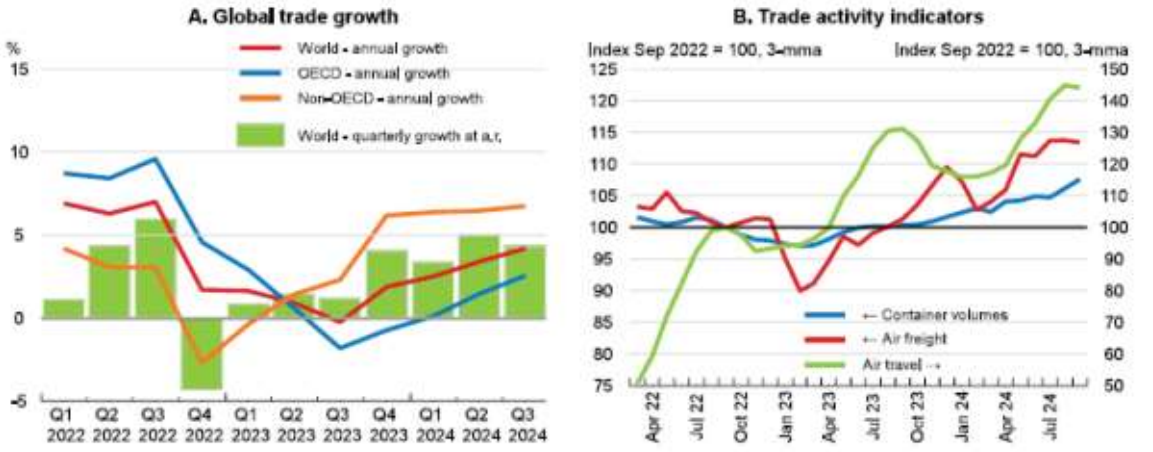
■ 2024년 3분기에는 미국의 상품 소비 회복에 힘입어 분기 성장률이 4.3%(연율)에 이른 것으로 추정

■ 중국과 역동적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로 수출 증가세가 강화되고 있음

■ 2024년 서비스 무역은 비교적 활황을 유지하고 있으며, 비즈니스 서비스와 관광은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

[그림 Ⅰ-3] 무역은 2023년 약세로부터 점차 회복

(단위: %, 2022년 9월=100, 3개월 이동평균)



주: 패널 A의 무역은 평균 수출 및 수입량을 기준으로 하며, 패널 B의 항공 화물은 국제 항공 화물의 전 세계 무역량을 나타냄. 항공 여행은 국제 항공편의 전 세계 항공 여객 킬로미터, 컨테이너 부피는 RWI/ISL의 전 세계 무역량을 기준으로 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1.

- **컨테이너 물량과 세계 여객 물량이 계속 증가하는 등 최근 일부 활동 지표들은 세계 무역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나(그림 Ⅰ-3, 패널 B) 다른 무역 지표들은 혼재된 신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기술 경기의 지표로 활용되는 아시아의 기술 상품 생산은 3분기에 강화되었음

  - 그러나 2024년 대부분 동안 세계 자동차 판매는 부진했으며, 수출 주문(특히 제조품)을 나타내는 조사 지표들이 약세를 보임

    - 이러한 부진은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유럽 내 세 주요국에서는 현재 기업들이 서비스와 제조업 모두에서 수출 주문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이는 부분적으로 2023년 EU 외 수출액의 6.9%, EU 내 수출액의 5.9%를 차지한 이 지역의 자동차 무역 노출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홍해를 피하는 컨테이너선의 운송 거리가 길어져 아시아의 일부 주요 허브에서 선적 지연과 운송 혼잡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공급망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 있음**

  - 올해 항공 화물 물량도 증가했는데, 이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고 홍해와 관련된 지연 위험 및 해운 시간 연장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임

- 약화된 시장 심리에 따라, 연말 휴가철을 앞두고 지연을 피하려는 주문 급증이 완화되면서 7월 최고점 이후 선박 운임은 하락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컨테이너 선박 운송 비용은 2023년 대비 두 배로 상승했으며, 이러한 비용 증가는 점진적으로 제조업 수입 가격에 전가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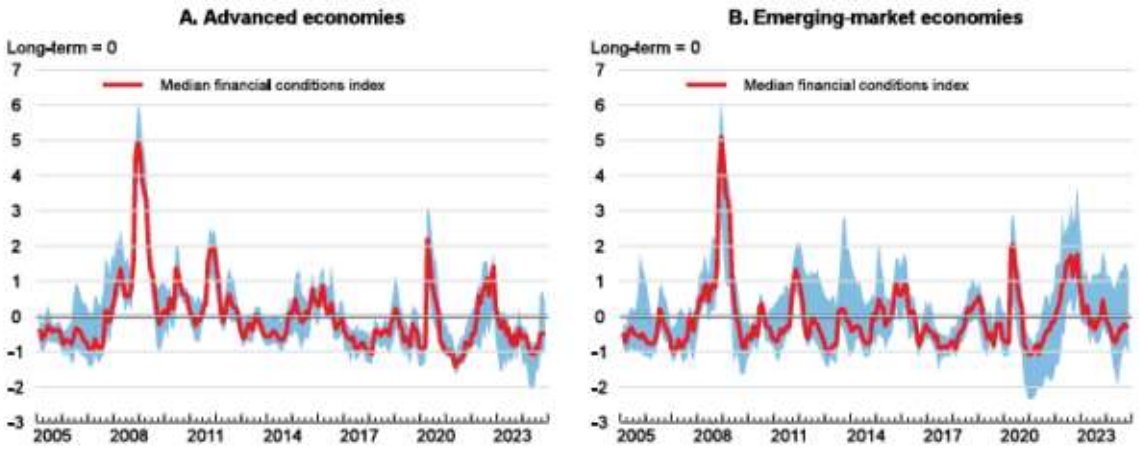
라. 금융시장 여건이 점진적으로 완화됨

○ 광범위한 금융시장 자료를 바탕으로 한 종합 지표에 따르면, 2023년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금융여건이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8월 초 일시적인 시장 변동성과 최근 두 달 동안 특히 미국에서 장기 금리가 재상승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변화임
- 금융여건은 대체로 장기 평균 수준에 근접했으나, 선진국에 비해 신흥국에서는 다소 더 긴축되고 이질적임(그림 Ⅰ-4)
- 체계적인 시장 스트레스 지표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실질 선행 금리는 여전히 양(+)이며 교적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
- 그러나 주가가 상승했고 신용 여건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미국 달러 가치가 상당히 상승했음

[그림 Ⅰ-4] 금융 여건은 완화를 유지

(단위: 지수, 장기=0)



주: 월별 금융여건 지수는 개별 국가의 표준화 지수의 중앙값으로 계산. 청색 영역은 개별 국가 금융여건의 범위를 나타냄. 높을(낮을) 수록 금융여건이 더 긴축(완화)됨을 나타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4.

○ 정책금리의 향후 경로에 대한 시장 기대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과거의 상당한 정책 완화 기대는 최근 일부 철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장기금리는 완만히 하락했음

- 미국, 유로지역, 영국에서는 기간 스프레드(10년물과 2년물 국채 수익률 차)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양전

- 유로지역 내에서는 독일 대비 국채 스프레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안정적이거나 소폭 감소했으나, 프랑스에서는 봄 이후 상당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향후 몇 년간 필요한 대규모 재정건전화 필요성을 반영하며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됨

○ 대부분 신흥국에서 국채 수익률은 추가적으로 하락

■ 예외적으로 브라질은 예상치 못한 물가상승률 상승으로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다시 인상하면서 국채 수익률이 상승

■ 반면, 중국에서는 경제 전망 부진과 추가적인 통화 부양책으로 인해 정부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

■ 신흥국 대부분에서 달러 표시 국채와의 스프레드는 주가와 환율 변동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수준을 유지

- **주식시장은 일부 부문의 고평가된 가치(Ⅰ-4절. 위험 참고)와 8월 초 급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강세를 유지했음**
  - 8월 시장 변동성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본의 7월 말 정책금리 인상 후, 일본과 미국 간 예상되는 금리 차이에 대한 재평가에서 기인
    - 이는 엔 캐리 트레이드(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해 다른 곳의 자산을 매입하는 거래)의 대규모 청산과 엔화의 급격한 평가 상승을 초래했음
  - 미국과 일본의 주식시장 변동성은 크게 확대됐고 일본 주식시장은 상당한 손실을 기록했으며 다른 시장에서도 소폭의 가격 하락이 발생했음
    - 이 과정에서 환율시장도 영향을 받아 고수익 투자 통화, 특히 라틴아메리카 통화 가치가 하락
    - 이러한 스트레스는 단기에 그쳤고, 이후 긍정적인 경제 뉴스로 주가가 회복되었음
    - 이번 사례는 시장이 거시경제적 충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갑작스러운 가격 재조정이 다른 국가와 시장 부문으로 얼마나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지를 보여줌

- **무위험 금리 대비 기업 신용 스프레드는 장기 평균 이하로 하락했으며, 미국에서는 200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했음**
  - 차입 여건 개선과 신용 스프레드 축소는 2024년 기업 채권 발행을 지원
  - 동시에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 은행 신용 성장세가 안정화되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 성장세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
  - 그러나 실질 기준으로 볼 때 대출 증가율은 여전히 완만한 상태임
  - 일부 국가에서는 신용 기준이 여전히 엄격하지만, 가계와 기업 모두에서 신용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통화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은행 예대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음**

- 은행들은 예대금리차 확대와 제한적인 신용 손실 덕분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특히 신용카드, 자동차 구매 대출, 상업용 부동산부문 등 고금리에 민감한 일부 시장 부문에서는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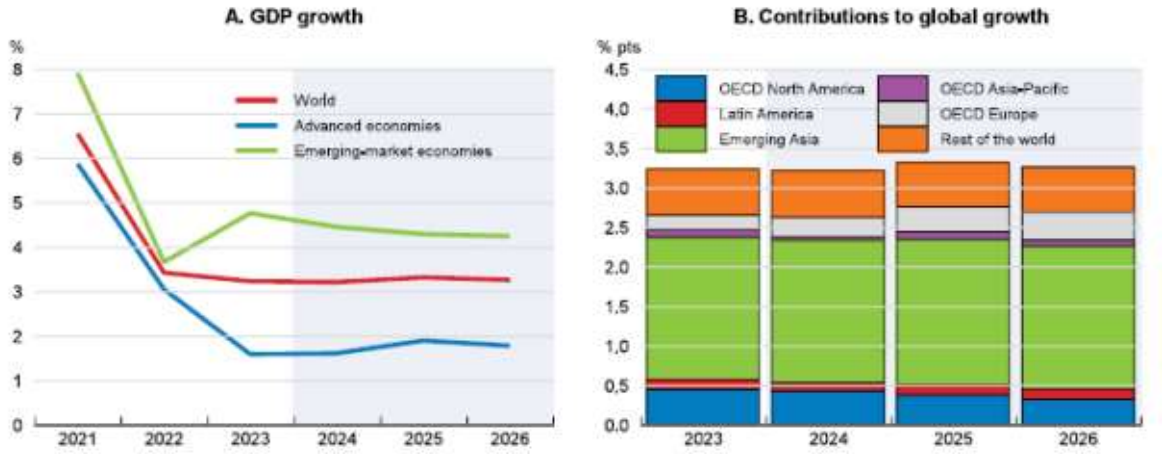
3. 전망

○ 세계 GDP 성장률은 2024년 3.2%, 2025년과 2026년에는 모두 3.3%로 전망됨(그림 Ⅰ-5, 패널 A)

- 통화정책 긴축이 성장에 지연되어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라 정책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2025~2026년에는 금리에 민감한 지출(특히 민간투자)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 지속적인 물가상승률 하락은 가계 실질 소득 증가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가계 저축률이 더 하락할 여지가 있어 민간 소비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들에서는 GDP 성장률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1.9%로 전망되어 팬데믹 이전 기간에 비해 완만하지만 잠재 성장률 추정치와 대체로 일치할 전망
- 비OECD 국가들에서는 성장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시아 신흥국이 계속 세계 성장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일 것으로 전망됨(그림 Ⅰ-5, 패널 B)

[그림 Ⅰ-5] 세계 성장은 계속 안정적일 전망

(단위: %, %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7.

○ 중앙은행들은 물가상승률이 계속 하락하고 노동시장 압력이 완화됨에 따라 통화정책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됨

- 대다수 국가에서는 2026년에 실질 금리가 중립 금리 추정치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동시에 2025년과 2026년에는 많은 OECD 국가들에서 재정정책이 긴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성장에 일부 완만한 역풍이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재정 및 통화 지원이 예상되지만, 브라질, 인도, 그리고 몇몇 주요 신흥국들에서는 2025년과 2026년에 재정정책은 더 긴축되지만 정책금리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개별 주요국 및 지역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음

- (미국) 2024년 2.8%, 2025년 2.4%, 2026년 2.1%로 견고한 성장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부분적으로 최근의 많은 이민 유입으로 인해 잠재 생산이 확대된 결과임
  - 경제활동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면서 민간 소비 성장세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인 통화정책 완화가 투자를 지원할 것이지만, 일부 차입자들이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재차입해야 하는 상황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임
  - 물가상승률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헤드라인 물가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와 일치할 것으로 전망됨
- (캐나다) 2024년에 1.1%, 2025년과 2026년에는 모두 2%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기업 투자의 회복이 예상됨
  - 미국과 같이 물가상승률은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까지 헤드라인 물가상승률과 근원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와 일치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2025년 1.5%로 급반등했다가, 2026년 0.6%로 하락할 전망
  - 2025년은 실질 임금 상승, 이윤 증가, 재정 보조금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촉진
  - 2026년에는 더 긴축적인 거시경제 정책 조합으로 인해 GDP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0.6%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에 약 2%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2024년 2.3%, 2025년과 2026년 모두 2.1%로 성장할 전망

- 강한 내수가 경제 성장세를 뒷받침

-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에 약 2%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유로지역) 2024년 0.8%에서 2025년 1.3%, 2026년 1.5%로 상승할 전망

- 2026년 말까지 유휴 생산능력이 결국 소멸될 것으로 예상됨

- 정책금리 인하와 회복·복구 기금(Recovery and Resilient Facility) 지출이 투자를 지원할 것이며, 민간 소비 성장은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추가적인 물가상승률 하락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일부 회원국들에서는 재정 긴축 기조가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9%에서 2025년 2.4%, 2026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2024년 0.9%, 2025년 1.7%, 2026년 1.3% 성장 전망

- 높은 세부담에도 불구하고 실질 소득 증가와 10월 말 발표된 공공지출 증가가 경제활동을 지원

-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 3.7%에서 2025년 2.8%, 2026년 2.3%로 하락할 전망

■ (중국) 2024년 4.9%에서 2025년 4.7%, 2026년 4.4%로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소비 성장률은 안정적이겠지만 여전히 높은 예비적 저축과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약세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물가상승률은 낮게 유지될 것임

- 투자 성장은 통화정책 완화와 정부지출 확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임

- 11월에 지방정부 특별 채권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고, 최근 발표된 부양책이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인도) 공공 인프라 지출 급증과 강한 민간 소비 성장 지속에 힘입어 2025-26 회계연도 및 2026-27 회계연도에 7%에 근접하는 실질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에 중앙은행 목표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 2024년에 5.1%, 2025년에 5.2%, 2026년에 5.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민간 소비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업 경기 심리 개선, 낮은 물가상승률 지속, 금리 하락으로 투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5년과 2026년에 중앙은행 목표와 일치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 2024년 1.4%, 2025년 1.2%, 2026년 1.6%로 완만한 성장이 전망됨

- 2025년의 상당한 재정 긴축이 성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임

- 2025년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하락해 소비를 뒷받침하겠지만, 공식부문의 일자리 창출 둔화가 가계 지출을 제약할 것으로 보임

■ (브라질) 2024년 3.2%, 2025년 2.3%, 2026년 1.9%로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높은 정책금리에도 불구하고 강한 고용 창출과 임금 상승이 2025년에 강건한 가계 소비 증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 통화정책 완화가 2025년 중반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나, 물가상승률은 2025년 하반기까지 4%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 2023년 부진 이후, 연간 세계 무역량 성장률은 2024년 3.5%, 2025년 3.6%로 개선된 후 2026년 3.5%로 다시 둔화될 전망

■ 신흥국 간 무역 확대와 주요 선진국 및 신흥국들의 투자와 소비 성장세 개선이 이러한 지속적인 확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임

■ 무역 성장세는 유럽의 무역 회복세 덕분에 지역 간 더욱 균형적일 것으로 전망됨(그림 Ⅰ-6, 패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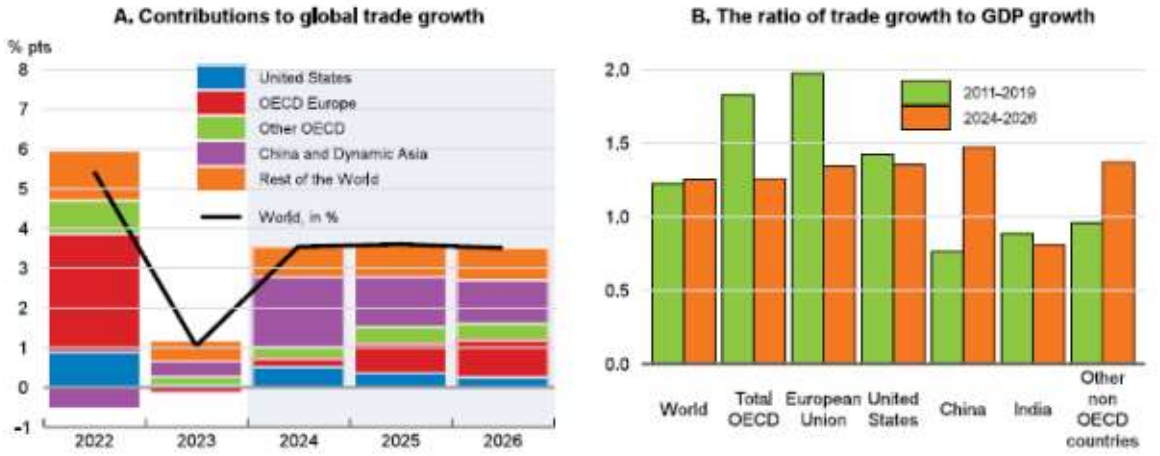
■ 2024~2026년 세계 성장의 무역 비중(trade intensity)은 팬데믹 이전 10년 평균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그림 Ⅰ-6, 패널 B)

- 선진국, 특히 유럽에서는 무역 비중이 일반적으로 낮은 반면, 중국 및 일부 신흥국에서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향후 2년 동안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6] 세계 무역 비중은 계속 안정적일 전망

(단위: %p, 비율)



주: 무역량은 수출입 거래량의 평균에 기반. 패널 B의 무역 탄력성(trade elasticity)은 경제성장률 대비 무역 성장률의 비율로 계산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8.

○ 세계 경상수지 균형은 2024년과 비교해 2025~2026년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과거의 무역 정책 제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수요의 수입 비중(import intensity)이 안정화되면서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24년 3분기의 급격한 증가 이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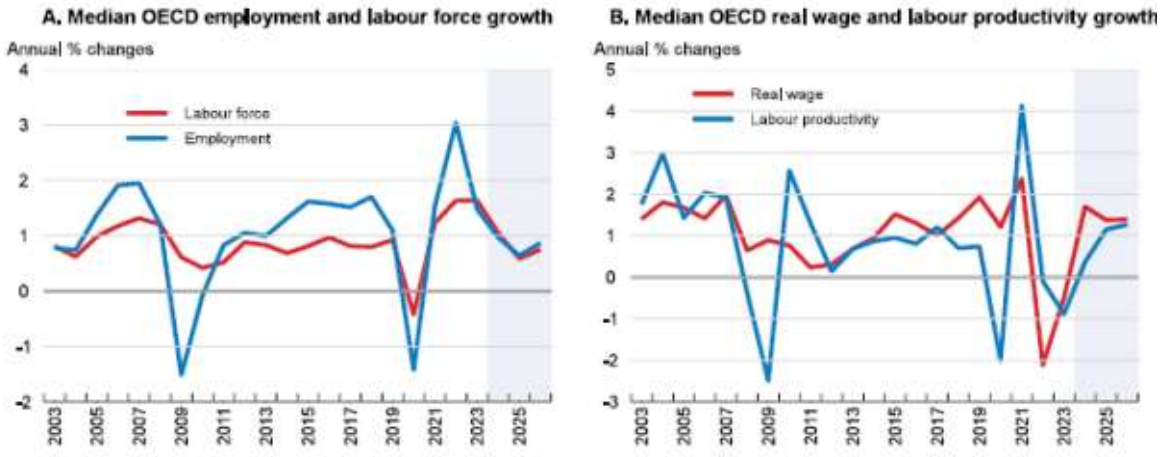
○ OECD 국가들의 고용 성장률은 회복력을 유지하겠지만, 향후 2년간 다소 둔화될 전망임

- OECD 중위 국가에서 연간 고용 성장률은 2023~2024년 평균 1.2%에서 2025~2026년에는 평균 0.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그림 Ⅰ-7, 패널 A)
- 브라질과 같은 일부 신흥국에서도 최근의 강력한 고용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임
- OECD 중위 국가에서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최근의 매우 빠른 속도에서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민 유입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고용 증가가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7] 경제활동인구 증가세 약화에 따라 고용 성장은 완화될 전망

(단위: 연간 % 변화)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19.

- **향후 2년간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는 동시에 노동시장 압력 완화로 명목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도 완화될 것으로 보임(그림 Ⅰ-7, 패널 B)**

  - OECD에서는 단위 노동 비용 증가율이 2024년 4.1%에서 2025년 2.6%, 2026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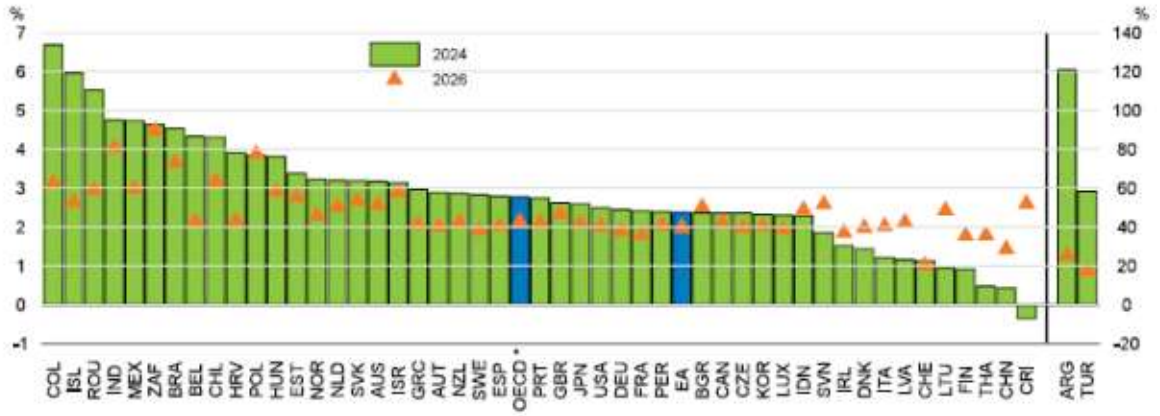
    - 이는 특히 서비스부문에서 물가 상승압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임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는 선진국 및 신흥국에서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의 추가적인 감소가 예상됨(그림 Ⅰ-8)**

  -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의 물가상승률은 2026년에도 두 자릿수를 유지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Ⅰ-8] 물가상승률은 목표로 복귀할 전망

(단위: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상승률,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20.

4. 위험

가. 지정학적 위험과 정책 불확실성이 심화됨

○ 지정학적 위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중동 지역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시장 재평가를 초래하고 세계 에너지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음

■ 현재 세계 석유시장 공급은 충분해 보이지만, 에너지 인프라에 손상이 발생하면 시장 균형이 깨지고 투자자들이 세계 경제 전망을 재평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 기준선 경제 전망은 예측 기간 동안 에너지 및 식품 원자재 가격이 안정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상치 못한 급격한 유가 상승은 실질 소득 감소와 금융여건 긴축으로 소비 지출과 투자에 타격을 주어 세계(특히 석유 수입국) 물가상승률을 크게 높이고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OECD, 2024a)

■ 이러한 영향은 석유 공급이 중단되거나 해운 및 기타 운송 인프라가 손상될 경우 더욱 심화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 무역량의 약 30%와 액화천연가스 무역량의 20%를

운송하는 경로로, 이러한 물량을 시장에 공급할 대체 수단이 없음

-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이 손상될 경우, 지난 1년 세계 유조선시장에서 발생한 교란[1]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경제 대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또 다른 주요 하방위험임

■ 최근 몇 달 동안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증가했으나, 아직 2018~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않음

■ 보다 광범위하게는, G20 국가에서의 수입 제한 조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WTO, 2024)

- 이 조치들은 현재 G20 수입의 12.7%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2015년 범위의 3배 이상임

■ 최근 몇 년 동안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투자 정책 개혁도 증가해(OECD, 2024d), 국경 간 투자에 장벽을 만들고 있음

■ 더 높은 불확실성과 무역 제한 조치의 지속적인 증가는 비용과 가격을 상승시키고 투자를 저해하며 혁신을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성장을 낮출 수 있음

- 특히 주요 신성장 분야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및 소유권 제한을 통해 경제를 탈동조화하려는 정책 노력이 심화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흥국들이 무역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속도와 세계 생산성 성장률을 저해할 것임

나. 물가상승이 예상보다 더 지속적일 가능성이 있음

○ 기준선 전망에 따르면, 2025~2026년 생산성 증가와 임금 상승세 완화에 따른 단위 노동비용 둔화, 이윤율 감소로 인해 근원 및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하락

■ 이로 인해 기조적 물가상승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예상보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야기할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있어, 중앙은행들이

1) 2024년 이란-이스라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으며, 이란이 일부 선박을 나포하고 해협 봉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현재 가정된 수준만큼 통화정책을 완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서비스 물가상승률 하락은 과거 물가상승률 국면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Amatyakul, Igan and Lombardi, 2024),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물가상승률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려면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연간 3%p 하락해야 하며, 유로지역, 미국, 일부 중유럽·동유럽 국가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1%p 이상 하락해야 함
- 다만,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에서는 현재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이미 물가상승률 목표와 일치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서비스 대비 상품 가격 비율이 팬데믹 이전 추세로 되돌아간다면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많은 서비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동 집약도를 가지므로, 근로자의 기술 수준이 피고용자의 수요 변화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노동력 부족이 재발하면서 노동비용과 물가 상승압력이 가중될 수 있음
- 주택 투자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나타난 주택 공급 성장세 약세가 예상보다 더 지속적인 주택 비용 물가상승률로 이어질 수 있음

○ 무역 제한 조치로 수입 비용 혹은 세계 해운 비용이 상승할 경우 상품 물가상승률 역시 현재 낮은 수준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 기준선 전망은 해운 비용이 2023년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음
- 해운 비용이 지속적으로 100% 추가 상승할 경우, 2025~2026년 OECD 물가상승률이 0.14%p 더 상승하고, 신흥국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다. 하방 충격은 금융시장에서 위험 재평가를 초래할 수 있음

○ 높아진 금리에 대한 조정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차입 금리가 계속 재조정되고 저수익 채무가 만기되어 가계 및 기업 신규 대출로 대체되고 있음

■ 일부 시장 부문에서는 자산 평가가 과도하게 평가되어 위험 프리미엄이 낮고 일부 차입자의 신용 등급이 악화되고 있음

■ 성장 전망의 하방 충격이나 물가상승률이 예상 하락 경로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주식 및 회사채시장의 급격한 가격 재조정과 변동성 증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음

- 2024년 8월 초 시장 변동은 이러한 가격 재조정 위험을 상기시키는 사례 중 하나였음

○ **과대 평가된 주식시장과 채무 수준이 높은 회사채 시장이 체계적 위험 및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 있음**

■ 주식 평가 가치는 여전히 많은 국가 및 부문, 예를 들어 기술 및 보건의료부문에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기업 수익의 미래 성장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일 가능성도 있음(BIS, 2024)

- 높은 주식 가치와 일부 개별 기업에 집중된 주식시장 평가 구조는 이러한 기업에 대한 특이적 충격이 체계적 충격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높임(ECB, 2024c)

■ 회사채 시장도 높은 채무 수준과 재융자 필요로 인해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점차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음

- 회사채 잔액의 약 30%가 2026년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임(OECD, 2024c)

- 부도율은 증가했으나, 일부 전망에 따르면 이미 정점을 찍었을 수 있음(S&P Global Ratings, 2024a)

  • 다만, 가장 위험한 차입자들에 대한 하방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음

라. 다양한 금융중개기관 간의 상호 연결성이 파급 위험을 더욱 확대

○ **비은행 금융중개기관(non-bank financial intermediaries; NBFI)의 자산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주요 선진국에서 NBFI 자산이 은행 자산을 초과했음**

■ NBFI에는 다양한 유형의 금융기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은행보다 규제가 느슨해,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금융 곤경에 취약해질 가능성을 높임

■ NBFI 간, 그리고 은행과의 상호 연결성은 하나의 시장 부문에서 발생한 취약성이 다른 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높여 파급 위험을 증가시킴

- 특히 레버리지가 높고 유동성이 낮은 경우, 위험노출 집중, 변동성 증가와 결합된 자산 가격 재조정이 비은행 금융기관의 회복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ECB, 2024c)

■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마진콜 충족을 위해 레버리지 포지션을 자산 매각이나 머니마켓펀드의 유동성 인출로 해결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변동성 확대와 자산 가격 하락, 부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신용 등급이 악화되거나 변동성이 급등할 경우 은행은 NBFI로부터 부실 대출 증가와 예상치 못한 예금 인출에 직면할 수 있음

■ 은행에 예치된 NBFI 예금은 유동성 완충자본 역할을 하지만, 상환 요청과 현금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음(ECB, 2023)

■ 2023년 기준, NBFI에 대한 위험노출액은 미국, 호주, 유로지역 은행 자산의 각각 17%, 15%, 8%를 차지했음

■ 은행과 NBFI 간 국제적 연결성도 지난 10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음

- 이는 해외 NBFI의 취약성이 국내 은행으로 파급될 위험을 증가시킴

- 빠르게 성장하는 사모 신용시장은 은행과 NBFI 간 연결성과 잠재적 위험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임

○ 다양한 NBFI 간 연결성 확대는 시장이 크게 조정되거나 큰 손실이 날 경우 파급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음

■ 예를 들어, 호주와 미국의 투자 펀드는 부채의 각각 72%와 28%를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조달

- 이는 투자 펀드가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심리 변화와 자산 배분 선호도의 급격한 변화에 취약하게 만들어, 투자 펀드에서의 유동성 압력을 잠재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투자 펀드와 기타 금융중개기관의 손실은 기관 투자자와 머니마켓펀드에도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의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머니마켓펀드의 상환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음

마. 상업용 부동산 가격 하락이 금융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

○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022년 중반부터 많은 국가와 일부 시장부문, 특히 사무실 건물에서 하락세를 보여 왔음

- 금융중개기관의 상업용 부동산 위험노출액은 지난 10년 동안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비은행 금융기관의 다양한 위험노출액 비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했음(Roulet, 2024)
- 긴축된 금융여건과 낮은 수익성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채무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무실 담보대출을 포함한 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 임대료, 신용 등급의 하락은 은행의 부실 대출 비율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투자 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과 같은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의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음

- 이러한 손실은 REIT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투자 펀드로 전이되어 투자 펀드로부터의 상환을 유발할 수 있음
- REIT 지분의 급매는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시장에서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증폭시키고, 금융 제도의 다른 부분으로 스트레스를 전이시키며, 실물 경제로의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음
- 또한, 기관 투자자들은 직접적인 상업용 부동산 대출, 채권 보유, 부동산 투자 펀드와의 상호연결을 통해 연쇄적인 손실에 노출될 위험이 있음

바. 하방위험이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음

○ 올해 견고한 성장, 개선된 물가상승률 전망, 강화된 재정 및 통화정책 체계에 힘입어 신흥국의 자본 유입이 증가했음(Hardy et al., 2024)

- 주요 선진국과 많은 신흥국 간의 정책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투자자 인식 변화도 포트폴리오 자본 유입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음

- **이처럼 비교적 긍정적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신흥국과 선진국 간(특히 미국) 예상 금리 차이가 급격히 축소되거나 지정학적 위험이 더 증가할 경우, 자본 유입이 크게 약화되고 환율에 대한 잠재적인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특히 높은 국가 채무와 스프레드, 그리고 달러 표시 채무 비중이 높은 국가들은 상당한 통화 가치 하락이나 자본 유출이 발생할 경우 금융 변동성에 취약
  - 지난해 여러 국가의 통화는 하방 압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물가상승률, 평균 이하의 신용 등급, 또는 미국과의 비교적 높은 신용 스프레드를 보이는 국가에서 이러한 압박이 두드러졌고, 2024년 8월 캐리 트레이드 포지션의 청산은 이러한 압박을 더욱 가중시켰음

- **2023년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의 총 정부 채무는 GDP 대비 69%로 증가했으며, 2026년까지 평균 7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IMF, 2024b)**
  - 많은 저소득 국가들은 상당한 채무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새로운 자금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높은 금리와 달러 강세는 채무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주고, 성장 촉진 부문을 포함한 투자에 사용될 자원을 감소시키고 있음
  - 저소득 국가의 총채무는 2023년 말 GDP 대비 53.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균적으로 이자 비용은 정부 수입의 10%를 초과(IMF, 2024b and World Bank, 2024)
  - 2024년에 채무 곤경 위험이 높거나 이미 채무 곤경에 직면한 저소득 국가의 비율은 50%를 초과

- **또 다른 잠재적 위험은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신흥국에서 정부와 국내 은행부문 간의 상호 연계가 심화된 점임**
  - 평균적으로 국내 은행이 보유한 국가 채무 비중은 2004년 20%에서 2024년 중반 거의 30%에 도달
  - 지속가능하지 않은 정부 채무 수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는 국가 채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은행부문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상당한 악화가 발생할 경우, 더 엄격한 차입 제약은 묵시적 또는 명시적 보증을 통해 은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은행의 스트레스를 더욱 증가시키고 신용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사. 중국 경제의 경기 강세가 여전히 불확실

○ 현재 중국 전망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

■ 중국의 경제 동향은 세계 성장 전망에 매우 중요

- 중국 경제는 2024년 세계 경제성장의 1/4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과 2026년에도 비슷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GDP 성장률이 전망치보다 1%p 낮아질 경우, 세계 성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약 0.2%p로 추정되며, 금융여건 긴축과 원자재 가격 약세를 통해 추가적인 간접 영향도 발생할 수 있음

■ (하방위험) 신용 충격, 부동산부문 불균형, 세계 무역 제약 증가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용 충격은 부동산부문의 질서 있는 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으며, 이는 일부 금융부문에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소비자 심리를 약화시킬 수 있음

- 부동산부문에서 수요 측 제약을 과도하게 완화할 경우 일시적으로 성장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이는 불균형을 더 심화시키고 미래에 더 급격한 조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세계 무역 제약이 증가하면 수출 성장과 산업 활동이 둔화될 수 있음

■ (상방위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이 성장을 높일 수 있음

- 반대로, 계획된 확장 재정과 함께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공공 지출의 영향을 높여 예측보다 강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음

- 또한, 최근의 상당한 통화정책 완화로 인한 가계의 모기지 이자 부담 감소는 소비 성장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음

아. (상방위험) 긍정적인 충격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인들도 존재

○ 향후 2년 동안 여러 불확실성 요인들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 중동 분쟁의 빠른 완화는 세계 정책 불확실성과 에너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음
- 현재 세계 석유시장의 기초 여건은 OPEC+ 회원국들이 2024년 말 감산 조치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세계 석유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할 것으로 나타나 유가 하락 압력을 시사(IEA, 2024a)
- 또한, 세계 해운의 수에즈 운하 재개는 세계 무역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운송비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가계 저축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경우 내수 성장이 더 강해질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팬데믹 발생 후 축적된 초과 저축이 주로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 가계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속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가 빠르게 회복된다면 가계 저축률이 전망보다 더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실질 주택 가격 또는 주식 가격 상승으로 가계 부가 증가하면 가계 저축률이 하락할 수 있음
- 이는 수요 성장을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미래 물가 상승압력이 예상보다 강해질 가능성도 내포

○ 긍정적인 공급 충격은 잠재 성장을 높이고 현재 전망보다 빠른 경제 확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투자 최소 수익률(hurdle rate)이 낮아지는 등 금융 여건이 개선되면 민간 투자 성장이 빨라질 수 있음
- 또한, 노동시장 참여율이 예상보다 더 크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특히, 많은 선진국에서는 지속적인 강한 이민 유입이 이러한 시나리오를 뒷받침할 수 있는데, 이민자들은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연령에 속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노인, 청년, 여성의 참가율을 더욱 높일 여력이 있음

5. 정책

가. (선진국 통화정책) 통화정책은 완화 여지가 있지만 신중함을 유지해야 함

○ 정책금리를 동결한 일본을 제외하고 최근 몇 달 동안 대부분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인하를 시작했거나 지속해 왔음

- 중앙은행들의 대차대조표 축소도 속도를 조정하며 진행되고 있음
-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긴축적이지만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음
- 선행 실질 금리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기준치보다 높음
- 과거 긴축 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친 누적 효과는 이제 정점을 지난 상태지만, 높은 금리에서의 채무 재융자가 진행되면서 여전히 많은 가계와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음
  - 특히, 정책금리 인상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규모로 재조정해야 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영향이 두드러짐

○ 물가상승률이 중앙은행 목표에 맞춰 완화됨에 따라, 정책금리 인하는 계속되어야 하지만 인하 시기와 폭은 근원 물가 상승압력이 지속적으로 억제되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

- 명목 임금의 성장 완화, 단위 이익의 재급등 부재, 서비스 부문의 물가상승률 하락 지속은 통화정책 완화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물가상승률 및 GDP 성장 전망하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주요 선진국에서 정책금리 인하가 2025년, 일부 국가에서는 2026년까지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Ⅰ-9)

- (미국) 연방기금금리의 인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1분기까지 금리는 3.25~3.50%로 낮아질 전망이며 물가상승률은 대부분 2%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보임
  - 2025~2026년 동안 채권 보유량은 추가적으로 감소할 전망이지만, 2024년 5월 발표에 따라 채권 보유 감축 속도는 다소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됨
- (유로지역) 정책금리 인하는 올해와 내년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말에는 수신금리가 2%로 낮아질 전망임

- 유로시스템(Eurosystem)의 채권 보유량 감축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부터 팬데믹 긴급 매입 프로그램(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 상환 재투자가 계획대로 종료될 것임

■ (일본) 근원 물가상승률이 약 2%로 안정되고 음(-)의 산출 갭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책금리는 2026년 말까지 1.5%로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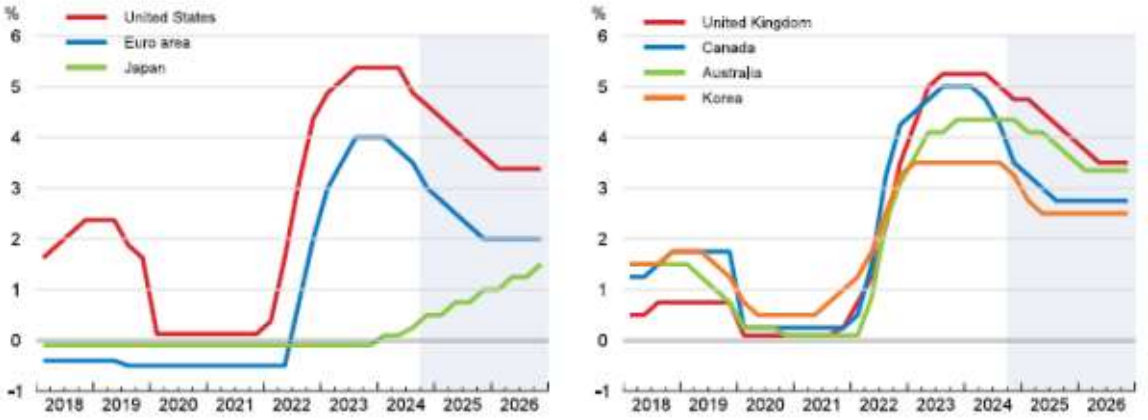
- 일본은행의 국채 매입액이 분기당 약 4,000억엔 감소함에 따라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액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캐나다와 한국에서는 정책금리 인하가 2025년 중반까지, 호주와 영국에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의 채권 보유량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Ⅰ-9] 정책금리는 점차 인하될 전망

(단위: %)



주: 좌측 패널의 미국은 연방기금금리 중간값, 유로지역은 수신금리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30.

○ 2026년 말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 정책금리[2]는 중립 실질 금리(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지도, 긴축적이지도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추정 구간 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이 시점에는 물가상승률이 대체로 목표치에 도달하고 대부분 국가에서 산출 갭이 거의 0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됨

2) 장기 균형에서의 단기 실질금리. 원문의 그림 1.31에서는 Holston-Laubach-Williams model estimate와 Lubik-Matthes model estimate 등을 사용해 국가별로 상단과 하단을 추정하고 실질 정책금리가 구간 내 포함되는지 판단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에 안착할 경우, 명목 정책금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큼

- 이는 경제가 예상치 못한 둔화를 겪을 경우, 전통적 통화정책수단을 활용할 여력을 증대시킬 것임

- 또한, 중립 금리가 현재 예상보다 높아질 경우(생산성 및 투자 강화를 위한 개혁,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투자 확대(Holzmann, 2024), 공공채무 공급 증가 등) 정책 여력이 더 커질 수 있음

○ **양적 긴축은 지금까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으며 금융시장 운영에 심각한 혼란도 없었음(BIS, 2024; Du et al., 2024; ECB, 2024b)**

■ 특히 양적 긴축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양적 완화와 비교해 훨씬 미미했음

- 양적 긴축이 시장 스트레스 시기에 발표되거나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 효과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적었기 때문일 것임

- 그러나 현재까지의 증거는 주로 정책금리 인상 시기에 국한됨

■ 정책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와 금융여건에 상반된 영향을 미치는 두 정책 목표(정책금리와 대차대조표)를 추구하는 데 따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한 의사소통이 필요

■ 중앙은행 준비금이 최적 수준에 도달했을 때 양적 긴축을 언제 완화하거나 중단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이며, 유동성 스트레스와 머니마켓 금리 변동성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Lopez-Salido and Vissing-Jorgensen, 2023)

■ 마지막으로, 양적 긴축과 상당한 재정적자가 공존한다는 것은 민간 투자자가 흡수해야 할 순 국채 규모가 단순히 재정적자로 인해 예상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시사

나. (선진국 재정정책) 정부는 지금이 재정을 강화할 적기임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해야 함

○ **각 정부가 발표한 조치와 OECD의 현재 계획 평가에 따르면, 여러 국가에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 긴축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선진국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 재정수지 중위 개선폭이 잠재 GDP 대비 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 대부분은 2026년에 나타날 것으로 보임

■ (미국) 2025년에도 정부 지출 대비 정부 수입이 크게 부족해 구조적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26년에는 완만한 재정 긴축이 전망되나 구조적 기초 재정수지는 GDP 대비 단 0.2% 개선될 것으로 보임

  • 이는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의 조세 감면이 대체로 연장될 것을 가정한 결과임

■ (유로지역) 잠재 GDP 대비 기초 재정적자는 2024년 1.7%에서 2026년 1.1%로 개선될 전망

- 대부분의 개선은 에너지 위기 지원의 대부분이 철회되는 내년에 진행

- 일부 주요국에서의 예산 복구 계획이 향후 2년간의 재정 긴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참고 Ⅰ-2)

- 국가 회복·복구계획(national recovery and resilience plans)의 지속적인 이행은 공공투자가 예산 삭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상당한 재정건전화, 스페인에서는 그보다 적은 수준의 건전화, 독일에서는 소폭의 재정 긴축만 이루어질 전망임

■ (일본) 2025년에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으로 구조적 기초 재정적자가 잠재 GDP 대비 0.3% 확대될 전망이며, 2026년에는 1.3%로 축소할 것으로 전망됨

- 새로운 경기 부양책에는 저소득층 현금 지급, 에너지 보조금 재개, 반도체 생산 및 연구개발 투자 지원이 포함됨

- 현재 계획된 정책에 따르면, 국방비와 아동수당을 확대할 예정이며, 이는 지출 개혁을 통해 일부 조달할 것임

■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에서는 2025~2026년 잠재 GDP 대비 1%를 초과하는 상당한 재정 긴축이 전망되는 반면, 스웨덴에서는 0.6%의 재정 확장이 예상됨

■ 호주에서는 생활비 지원 지속으로 내년 구조적 기초 재정수지가 약간 악화될 전망이며,

최근 연방 소득 지원 정책을 발표한 캐나다는 2025~2026년 재정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현재 계획에 따르면, 많은 OECD 국가에서 2년 후에도 여전히 기초 재정적자가 지속될 전망임

- 재정 불균형 개선이 더디면 채무 부담을 안정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임
- 프랑스,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규모 재정적자가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며, 남은 여력은 적당한 수준이거나 2025~2026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OECD 국가의 총 일반정부 금융 부채는 2026년 말 GDP 대비 117%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 이전보다 9%p 높은 수준임

○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에 대응 및 적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요구, 국방비 확대 계획 등으로 인한 재정 압력을 고려할 때, 채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억제 및 재배분과 수입 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이러한 조치는 신뢰할 수 있는 중기 계획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조정 속도와 방식은 국가별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 전망과 같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가 견고한 성장세 혹은 회복을 보이고 산출 갭이 줄어들거나 양(+)으로 전환된다면, 통화정책이 덜 긴축적인 기조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건전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주요국의 정책금리가 대부분 0 수준이었거나 그에 근접했던 과거 10년과 달리, 대부분 중앙은행들은 성장 둔화 시 정책금리 추가 인하를 통해 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정책 우선순위는 다양(OECD, 2024a)

- 많은 국가에서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적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은퇴 연령 상향 등 근로 지속을 장려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회정책 개혁도 필요하며, 복지 타기팅을 개선해야 함

- 병가 및 장애 관련 수당에 대한 조정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를 장려해야 함

■ 일부 국가에서는 보건 체계 개혁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 지출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

■ 많은 국가에서 재정 상태가 긴축되어 있어 장기 성장을 지원하는 부문으로 지출을 재배분해야 함

○ 조세정책에서는 세수 확보 노력이 필요

■ 세제 개혁은 세원 확대와 왜곡적인 조세지출 제거, 이와 동시에 간접세 수입을 비례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많은 국가들은 소비세, 부동산세, 탄소 배출세, 에너지 사용세 등에서 세수를 증대할 여지가 있음

- 이러한 세금은 임금 및 사업 소득 과세에 비해 경제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은 경향이 있음

■ 세무 행정 및 납세순응(compliance)을 개선하면 세수 확보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

○ 건전한 재정 체계는 재정건전화를 유지하고 재정 계획의 신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재정정책 수행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요

■ 독립재정기관의 감시 및 분석, 재정수지 및 채무에 대한 수치적 준칙은 연간 예산 계획을 중기 목표와 일치시킬 수 있도록 도움

■ 예산 과정에 통합된 지출 검토는 정부가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고 공공 자원 사용 과정에서의 상충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금리 하락은 미래 채무 조달 비용의 잠재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는 각국의 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임

■ 채무 상환 비용은 2021년 이후 이미 상당히 증가했으며 대부분 국가에서 2025~2026년에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그림 Ⅰ-10) 만기 도래 채권의 발행 당시 금리보다 현재 금리가 더 높기 때문임

■ 일부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이 자산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적자를 조달해야 하며, 이는 국내 민간 투자자나 해외 구매자가 흡수해야 할 공공채무의 양을 증가시킬 것임

■ 채무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재정건전화 계획이 결여될 경우, 투자자 수요를 유지하기 위해 더 높은 국채 수익률이 요구될 수 있음

- 이는 공공채무 신규 발행 비용에 대한 통화정책 완화 효과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음

[그림 Ⅰ-10] 정책금리 인하가 공공 채무 상환 비용을 낮추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

(단위: 공공채무에 대한 이자지출, GDP 대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32.

[참고 Ⅰ-2] EU의 재정준칙 개혁

○ 올해 EU의 재정 준칙 체계 개혁안이 발효됨

■ 국가 재정정책이 지속 가능한 채무 경로를 따르도록 설계됨

■ 국가가 계획에 대한 책임을 개선하는 동시에,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 EU 회원국은 정부 지출 경로(조세 정책 변경 및 기타 조정 제외)를 명시한 중기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공공채무(GDP 대비 60% 이상인 경우)를 낮추거나 채무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현재 낮은 경우)과 합치해야 함

■ 재정건전화가 필요한 경우 요구 사항은 채무 지속 가능성(debt sustainability analysis)에서 평가한 위험에 따라 국가마다 다름

- 그러나 적자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는 이전 요구 사항은 그대로 유지되며, 적자 및 채무 감축 속도에 대한 최소한도를 설정하는 수치적 보호 조치가 있음
- 중기 계획은 4~5년을 포괄해야 하며, 계획 기간 동안 또는 정부가 바뀔 때까지 유지되어야 함
- 준칙에는 유로지역 전체 재정 총량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지 않지만, 유럽 재정위원회는 유로지역 전체의 적절한 재정 기조에 대한 조언을 제공
- 연간 감시는 회원국의 진행 상황을 중기 계획과 비교하여 점검하며, 이는 합의된 투자 및 개혁을 수행하는 고채무 국가에 대한 장기 조정 기간(최대 7년)을 고려할 수 있음

○ EU 주요 국가들이 재정수지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새로운 재정 체계 시행은 공공 채무가 높은 국가들에서 초기 과제가 될 수 있음

- 공공채무가 GDP 대비 60%를 넘는 EU OECD 국가의 2025~2026년 구조적 기초 재정수지의 중위 개선은 잠재 GDP 대비 0.3%인 반면, 채무가 낮은 회원국의 경우 0.1% 개선
- 지속적인 예산 불균형에 시달리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2025년과 2026년 구조적 기초 재정수지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 이미 구조적 기초 재정적자가 작은 독일은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와 벨기에도 2026년에 GDP 대비 90%를 초과하는 공공채무와 상당한 기초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향후 2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건전화를 필요로 하는 GDP 대비 3% 임계값에는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상
  - 공공채무 하락 전망은 EU 보호 조치에서 요구하는 연 평균 최소 1% 감소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

○ 일부 고채무 국가의 경우 유럽 재정 준칙을 준수하려면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음

- 지출을 상당히 억제하거나 세금을 인상(또는 둘 다)하려면 정치적, 대중적 합의가 필요

■ 또한 재정 조정이 가능한 한 성장 친화적이어서 경제에 미치는 단기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성장 잠재력을 보존하는 것이 필수적

■ 과거 경험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국가의 GDP 대비 공공채무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OECD, 2023c; Pina et al., 2024)

다. (신흥국 통화·재정정책) 신흥국은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억제와 공공채무 지속 가능성 개선을 목표로 해야 함

○ 최근 몇 분기 동안 신흥국들의 통화정책 경로는 물가상승률과 환율의 이질적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다변화되고 있음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에서는 정책금리 인하가 지속되었으며,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시작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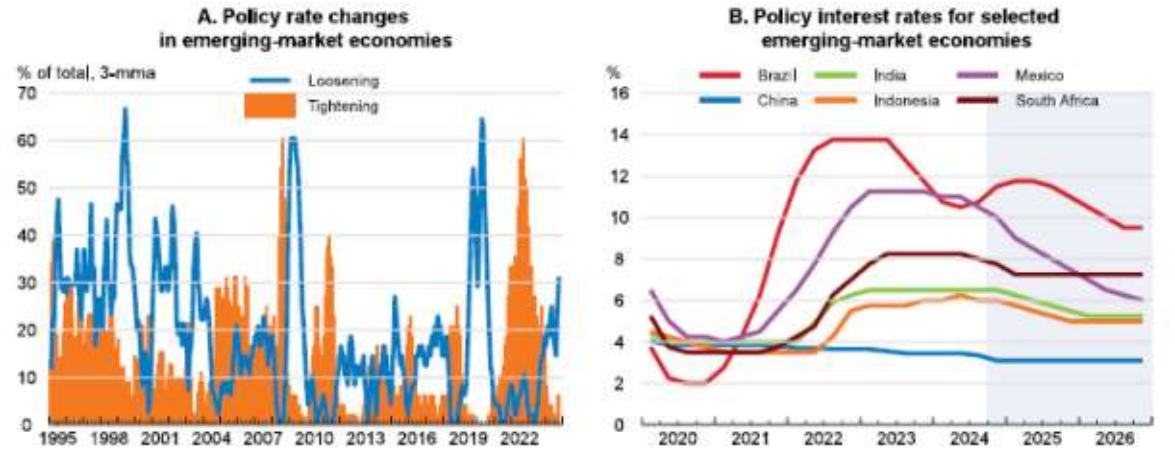
■ 반면, 인도에서는 금리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브라질에서는 강한 경제성장 속에서 물가상승률 상승세가 물가상승률 기대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하여 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었음

■ 중국에서는 부동산부문 지원과 경제 진작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의 일환으로 주요 정책금리와 지급 준비율이 추가 인하되었음

■ 이러한 국가별 다변화는 2021~2022년 물가상승률 상승 시기 대부분 국가들이 동시에 긴축 정책을 시행했던 점이나 과거 통화정책 완화 시기 금리 인하 동기화를 보였던 점과 상이(그림 Ⅰ-11, 패널 A)

[그림 Ⅰ-11] 통화정책 경로는 신흥국별로 다변화

(단위: % 비중, 3개월 이동 평균, %)



주: 패널 A는 해당 월에 정책금리가 인상 혹은 인하된 국가 수 비중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34.

- **향후 2년 동안 대부분 국가에서 정책금리를 낮출 여력이 있지만, 정책 입안자는 물가상승률이 그 목표에 장기간 안착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환율의 변화에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통화정책의 신중한 조정은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고정하고 파괴적인 자본 유출을 피하는 데 필수적임

  - 필요한 경우 물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늦추거나 심지어 일시적으로 반등시켜야 할 수도 있음

- **정책금리 인하 예상 속도는 국가별로 상이(그림 Ⅰ-11, 패널 B)**

  - (브라질)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몇 달 내에 명목 정책금리가 추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5년 중반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될 전망

  -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금리 인하가 2025년 말 또는 2026년까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정책금리는 각각 4.25%, 5.5%, 6%로 중립 수준에 근접할 전망

  -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함에 따라 완만한 금리 인하가 예상되며, 인도에서도 향후 2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서 금리 인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튀르키예)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금리가 2025년 1분기까지 5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물가 상승압력이 완화되면서 2026년 하반기까지 20%로 하락할 전망

○ 최근 재정 동향 역시 국가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 2023년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에서는 재정적자가 확대된 반면, 불가리아, 콜롬비아, 인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재정수지가 개선됨(그림 Ⅰ-12, 패널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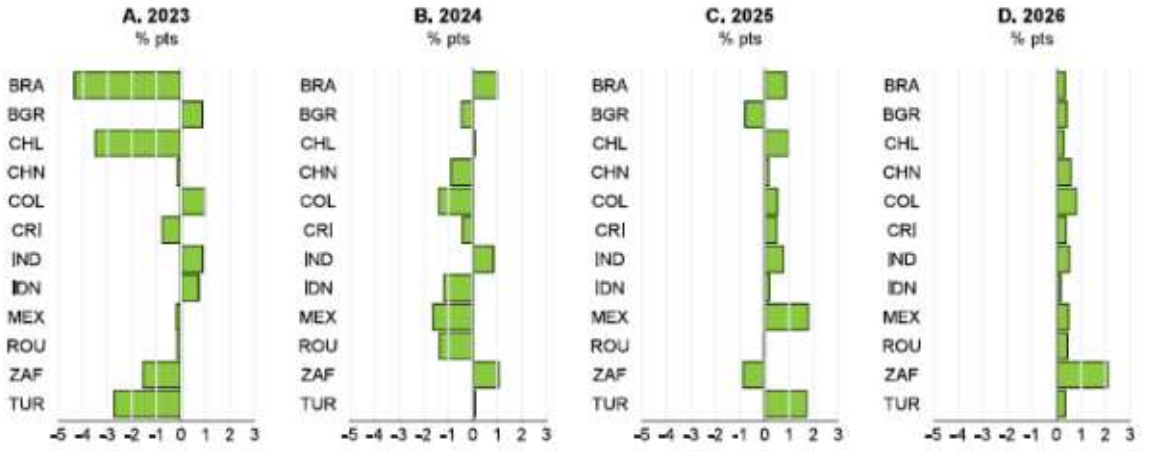
■ 2024년에는 중국 등 여러 국가에서 재정적자가 다시 증가하는 반면, 브라질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인프라 지출과 직접적인 소득 지원 조치에 따른 지출 확대, 대규모 지방정부 채권 발행, 지방정부 채무 상환 부담 완화 조치가 발표됨

- (브라질) 정책 기조가 여전히 확장적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금과 사회복지수당의 물가 자동 연동은 복지 지출에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전망임(그림 Ⅰ-12, 패널 B)

[그림 Ⅰ-12] 재정 동향은 신흥국별로 다변화

(단위: GDP 대비 정부 순차입 변화, %p)



주: 양수(+)는 재정수지 개선(적자 감소)을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35.

○ 발표된 재정 계획에 따르면, 대부분 국가에서 2025~2026년에 재정수지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그림 Ⅰ-12, 패널 C 및 D)

- (멕시코, 튀르키예) 2025년 GDP 대비 1.5% 이상의 재정적자 축소가 전망됨
  - 이는 두 국가의 공공 투자 축소(튀르키예의 경우 2023년 지진 관련 지출 감소 포함)와 함께 튀르키예의 세수 증가에 기인
- (브라질, 콜롬비아) 2025년 정부적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량 지출 축소가 필요할 수 있음
- (인도) 2025년에는 세수 기반 확대와 세수 증가에 힘입어 재정건전화가 진행될 전망임
- 2026년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재정건전화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정부적자가 GDP 대비 2%p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지출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조치가 필요

- 신흥국은 채무 증가와 채무 상환 부담 증가 등 선진국과 유사한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데다가, 인적 및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는 더 크며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불충분한 상황임
-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지출 효율성을 높이며 비효율적 조세 감면 축소와 세수 기반 확대 등 세수 증대 조치를 추진해야 함
- 비공식부문을 줄이는 개혁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재정건전화의 속도와 유형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높은 소버린 스프레드에 직면한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재정 신뢰도를 높이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단기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재정 준칙 및 재정 위원회 등 재정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는 자금조달 비용을 줄이고 재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음(Caldera Sánchez et al., 2024)
- 채무 구성 및 위험 노출에 대한 정보를 더욱 명확히 공개함으로써 재정 투명성도 개선해야 함

라. (구조개혁) 투자를 촉진하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은 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임

○ 잠재 성장률은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음

■ 최신 추정에 따르면, 2024년 1인당 잠재 성장률은 2002~2008년과 비교해 OECD 중위 국가에서 0.7%p, G20 신흥국 중위 국가에서 1.1%p 감소

- 이는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고 노동 기간이 연장되어 고용률이 약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현상임

■ OECD와 비OECD 국가에서 1인당 잠재 성장률 하락의 약 1/4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점진적 감소로 설명됨

■ 그러나 감소의 대부분은 노동 생산성을 구성하는 두 요소인, 노동자 1인당 자본 성장 둔화와 추세 노동 효율성 하락으로 인해 발생

- OECD 중위 국가에서 1인당 잠재 GDP 성장률 0.7%p 감소의 약 2/3는 노동자 1인당 자본 성장 둔화에 기인

○ OECD의 Going for Growth에서 권장하는 구조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1인당 잠재 GDP 성장 둔화가 덜 나타남

■ 지난 20년 동안 가장 많은 개혁을 단행한 국가 중 하나인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 OECD 국가 중에서 1인당 잠재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몇 안 되는 국가에 속함

- 심지어 이들이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기간에 더 큰 개선을 보였다는 점은 구조개혁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시사

○ OECD 잠재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인 자본 투자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

■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확산되는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이 필요

■ 공공 투자도 시장 실패가 큰 중요 분야에서는 유지되거나 강화되어야 함

■ 예측 가능한 재정 및 통화정책 체계를 갖춘 안정적인 거시경제 환경은 투자자 신뢰를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 조건임

■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도 필수적임

- 경쟁 친화적인 상품시장 규제는 이런 점에서 특히 중요하며, 생산성이 낮은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촉진하는 파산 제도와 자금 접근성 개선과 같은 정책을 통해 잠재력이 높은 기업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데 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것도 중요

■ 무역 개방성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벽을 제한하는 것도 경쟁시장을 지원하고, 해외로부터 새로운 기술을 이전받는데 기여

○ 장기적으로는 인구통계학적 추세가 잠재 성장률을 억제하는 주요 요인임

■ OECD에서 생산가능 인구 비율은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Guillemette and Château, 2023) 상당한 정책 개혁이 없을 경우, 이는 현재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악화시킬 것임

■ 세계 생산성 포럼(Global Forum on Productivity)의 2024년 노동력 부족에 관한 고용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15~35%의 기업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빈 일자리를 채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 이는 특히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에서 두드러짐(제Ⅱ장)

■ 이러한 부족의 원인은 부문과 국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일부 경우에는 노동집약적 직종에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다른 경우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이 부족하여 기술 불일치가 발생

  • 이는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함을 시사

○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노동시장 참가 유도, 노동 이동성 개선 등 정책이 필요(노동력 부족의 이해: 구조적 요인 분석은 제Ⅱ장, 국가별 권고는 제Ⅲ장, 그림 Ⅰ-13)

■ 강력한 기초 기술, 고용주 수요를 반영한 견습 프로그램과 직업 교육, 양질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및 훈련 정책을 통해 경제의 변화하는 기술 수요에 대응해야 함

-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면 중기적으로 디지털 전환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 동시에, 돌봄 부문에서의 수요 증가는 대인관계 기술 및 기타 소프트 스킬(soft skills) 개발을 지원하는 훈련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킬 것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업률이 여전히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특히 여성과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도록 유도해야 함

- 이런 점에서, 적절한 육아 지원과 육아 휴직, 세제·복지수당 및 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 노동 유인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이민 유입 정책을 개혁하여 필요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를 유치하고 이들이 경제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

■ 구조적인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노동 이동성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매칭을 개선해야 함

- 노동자가 자신의 기술과 관심사에 가장 잘 맞는 직업에 배치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상당한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Adalet McGowan and Andrews,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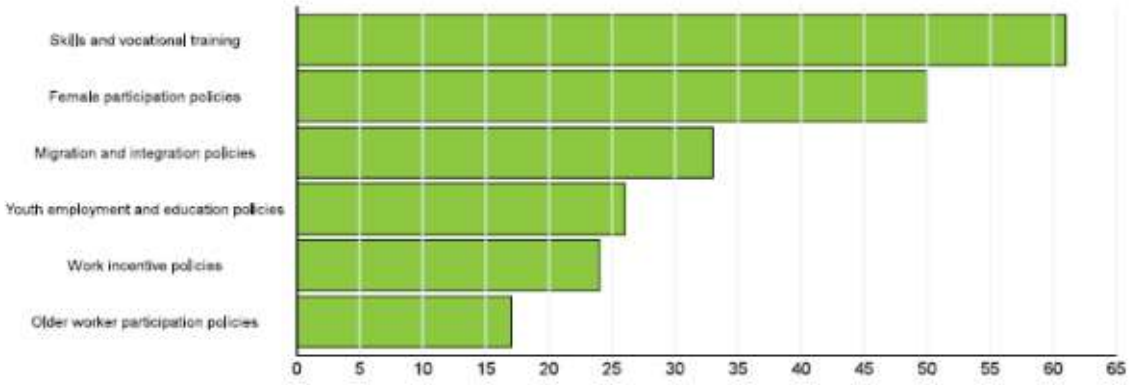
- 불필요한 직업 면허나 비경쟁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규제 개혁은 노동 이동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주택시장 규제나 고용 보호 법규가 직업 이동 또는 이전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Causa et al., 2021)

- 보건, 노인 돌봄, 교육과 같은 수요가 높은 부문에서는 임금 인상과 근로 여건 개선을 통해 직업의 질을 향상시켜 필요한 노동자를 유치하고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음

[그림 Ⅰ-13] 노동력 부족을 줄이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개혁이 필요

(단위: 각 범주별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가 있는 국가, 국가의 비율)



주: 정책 권고는 OECD Economic Outlook 2024년 12월호 국가별 챕터에서 가져온 것으로, 54개국을 대상으로 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2024 December*, 2024, Figure 1.38.

Ⅱ 노동력 부족 문제의 이해: 구조적 요인 분석

1. 서론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노동력 부족 문제는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상황

- 팬데믹으로 인한 고령 근로자의 이탈(Duval et al., 2022)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노동 공급이 약화되며, 노동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가중됨
- 최근 일부 OECD 국가에서는 구인율 감소와 실업률 소폭 상승으로 주기적인 노동시장 경색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임(제 I 장 참고)
- 그러나 보건, 정보통신 등 주요 산업에서는 노동력 및 기술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
- OECD 생산성 포럼(*Global Forum on Productivity*; GFP) 고용주 설문조사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며, 기업의 운영 기간, 생산성, 근로조건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함

○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인구고령화, 인공지능(AI)의 확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구조적·기술적 변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수요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확대와 전환 과정이 산업별 기술 요구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음(Dorville, Filippucci and Marcolin, 2024; Draghi, 2024)
- 공급 측면에서는 고령화, 이민자, 여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노력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 증가세는 여전히 둔화되고 있음
-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노동력이 고령화됨에 따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와 기존 근로자들의 보유 기술 간의 격차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기술 격차는 기술의 빠른 노후화와 교육효과의 저하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또한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이 근로자들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특히 숙박 및 요식업, 운송 및 물류, 건설, 보건 및 사회복지 등 주요 부문의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OECD, 2018a; Causa et al., 2022, 2024a)

○ **노동력 부족은 노동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 노동 탐색 마찰(labour search frictions), 기술 및 자격 불일치(mismatches)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그림 II-1[3])**

■ 노동력 부족은 특정 기술 도입에 필요한 숙련 인재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 혁신과 구조적 발전 속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근로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임금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현상은 기업의 독점적 고용권(monopsony)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장에서 두드러짐(Naidu and Dube, 2024)

○ **주기적인 노동력 부족은 완화되었으나, 구조적 부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여 노동 공급과 수요의 조정 및 매칭(matching)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 대응이 필요**

■ 근로자의 재교육(reskilling) 및 기술향상(upskilling)을 지원하며, 교육 및 평생학습 체계 개혁을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확대가 필수적

■ 학생과 근로자가 미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비기술적 역량(soft skills) 습득을 지원해야 함

■ 노동 이동성을 높이고 매칭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해야 하며, 기술 채택과 디지털·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 측면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근로자, 여성,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해 건강한 노화, 근로 환경 개선, 저렴한 보육 서비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조치가 필요

■ 또한, 직업 환경 개선은 특정 직업군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이민 정책과의 연계는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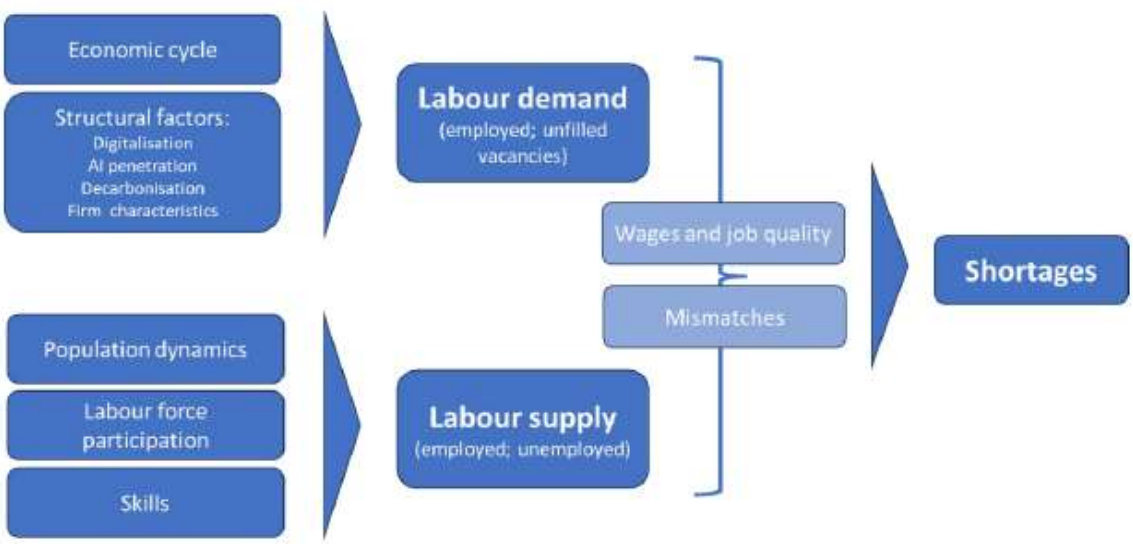
○ **제II장에서는 새로운 생산성 포럼(GFP) 고용주 설문조사 결과와 행정 데이터를 바탕으로 OECD 국가의 노동력 및 기술 부족의 강도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

3) 그림 II-1은 제II장의 분석결과를 해석하는데 활용되며, 요소 간 피드백 효과는 제외됨

방향을 제시

- 거시경제 및 부문별 데이터를 통해 최근 노동시장 동향을 검토
-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력 부족의 구조적 요인과 디지털화(인공지능 도입 및 친환경 전환 포함)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기업의 운영 기간, 생산성, 근로조건에 따른 차이를 분석
-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그림 Ⅱ-1] 체계화된 개념 구조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

2. 팬데믹 회복기 이후 안정세로 전환된 OECD 국가의 노동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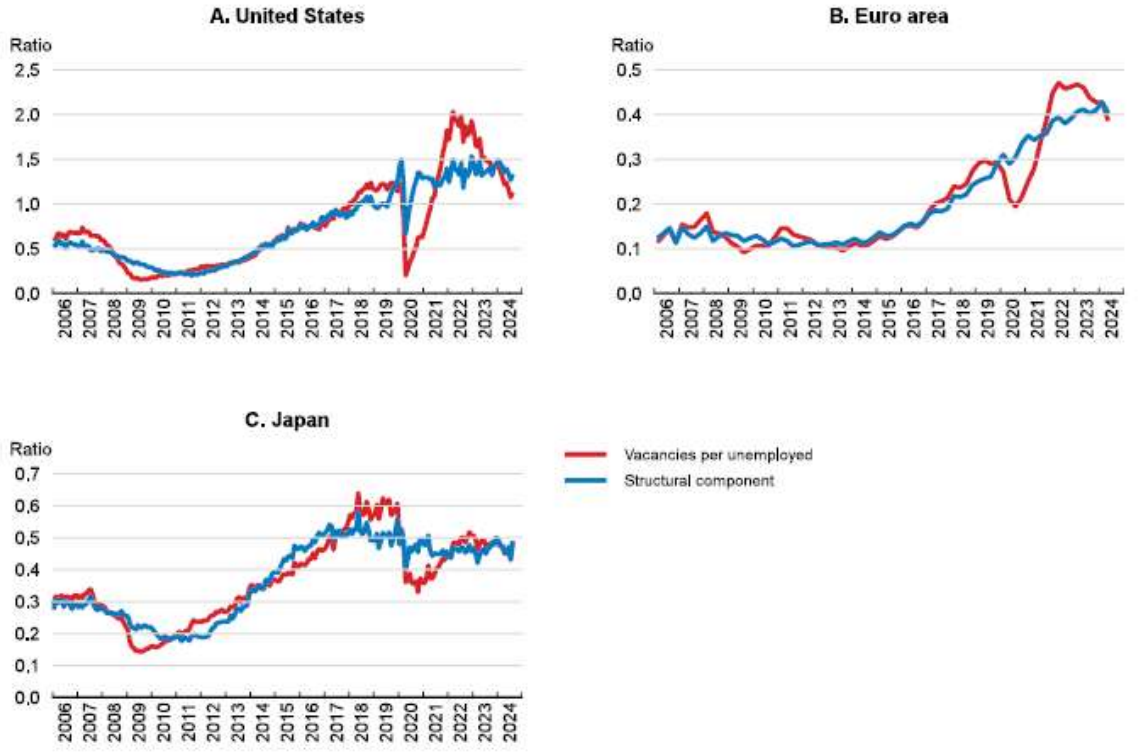
○ 노동력 부족의 대표적 지표는 실업자 수 대비 구인 건수의 비율임

- 팬데믹 회복기 동안 실업자 수 대비 구인 건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대규모 정책 지원, 기업의 노동력 유보, 노동시장 이탈, 근로시간 감소, 근로자의 선호도 변화, 재화와 서비스 간 수요 구조의 변화로 인한 기술 및 자격 불일치와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 기인(Causa et al., 2022, 2024a; Duval et al., 2022; Doornik et al., 2023)
- 2023년 말까지 미국, 유로존, 일본에서는 실업자 1인당 구인 건수가 팬데믹 이전 추세를 회복하며, 주기적 노동력 부족 문제는 완화된 것으로 보임(그림 Ⅱ-2)[4]

4) OECD 2024년 기업연합(BIAC) 경제정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림 Ⅱ-2] 주기적 노동력 부족 현상 완화

(단위: %)



주: 1. 실업자 1인 당 구인 비율의 구조적 구성 요소는 주기를 1.5년에서 8년으로 설정, Christiano-Fitzgerald filter를 사용하여 추정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

○ 베버리지 곡선(Beveridge curves)은 노동공급(실업률)과 노동수요(구인율)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현재 노동력 부족이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을 보여줌

■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로존에서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는 노동시장 매칭 효율성의 저하를 의미(그림 Ⅱ-3)

- (미국) 기술 및 자격 불일치 증가, 고용주의 채용 노력 감소, 장기 실업자의 비중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Barlevy et al., 2024)

- (유로존) 주요 원인은 기술 및 자격 불일치, 지역 간 실업률 차이로 확인됨(Consolo and Dias da Silva, 2019)

- (일본)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유사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구인 및 구직

여전히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2024년 응답자의 89%는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으며, 2023년 95% 대비 감소한 수치, 2024년 매우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로 2023년 58% 대비 크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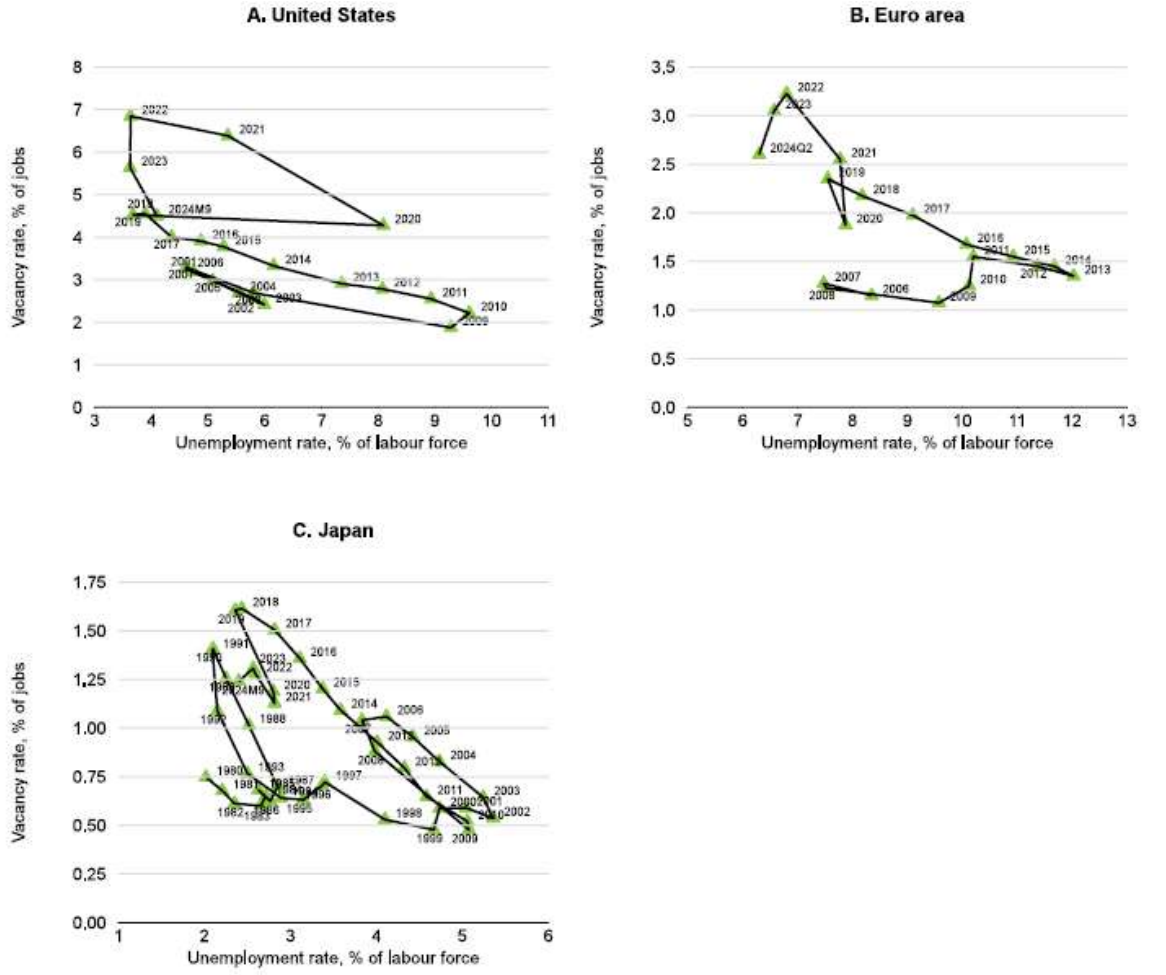
간 불일치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Shibata, 2013)

■ 팬데믹 초기와 회복기에 미국과 유로존에서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현재 구인율과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수렴

- 추가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국가 및 부문별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구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참고 Ⅱ-1)

[그림 Ⅱ-3] 세계 금융위기 이후 베버리지 곡선의 변화

(단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3

[참고 Ⅱ-1] 노동시장 타이트함: 구조적·경기적 요인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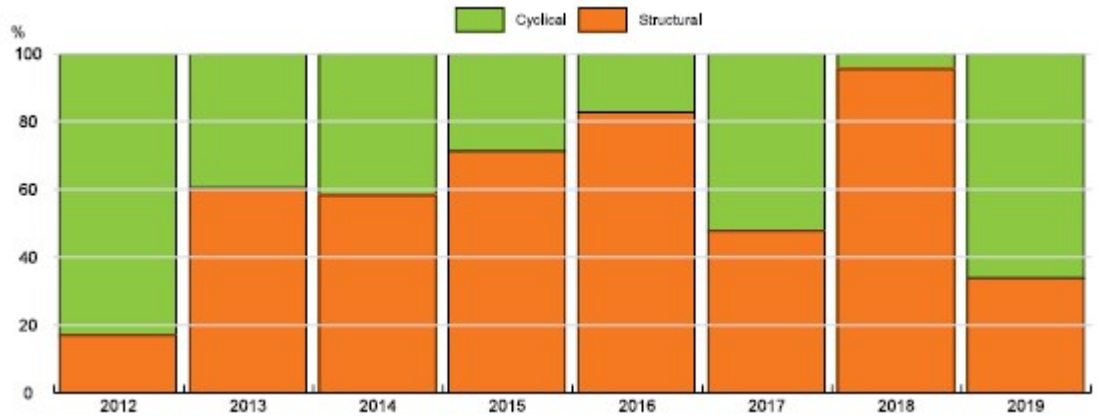
- **2010~2019년 동안 28개 OECD 국가의 부문별 노동시장 패턴을 분석하여, 고령화, 디지털화, 탈탄소화, 세계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의 구조적 요인이 노동시장 타이트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Dorville, Filippucci and Marcolin, 2024)**
  - 구조적 요인들은 생산량 격차와 같은 경제 주기를 나타내는 변수, 노동력의 기술 구성 변화, 국가 및 세부 산업 지표를 포함한 다른 요인들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분석됨

- **분석 결과, 디지털화 및 탈탄소화는 노동시장을 더 타이트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이미 작용하고 있으며, 고령화는 중기적으로 이러한 압력을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확인됨**

- **모든 구조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국가 간 공통적인 충격을 제외하더라도 국가 및 부문별 타이트한 노동시장 변동의 상당부분이 설명된 것으로 분석됨**

[참고 그림 Ⅱ-1-1] 지난 10년간 타이트한 노동시장 변동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구조적 요인

(단위: %)



주: 1. 이 그래프는 국가 및 산업별 노동시장 타이트함의 연간 변화를 생산량 격차, 인구 변화, 디지털화, AI 확산, 탈탄소화, 세계화 노출 지표, 그리고 시간 고정 효과를 변수로 사용한 회귀 분석을 통해,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노동시장 타이트함의 분산에 기여하는 비율을 나타냄
2. 데이터는 OECD 28개국(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을 대상으로 함
3. 모든 OECD 국가를 포함하지 못한 이유는 산업별 구인 및 실업자 데이터의 가용성에 제약이 있기 때문이며, 특정 구조적 변화에 대한 산업별 최신 데이터가 부족하여 분석 기간을 최근으로 업데이트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4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노동시장 타이트함의 주요 원인은 구인율(노동 수요)의 증가였으며, 실업률(노동 공급) 감소도 일부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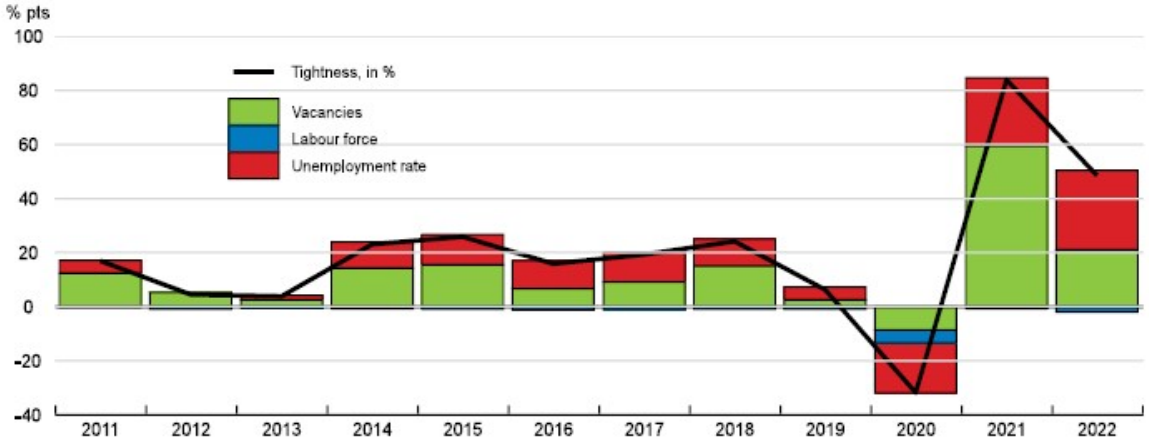
■ (노동 수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노동 수요는 강세를 유지했으나, 팬데믹 회복기에는 구인율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안정됨(그림 Ⅱ-4)

■ (노동 공급) 팬데믹 초기 감소했던 노동력 참여율은 대부분 OECD 국가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며 2010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임(그림 Ⅱ-5)

-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고령 근로자의 참여율은 많은 국가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이민 증가도 일부 국가에서 노동 공급 확대에 기여

[그림 Ⅱ-4] OECD 국가들의 노동시장 타이트함의 주요 요인: 구인율 증가

(단위: %p)



주: 1. 연간 성장률
2. 국가별 가중 평균(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포함)
3. 이 그림은 노동시장 타이트함의 연간 변화를 구인율, 노동력 참여율, 실업률로 나타내며, 타이트함 증가의 여부에 따라 각 요인의 기여도가 표시됨.(실업률 감소는 노동시장 타이트함을 강화하는 경우 긍정적 기여로 간주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5

[그림 Ⅱ-5] 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한 노동력 참여율

(단위: 노동 참가율 변화 %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6

○ 노동수요 증가는 산업 부문별 변화에서 노동시장 타이트함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서비스 등 고숙련 부문은 저숙련 부문보다 노동 수요 변화에 따른 영향을 더 크게 받음(그림 Ⅱ-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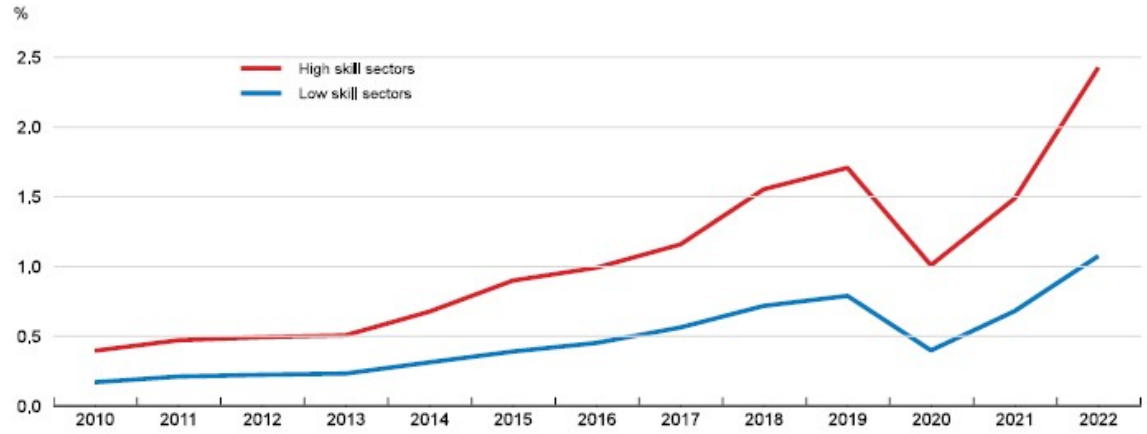
- 고숙련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된 이유는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을 요구하며, 이러한 역량 개발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주로 특정 부문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OECD, 2022)

- 반면 팬데믹 이후 저숙련 부문의 노동력 부족 증가는 노동 수요 회복과 제한된 생산성 증가의 결과로 나타남(OECD, 2023a; 2024a)

  • 이러한 현상은 2023년 대부분 해소되었으나, 근로 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은 일부 부문에서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Ⅱ-6] 고숙련 부문에서 더 심화된 노동시장 타이트함

(단위: %)



주: 1. 28개 OECD 국가의 가중 평균(그림 Ⅱ-5의 주석 2 참고)
2. 농업, 공공행정 및 국방, 가계 그리고 초국가적인 조직 부문은 제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7

- **2010년부터 2022년까지 OECD 국가와 경제부문 전반에서 노동시장 타이트함과 실질 노동 보상(labour compensation)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부문에서 근로자 1인당 실질 보상 증가율은 노동시장 타이트함 속도에 미치치 못함(그림 Ⅱ-7)**

- **팬데믹 회복 초기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규모 경제를 제외한 실질 임금 상승은 비교적 제한적으로 나타남(그림 Ⅱ-8)**

  - 이는 기업들의 수요 증가를 일시적 현상으로 간주하거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임금 인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

  - 현재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높은 임금을 제시해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회사 내 임금 구조에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일부 기업은 여전히 독점적 고용권(monopsony power)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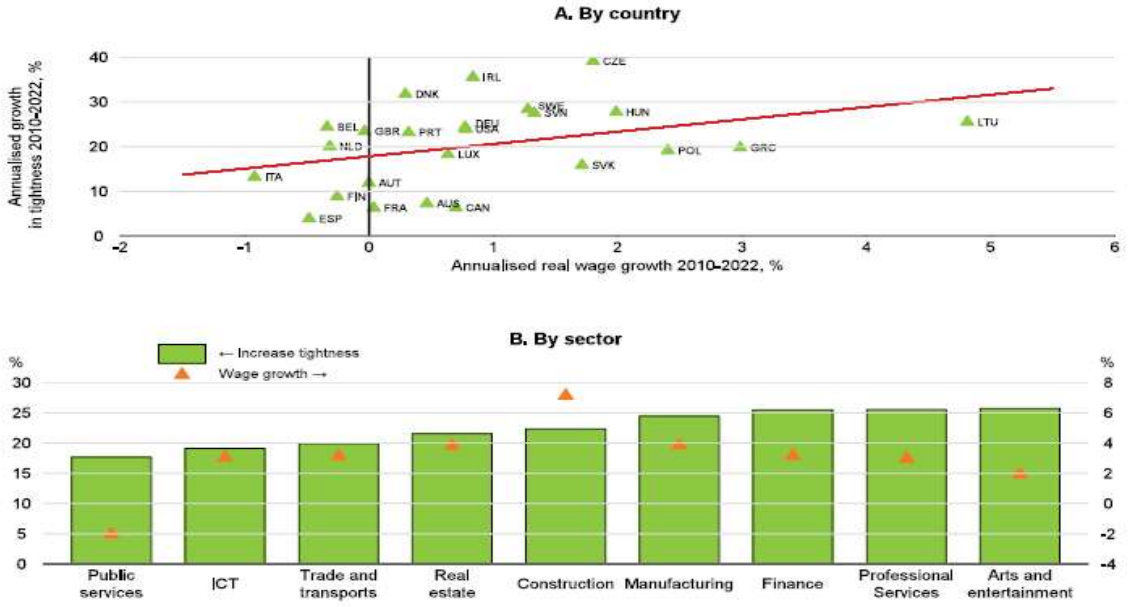
    - OECD 15개국 민간 부문 근로자의 16%는 소수의 기업이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환경에 속함(Araki et al., 2022;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24)

    - 그러나 극심한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기업의 독점적 고용권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Naidu and Dube, 2024)

■ 팬데믹 이후 저숙련 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과 법정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평균을 상회하는 특징을 보임(Autor, Dube and McGrew, 2023; OECD, 2023)

[그림 II-7] 지난 10년 간 노동시장 타이트함과 실질 임금의 연관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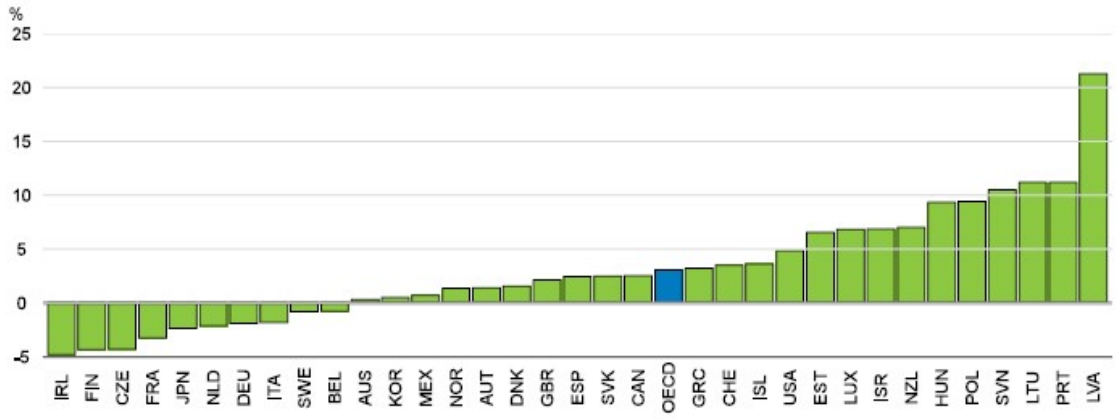


주: 1. 2010~2022년 노동시장 타이트함과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
2. 근로자 1인당 노동 보상(labour compensation)은 소비와 지출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조정
3. 국가범위는 2010년 이후 OEC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와 Dorville, Filippucci, and Marcolin (2024)의 노동시장 타이트함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
4. (a) 패널의 상관관계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8

[그림 Ⅱ-8] 많은 국가의 저조한 실질 임금 상승률

(단위: %)



주: 1. 2019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 또는 최신 데이터 기준 대비 변화
2. 근로자 1인당 노동 보상(labour compensation)은 소비와 지출 디플레이터를 적용하여 조정하였으며, OECD 값은 그래프에 표시된 회원국들의 비가중 평균으로 계산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9

3. 기업 단위에서의 증거 : 고용주 설문조사를 통한 주요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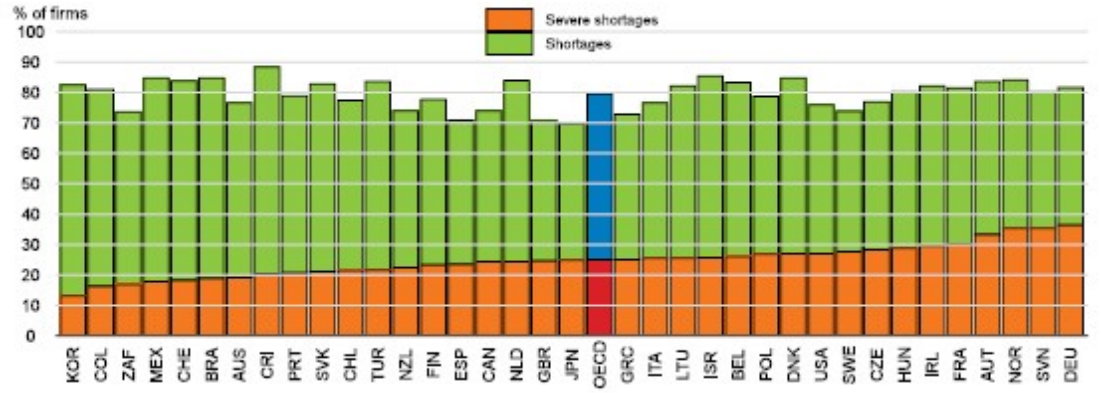
○ OECD는 2024년 34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단위의 노동력 부족 자료를 수집함

■ 노동력 부족은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남(그림 Ⅱ-9)

- 기업들을 대상으로 채용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그 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 기업의 약 70~85%가 적합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코스타리카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짐
- 전체 기업의 15~35%는 심각한 수준의 노동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독일, 노르웨이, 슬로베니아에서는 기업 중 최소 1/3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II-9] 2022~2023년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율

(단위: %)



주: 1. 24개월 동안 기업이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를 조사, 심각한 인력 부족은 기업의 공석 모두 또는 대부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로 정의됨
2. OECD 평균은 그래프에 표시된 회원국들의 비가중 평균으로 산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0

○ 국가별로 노동력 부족을 겪는 산업은 상이하나, 대체로 보건, 정보통신기술(ICT), 제조업, 전문 및 행정서비스 부문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II-10)

■ 독일은 모든 산업에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정 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 이러한 차이는 산업별 기술 의존도와 특정 기술 및 직업에 대한 수요 차이를 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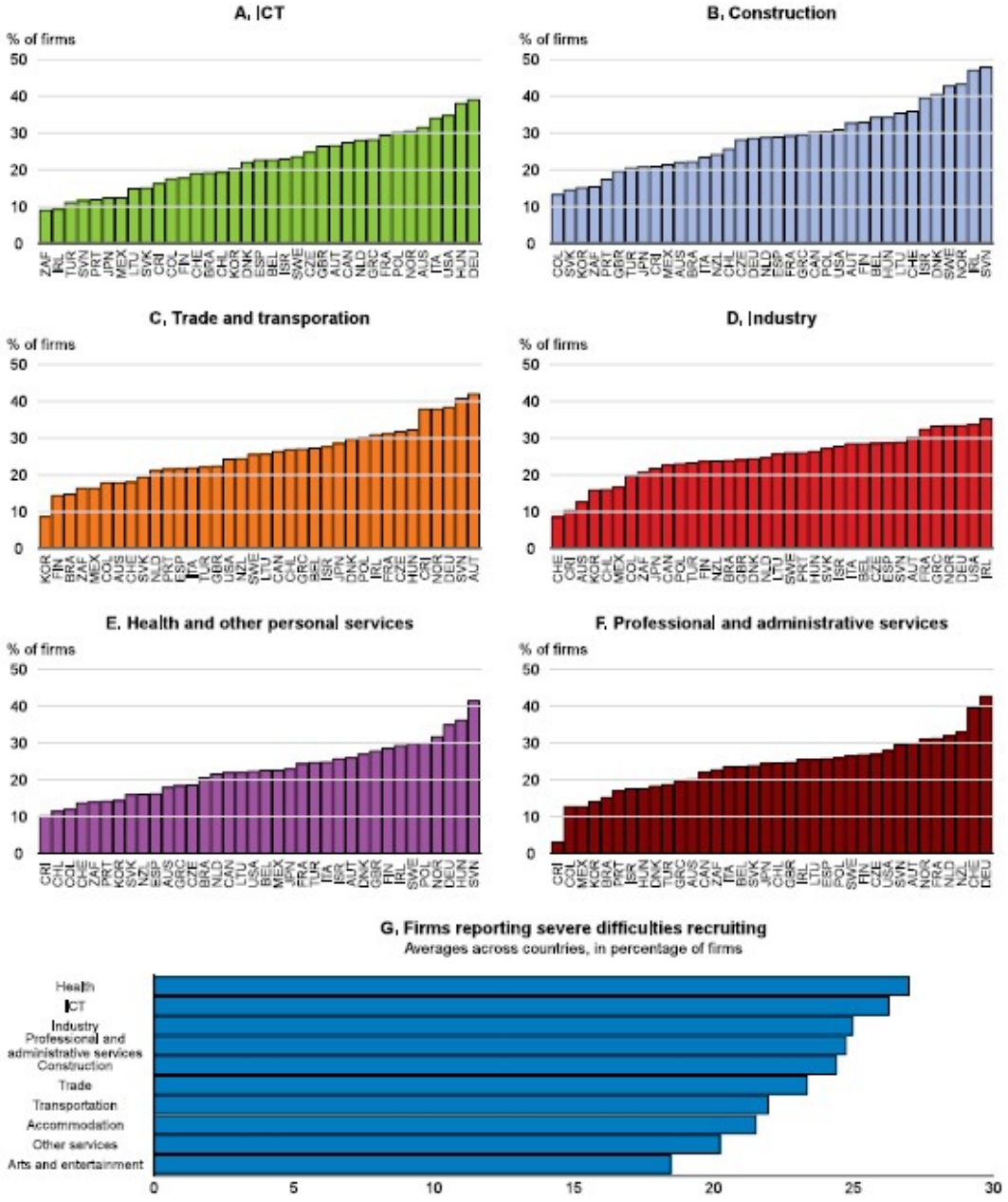
-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부문은 인공지능(AI) 도입 초기분야로(Calvino and Fontanelli, 2023), 전문 인력 부족이 지속적으로 나타남(OECD, 2024c)

- 보건 부문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수요 급증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숙박 및 요식업, 건설업과 같은 산업은 고된 근로 환경과 낮은 임금이 인력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그림 II-10] 2022~2023년 산업별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비율

(단위: %)



주: 1. 산업 부문은 다음과 같음. 제조업(ISIC Rev.4 sectors B와 C), 건설업(F), 운송 및 창고업(H), 무역(G), 숙박업(I), 무역 및 운송(G,H,I) 정보통신기술(J), 전문 및 행정서비스(L. M. N), 보건(Q),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R), 기타 서비스(S), 보건 및 기타 개인서비스(Q, R, S)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1

가. 구조적 요인에 따른 기술 수요 변화와 노동력 부족

○ OECD 생산성 포럼(GFP) 고용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임금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그림 II-11), 고등교육이 요구되는 직무에서 그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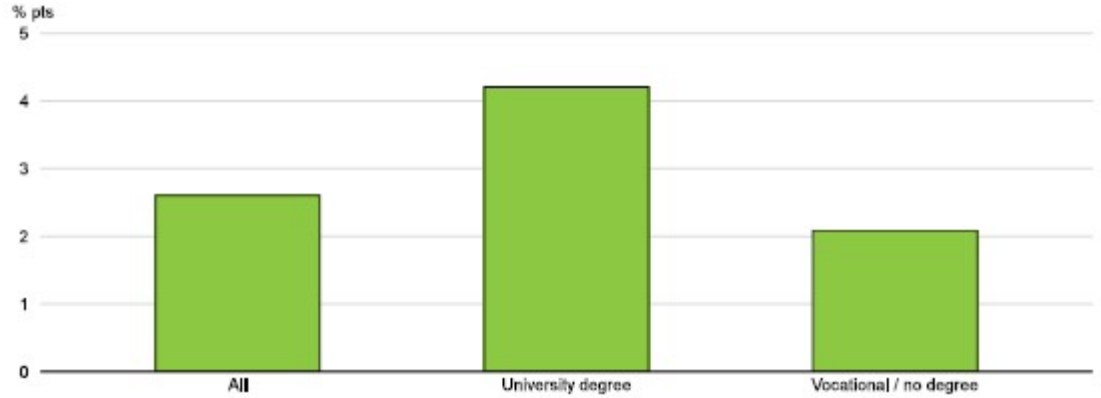
■ 고숙련 근로자가 고임금 산업에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함

- 교육은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고숙련 근로자는 고임금 기업에 더 많이 분포함

- 고숙련 인력이 전문화됨에 따라 특정 기업으로 집중되거나, 성과가 우수한 기업이 높은 임금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때문(OECD, 2021a)

[그림 II-11] 고임금과 저임금 산업 간 노동력 부족의 차이

(단위: %p)



주: 1. 고임금 산업 기업을 나타내는 더미 변수의 계수를 표시, 기업의 운영기간, 규모 성장률, 소속 국가 등을 조건으로 산출된 값, 계수는 5% 유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고임금 산업은 평균 임금이 중위 값을 초과하는 산업으로 광업, 제조업,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전문 서비스, 보건 등이 포함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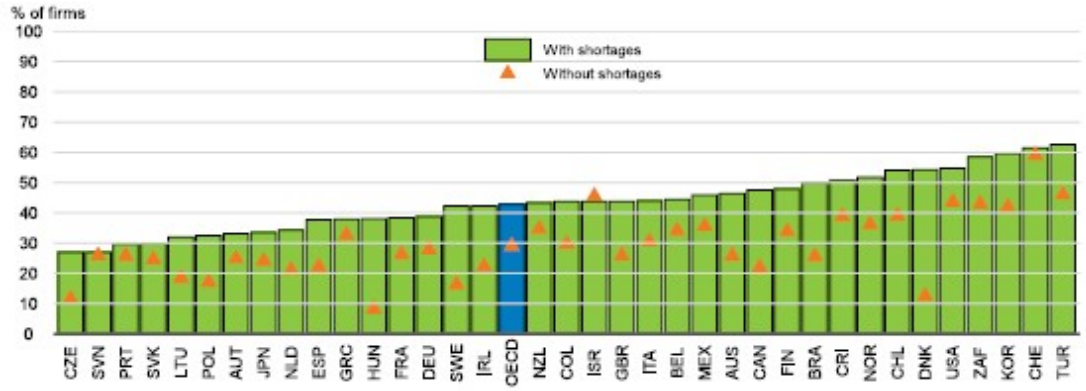
○ 대부분의 국가(특히 덴마크, 헝가리, 스웨덴)에서 노동력 부족을 겪는 기업의 최소 40%가 기술 수요 변화를 경험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이 없는 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그림 II-12)

■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화, 투입 자원의 전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신규투자는 작업

방식과 내용을 변화시키며(Autor, 2013), 이에 따라 기업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도 달라짐

[그림 II-12] 노동력 부족과 기술 수요 변화의 연관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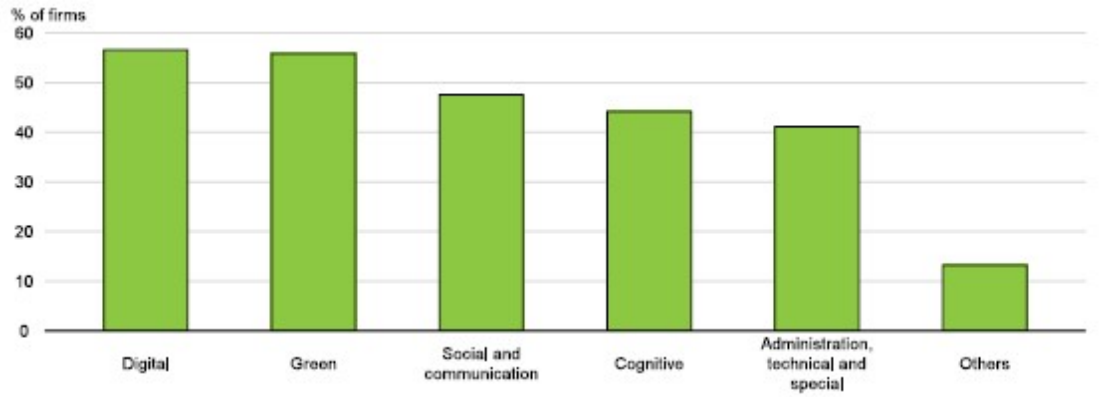
주: 1. 기술수요 변화로 구인 중인 노동력 부족 기업과 노동력이 부족하지 않은 기업의 비율
2. OECD 평균은 그래프에 표시된 회원국들의 비가중 평균으로 산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3

○ 기술 수요 변화로 인해 구인 중인 기업들은 부족한 기술이 주로 구조적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밝힘(그림 II-13)

- 기술에 대한 수요는 디지털 기술과 친환경 기술 순으로 높았으며, 디지털 기술과 상호 보완적인 사회적 및 의사소통 기술도 높은 수요를 보임(Grundke et al., 2018)
- 특히 브라질, 튀르키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업들은 친환경 및 디지털 기술 인력 부족을 자주 호소함
- 미국과 이탈리아에서는 친환경 기술 부족이 두드러졌고, 스위스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 기술 수요 변화 기업의 구조적 기술 요구

(단위: %)



주: 1. 그래프는 특정 기술 수요에 따른 기술 변화 기업의 구인 현황을 의미하며, 36개국의 가중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
2. 친환경 기술은 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데 필요한 기술로 정의, 디지털 기술은 기본 및 고급 정보통신기술, 기업 내 인공지능(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4

○ 친환경 전환은 특정 기술 수요의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재배치를 요구함

■ 전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비친환경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대규모 노동력 이동은 불가피함(Causa et al., 2024b; OECD, 2024a)

■ 고학력 근로자는 중·저학력 근로자보다 친환경 일자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

- 중·저학력 근로자는 주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나 직업(Brown jobs)에 집중되어 있어 일자리 상실 위험이 높음(Causa, Nguyen and Soldani, 2024a,b)

- 고학력 근로자는 배출 집약 산업에서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반면, 중·저학력 근로자는 기술 격차로 인해 재교육이 필요(OECD, 2024a)

■ 노동력 부족의 원인은 저숙련 친환경 일자리의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졸업생들이 고임금 산업을 선호하는 경향, 그리고 산업 쇠퇴 지역과 성장 지역 간의 지리적 불일치로 나타남(참고 II-2)

[참고 II-2] 순배출 제로(Net Zero Emissions) 전환과 노동시장 압박

○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노동시장에 추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기후 목표가 전체 일자리 수에 미치는 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OECD Employment Outlook 2024*(OECD, 2024a)는 일부 산업 및 지역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지적
- 일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회가 창출될 것이며 기존 직업 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을 의미

○ 고배출 산업 축소로 근로자들은 친환경 일자리와 녹색 활동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환경 (green-driven)" 일자리에서 새로운 고용 기회를 찾을 가능성이 높음

- 친환경 일자리와 고배출 산업 고학력 직업 간 기술 요구 사항은 매우 유사하나(OECD 2024a), 저숙련 및 중숙련 근로자는 기술 격차가 커서 이들을 친환경 일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적임
- 순배출 제로로의 전환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를 중심으로 숙련 인력에 대한 전반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술 격차 외에도 다른 요인이 장애로 작용

- 친환경 일자리의 낮은 선호도는 노동력 부족의 원인 중 하나로 나타남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과 같은 저숙련 친환경 일자리는 낮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으로 인해 다른 저숙련 일자리 대비 선호도가 낮음
- 또한 중숙련 및 고숙련 친환경 산업 일자리는 고임금을 제공하지만, STEM 분야 인재는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하는 금융 및 기술 산업을 선호할 수 있음(Popp et al., 2022)

○ 친환경 일자리와 고배출 산업 일자리 모두 지리적 집중도가 높지만, 반드시 동일한 지역에 위치하지 않음

■ 축소 산업과 확장 산업 간의 지리적 불일치는 또 다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난 20년 간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과 기술 요구를 크게 변화시킴

■ 디지털화는 일부 업무의 자동화, 정보통신기술(ICT) 부문 및 기타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일자리 창출, 가격 하락, 신제품 개발을 촉진함

○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노동 및 기술 수요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일부 산업에서는 인공지능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으나, 다른 산업에서는 이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음(Dorville, Filippucci and Marcolin, 2024)

- 인공지능은 기존 인지적 작업의 자동화를 확장하며, 물리적 작업[5]의 자동화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동시에 많은 산업에서 인공지능은 노동을 보완하며, 새로운 작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금융, 광고, 컨설팅, 정보통신기술과 같은 지식 집약적 산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소득 증대와 총수요 증가를 통해 노동수요를 촉진하는 한편, 노동 집약적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음(Filippucci et al., 2024)

○ 생산성 포럼(GFP) 고용주 설문조사에 따르면, 생산 기술의 변화를 경험한 기업은 채용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그림 II-14)

■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인공지능, 로봇공학, 디지털 기술에 투자한 기업의 노동력 부족 확률이 비투자 기업보다 40%p에서 50%p 더 높을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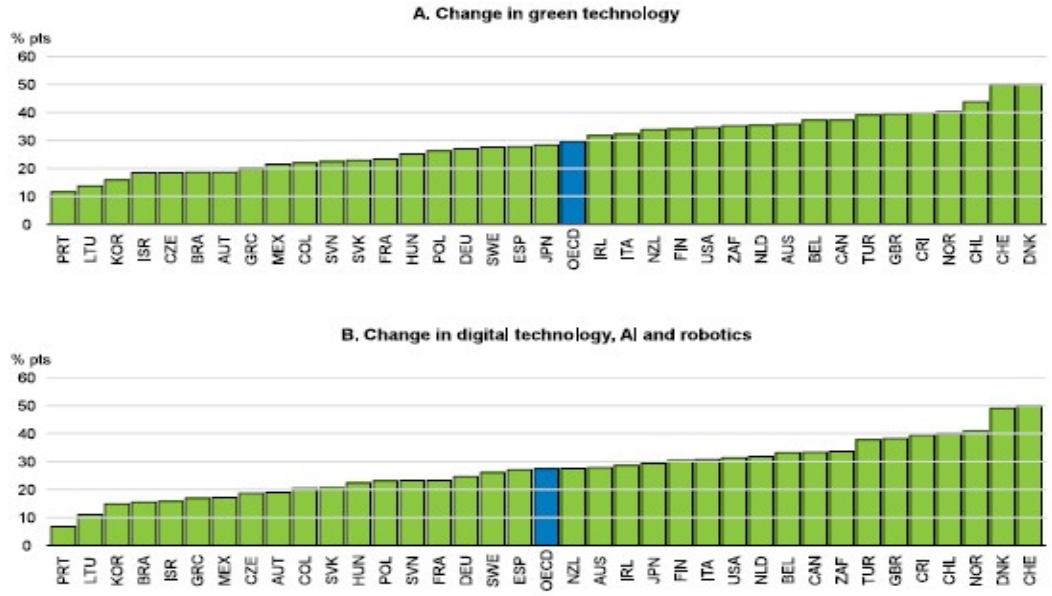
■ 경제학적 분석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 변화는 산업이나 국가와 관계없이 채용의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5) 원문 'primarily blue-collar jobs'를 의역

- 기업의 규모, 운영 기간, 매출 변화 등의 채용과 관련된 변수를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됨(Filippucci, Laengle and Marcolin, 발간 예정)

[그림 Ⅱ-14]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 기업의 노동력 부족 심화

(단위: %p)



주: 1. 기업의 기술변화 경험 유무에 따른 노동력 부족 차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2. 친환경 기술(Green technology)은 지난 2년간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거나 환경 개선 제품 또는 기술에 투자한 경우를 의미
3. 디지털 기술은 기업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수집 및 관리(Business 4.0), 프로세스 분석, 고속 인터넷, IoT, 기계 간 통신기술(M2M),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변화를 도입한 경우를 의미
4.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은 기업이 텍스트 또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Chat GPT, Dall-E 등), 자연어 처리(NLP) 및 감성 분석, 머신 러닝 알고리즘, 3D 프린팅, 상호연결 및 프로그래밍 가능한 협업 로봇,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서 변화를 도입한 경우를 의미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5

○ 고령화는 향후 수십 년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노동 공급 증가세를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2050년까지 이스라엘과 멕시코를 제외한(André, Gal and Schief, 2024) 모든 OECD 국가에서 2020년 대비 생산가능 인구 비중이 감소할 전망이며, 일부 국가는 2021년 대비 15~20%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OECD 국가의 절반 이상과 중국 등 일부 신흥국의 생산가능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 고령화에 따른 기술 노후화는 노동력 부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은 교육 등과 같은 기술 의존도가 낮은 산업에 비해 숙련 근로자 채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가 증가함에 따라 EU 전역에서 노동력이 부족했다는 증거를 제시(Arpaia and Halasz, 2023)

■ 이와 관련하여 고령화와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에 영향을 받는 산업일수록 구인난이 더 심각하며, 2010~2019년 사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분석(Dorville, Filippucci and Marcolin, 2024)

○ 효과적인 외국인 근로자 통합 정책은 일부 산업의 노동력 부족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음

■ 지난 10년간 외국인 근로자는 여러 국가에서 노동력 증가의 주요 원인이었으며, 숙박 및 요식업, 건설업, 보건 부문(일부 국가에 한함)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Causa et al., 2024a)

■ 그러나 이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일부 국가는 고숙련 전문 인력을 포함한 근로자가 이민으로 유출되고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화의 영향을 상쇄하려면 대규모 이주가 필요

  • OECD 노년 부양비 안정화하려면 2050년까지 연간 순 이주율이 인구의 2% 수준이어야 하지만, 이는 2000~2020년 평균 0.3%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André, Gal and Schief, 2024)

나. 기업 특성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차이

○ 노동력 부족은 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기술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의 기업은 기술 투자와 기존 노동력의 기술 역량 불일치로 심각한 기술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 기업의 규모와 운영기간 또한 채용 방식과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침

- 예를 들어 소기업은 기업 인지도와 자원이 풍부한 대기업보다 인재 채용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음(European Commission, 2023)

■ 이러한 분석을 통해 노동력 부족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업 및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신생 기업은 산업과 국가를 막론하고 노동력 부족을 겪는 경향이 있음(그림 II-15)

■ 낮은 인지도, 네트워크, 복리후생으로 인해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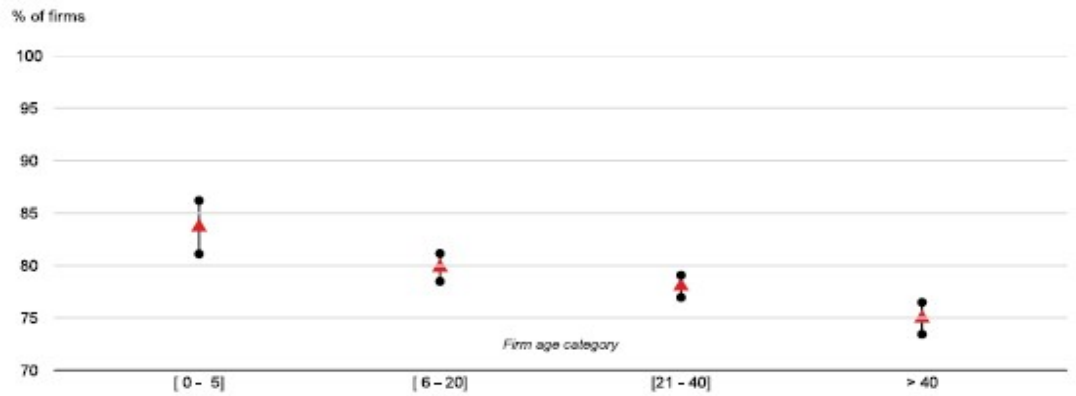
■ 신생기업은 기존 기업보다 디지털 기술 도입 가능성이 높아 구인난이 더욱 심화될 수 있음(Filippucci, Laengle and Marcolin, 발간 예정)

■ 또한, 재정 여력 부족으로 내부 교육 투자 대신 숙련 근로자 채용에 의존하게 되어 구인 어려움이 가중됨

■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기업 성장을 제한하고,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해할 수 있음

[그림 II-15] 신생 기업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노동력 부족

(단위: %)



주: 1. 기업의 운영기간, 규모, 규모의 증가, 산업 및 국가를 기준으로 노동력 부족을 보고할 확률을 회귀분석한 예측값
2. 36개국 가중 평균 기준, 95% 신뢰구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6

○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근로자 1인당 매출로 측정)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남(그림 II-16)

■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적정 수준의 임금, 직원 교육, 우수한 근로환경을 제공하지 못함

- 미흡한 경영 관행과 비효율적인 채용 전략이 구인난을 더욱 심화시킴

■ 이러한 기업은 저임금,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그림 Ⅱ-17), 노동력 부족은 혁신 감소 등 생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적합한 역량을 갖춘 노동력 부족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그림 Ⅱ-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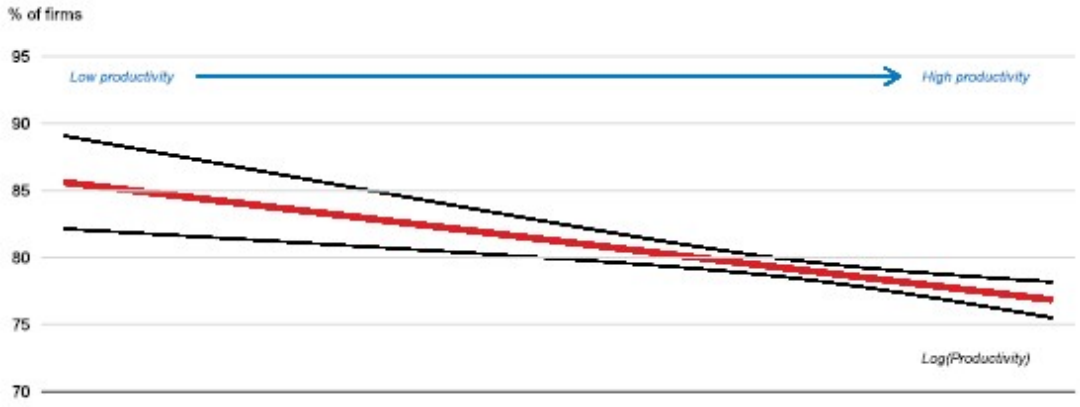
■ 생산성과 국가 요인을 통제한 분석에 따르면, 노동생산성이 표준편차 1단위 상승할 경우 적합한 역량을 갖춘 근로자 부족 확률이 샘플 평균 대비 7% 증가함

- 생산성이 높은 기업은 자동화, 직원 교육, 조직 개선 등에 투자하여 중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반면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생산성 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장기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음

[그림 Ⅱ-16] 노동력 부족이 생산성이 낮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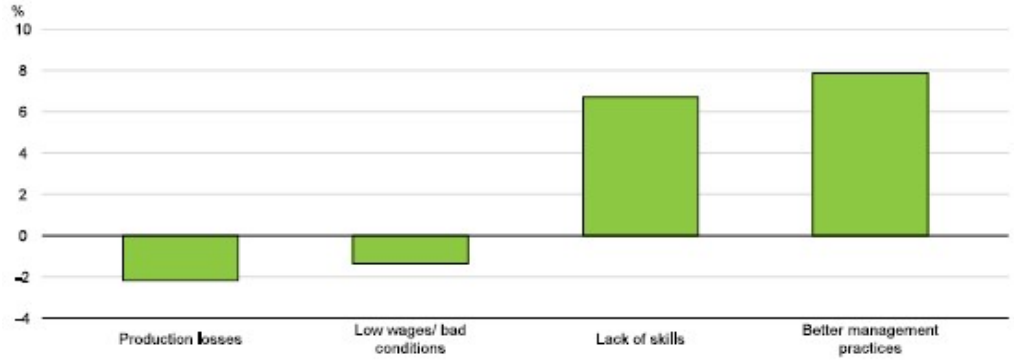
(단위: %p)



주: 1. 노동력 부족을 겪는 기업의 비율에 대한 회귀 분석 결과로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log), 사업 및 국가, 규모, 규모 증가율,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산출, 36개국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7

[그림 Ⅱ-17] 기업의 생산성 차이에 따른 노동력 부족의 원인과 결과

(단위: %p)



주: 1. 기업의 근로자 1인당 매출(log), 산업 및 국가 지표를 기준으로 특정 특징(x축)을 보일 확률에 대한 회귀 분석에서 생산성 계수를 나타냄
2. 계수는 샘플 내 해당 특징의 평균 확률에 대한 비율로 표현, 36개국의 가중 평균치를 사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8

○ OECD 국가의 많은 기업이 열악한 근로 조건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음(그림 Ⅱ-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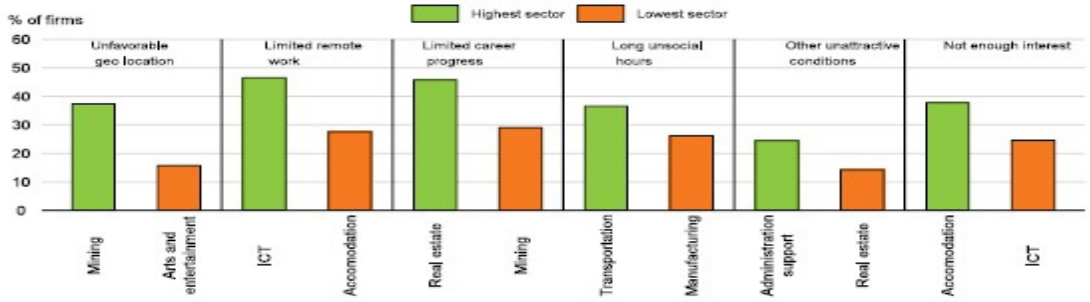
■ 운송업 기업의 40%는 긴 근무시간과 비표준 근무시간을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으며, 심각한 부족을 겪는 기업에서 이 비율은 높게 나타남

■ 광업 기업의 37%는 노동력 부족의 원인으로 지리적 불리함을 지적했으며, 숙박업과 보건업은 육체적·정신적 건강 위험에 비해 낮은 경제적 보상을 문제로 지적

■ 이러한 열악한 근로조건이 특징인 일자리에는 여성과 이주 근로자가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참고 Ⅱ-3)

[그림 Ⅱ-18] 열악한 근로조건은 특정 산업에서 노동력 부족을 유발

(단위: %p)



주: 1. 특정 근로 조건이 노동력 부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냄
2. '가장 높은(Highest) 부문'과 '가장 낮은(Lowest) 부문'은 언급된 근로조건으로 인해 노동력 부족을 겪는다고 응답한 기업 비율이 평균적으로 가장 높거나 낮은 부문을 나타냄
3. 36개국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19

[참고 Ⅱ-3] 노동 부족과 노동시장 불평등

- **최근 OECD 연구는(Causa et al., 2024a) 제3절의 분석을 보완하며, 고수요(high-demand)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일자리 질(농업, 숙박, 건설, 보건 및 사회복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분배적 관점에서 보면 여성은 조사된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건 및 숙박·식음 서비스 분야 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
  - 이주민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숙박 및 식음 서비스와 건설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음
  - 반면 고령 근로자는 농업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

- **고수요 부문의 임금변화는 국가별로 매우 이질적임**
  - 숙박 및 식음 서비스 부문은 2019년 말 이후 많은 OECD 국가에서 절대적 또는 저임금 산업 대비 상대적으로 임금이 인상됨
  - 그러나 건설 및 운송·창고 부문에서는 2019~2023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질 임금 증가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은 일부 OECD 국가(이탈리아, 그리스, 스웨덴 등)에서 실질 임금이 감소했으나, 헝가리, 폴란드 등의 국가는 고임금 산업의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고수요 일자리의 비임금 요소와 직업의 질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모든 국가에서 보건, 숙박 및 식음 서비스, 운송·창고 부문의 교대 근무 비율이 높음
    - 여성은 간호 및 개인 간병, 웨이터, 음식 준비 보조, 청소부 직업군에서 교대 근무자의 대부분을 차지
  - 열악한 근무 환경과 일정은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업무 효율성, 복지 및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 EU 근로자의 50%는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34%에서 77%까지

차이가 나타남

- 보건부문 근로자는 EU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신 건강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보고함
  - 간호사 및 조산사의 34%는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 22%를 크게 초과
- 보건 부문 외에도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대면 활동 직종 근로자들도 높은 정신건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웨이터 및 바텐더는 고객과의 어려운 상호작용, 물류업종 운전자는 과중한 업무와 압박을 느끼고 있음
- 직업 불안정은 정신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또 다른 주요원인으로 최근 수요가 높았던 직업군에서도 임시 계약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ILO accidents 데이터에 따르면, 신체적 건강 위험도 고수요 직업에서 더 높게 나타남
  - OECD 평균 보건 부문 근로자는 다른 부문의 근로자보다 비 치명적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두 배 더 높음
  - 운송·창고 및 건설 부문 근로자는 치명적 사고를 포함한 작업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음
    - 건설 근로자는 전체 경제 대비 치명적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약 5배 더 높았고, 농업 근로자는 약 9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농업 부문의 데이터 제한으로 자세한 분석은 한계가 있음

4.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개혁의 필요성

- **이번 절에서는 노동력 및 기술 공급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법을 논의하며, 경제 내에 자격을 갖춘 노동자의 가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중점을 둠**
  - 근로자와 기업 간 매칭 효율성을 제고하여 유연하고 회복력 있는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제시

-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화, 친환경·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확산 등 변화에 대응하며, 노동시장이 경기 변동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혁신적 정책이 필요**
  - 노동 공급 조정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노동력 구성과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통해 단기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표 II-1〉은 이후 논의되는 다양한 정책을 노동 공급, 노동 수요 또는 공급과 수요의 매칭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제시**
  - 현재의 노동력 부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 정책과 미래의 노동시장 수요를 예측하고 향후 노동력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정책을 구분하여 제시
  -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은 경제성장과 노동의 생산적 배분에 제약을 가하는 요인으로 간주
  - 그러나 노동시장 타이트함은 근로자의 일시적인 협상력 강화, 불평등 완화, 근로환경 개선, 참여율이 낮은 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특히 수요 독점적 시장에서 두드러질 수 있음(Naidu and Dube, 2024; OECD, 2024a)

〈표 II-1〉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완화를 위한 정책 선택

	단기 정책(Policies to ADAPT)	장기 정책(Policies to ANTICIPATE)
노동력 공급	• 고령자 참여: 근로지속을 위한 세제혜택, 재교육, 고령자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차별방지정책 • 여성 참여: 육아휴직, 휴직 후 재교육, 차별 방지 정책, 과세 체계 재설계 • 이민자 참여: 통합 정책, 외국인 여성 대상 보육 지원 • 실업자를 위한 세금 및 복지제도 설계 • 의료 및 교육 분야 공공 인력에 대한 임금 정책	• 교육, 교육 및 산업 연계 강화 • 고령자 참여: 건강한 노후 정책 • 여성 참여: 보육서비스 접근성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 STEM 분야 여성 참여 증대 • 이민자 참여: 이민자 할당제 관리
매칭 및 재배치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적절한 자금 지원 및 대상자 선정, 실업자와 재직자 대상 경력 상담 제공 • 성인 대상 재교육: 기술 프로파일링 도구, 마이크로 자격증 활용 • 고용 보호 규정 • 면허 및 경쟁 제한 조항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고용 서비스 디지털 전환 • 성인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 품질 관리 및 개선, 기술 수요 분석 • 주거 정책 • 수요 독점 방지 도구(반독점 정책)
노동 수요	• 성인 대상 재교육: 관리자 포함, 기업의 훈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	• 여성 참여: 금융 서비스 및 창업 지원 • 공급과 수요 정책 간 조정

주: 1. 단기 정책(adapt)은 현재 노동 및 기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기 정책(anticipate)은 장기적인 요구를 고려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족 문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춤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Table 2.1

가. 교육과 평생 학습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

○ 기술 부족은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이므로 노동력 공급 조정을 위해 교육 및 훈련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필요

■ 2009년부터 2022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점수는 15점 하락하였으며, 이 중 3분의 1은 팬데믹 이전에 발생

■ OECD는 교육 정책 개혁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평균 PISA 점수를 10점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

- 주요 정책으로 유아교육 확대, 교원 역량 제고, 체계적인 과제 지원 도입, 학교 내 디지털 기기 사용 규제 등이 제시됨(Andrews, Égert and de la Maisonneuve, 발간 예정)

■ 또한 디지털 전환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 강화를 요구함

- 덴마크는 기업, 교육 및 연구기관, 공공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음(Klein and Smith, 2024)

○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팀워크, 의사소통, 리더십과 같은 사회적 역량(soft skills)에 대한 수요가 증가

- 특히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이 결합될 경우 노동시장에서 높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Grundke et al., 2018; Criscuolo et al., 2021)
-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2012년 사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직업의 비중이 약 12%p 증가(Deming, 2017)
- 프랑스에서는 1982년부터 2020년 사이 수학적 및 사회적 기술을 동시에 요구하는 직업의 비중이 9%p 이상 증가(Guadalupe et al., 2022)
- 교육 시스템의 변화는 노동 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효과가 발현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현재 노동력 조정을 위해 평생 학습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 교육·훈련 시스템이 미래 지향적이고 모든 이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숙련된 노동력 공급이 증가하고, 기업 내 기술 불일치를 완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구조적 변화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직무에 필요한 기술과 과업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나, OECD 회원국 성인의 연간 훈련 참여율은 40%에 불과하며, 고숙련 근로자가 저숙련 근로자보다 훈련 참여율이 높음(OECD, 2019b)
- 북유럽 국가의 경우 사회적 파트너와 정부 기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성인 학습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해 왔음
  - 오스트리아,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헝가리, 네덜란드는 지난 수십 년간 개혁을 통해 참여율을 크게 높임
  - 이러한 개혁의 공통 요소로 이해관계자 참여,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 결과 모니터링에 대한 대응, 훈련의 품질, 노동시장 수요와의 연계성이 포함됨(OECD, 2020a)

○ 정부는 평생 학습 시스템을 위한 장기적 재정 지원을 우선시하고, 변화의 규모에 맞는 공공 자원을 배분해야 함

- 재교육(reskilling)과 역량 강화(upskilling)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공 투자는 필수적
- 보조금, 세제 혜택, 저금리 대출과 같은 공공 금융 지원방안은 개인과 기업이 시장수요에 맞는 역량 개발에 투자하도록 유도할 수 있음
- 그러나 시장 실패는 기술 개발의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기술과 개인이 습득하는 기술 간의 불일치를 야기할 수 있음(OECD, 2017a)

○ 따라서 더 많은 기술 개발 뿐 만 아니라 적합한 기술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 중요

- 공공 투자는 노동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직업 훈련이나 재교육 가능성이 낮은 개인과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함
- 경제적 제약은 실업자, 저숙련 근로자, 중소기업(SME)에 특히 큰 영향을 미침(OECD, 2019b)
  - OECD 주요 국가에서는 노동시장 수요에 따라 교육 과정 지원 비율을 조정하거나 실업자에게 무료로 훈련을 제공하는 사례가 많음(OECD, 2017a)
- 중소기업 지원 정책은 확장성과 준수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되며(예: 보조금, 바우처), 훈련 기금 등 중소기업에 특화된 혜택도 포함하고 있음(OECD, 2019b)

○ 정보의 비대칭은 근로자와 고용주의 교육 훈련 투자에 장애 요인이 됨

- 근로자는 현재 수요가 있는 기술이나 고용 기회를 알지 못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시장의 기술 공급과 직무 요구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음
- OECD 국가 대부분이 기술 수요를 평가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그 효과는 제한적(OECD, 2016; 2023b)
  - 세분화된 노동시장 정보는 부족하거나 공공 고용 서비스 및 기업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주요 이해관계자, 특히 사회적 파트너 간의 정보 수집 및 활용 협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기업 진단 도구는 관리자가 기술 격차를 파악하고 미래 기술 수요를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OECD, 2021b)

○ **단기 자격 과정(Micro-credentials)은 특정 고수요(high-demand) 기술을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으로, 전통적인 학위 과정보다 짧은 시간 안에 재교육 및 역량 강화를 가능하게 함**

■ 이를 통해 노동시장에서 발생하는 기술 격차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재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음(OECD, 2023c; 2024c)

■ 또한 구직자의 특정 분야 역량 개발 노력을 기업이 파악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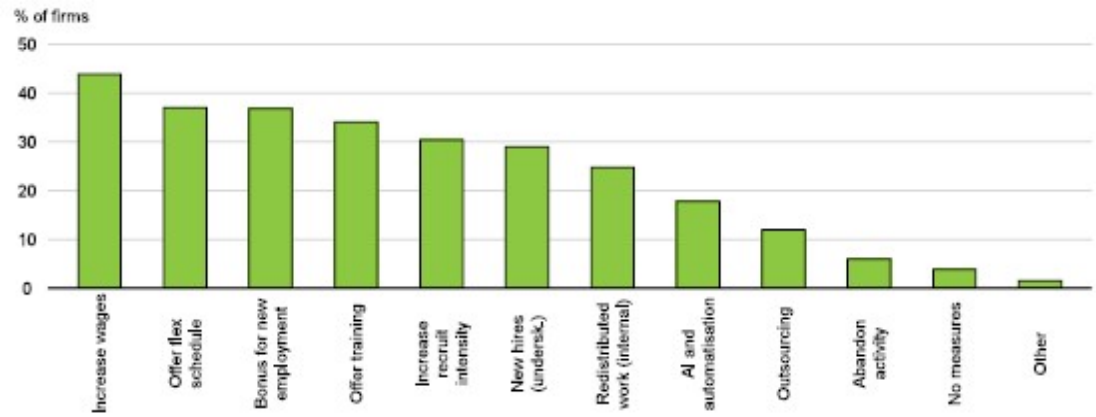
○ **기업은 성인 재교육과 역량 강화 기회의 주요 제공자로, 인적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는 기술 발전 적응, 신규 채용 통합, 경쟁력 유지를 가능하게 함**

■ 2022~2023년 구인에 어려움을 겪은 기업 중 3분의 1 이상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직원을 대상으로 훈련 기회를 제공(그림 Ⅱ-19)

■ 이는 유연 근무제 도입 기업 비율과 유사하며, 임금 및 보너스 인상을 고려한 비율보다는 약간 낮음

[그림 Ⅱ-19]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들은 임금 및 보너스 인상, 근무 유연성 확대, 훈련 제공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려고 노력

(단위: %)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0

○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과 고용주는 기술 투자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며(OECD, 2021c), 이러한 경향은 특히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짐(OECD, 2019b)**

■ 효과적인 프로그램은 재정적 지원과 비재정적 지원(예: 인식 제고, 맞춤형 상담 등)을

병행하며, 기업이 투자의 필요성과 방법을 파악하도록 도움

- 기업의 인적 자본 투자와 생산성 향상은 경영진의 기술 수준과 학습 태도에 크게 좌우됨(Bender et al., 2018; Metcalfe et al., 2023)
- 특히 중소기업에서 코칭, 멘토링, 집단 학습은 지식 공유를 촉진하고 훈련 제공 가능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OECD, 2021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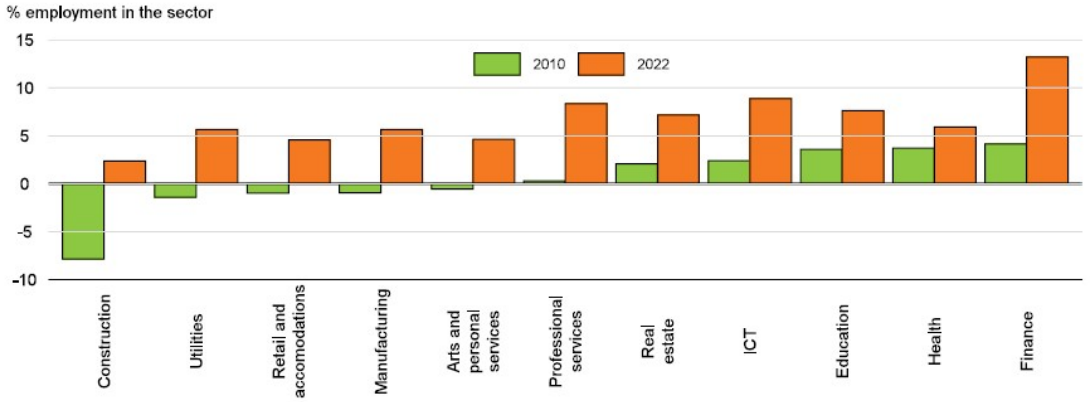
나. 다양한 노동시장 정책을 활용하여 이동성과 매칭 개선 가능

○ 제한된 노동 이동성은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이 요구되는 지역이나 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함

- 지리적, 경제적, 정책적 장벽이 근로자의 이주나 직업 전환을 저해하면 기업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며, 이는 노동 부족을 심화시킴
- 2022년 대부분의 산업에서 타 부문의 실업자 풀(pool)을 활용해야 공석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그림 Ⅱ-20)
  -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술 및 전문 서비스 부문에서 구인 및 구직이 매칭되더라도 평균 8~9%의 공석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이는 2010년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임
  - 반면 2010년 건설 부문에서는 실업자 수가 구인 수를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음

[그림 Ⅱ-20] 2019년, 절반 이상의 산업이 공석 충원을 위해 산업 간 재배치 필요

(단위: %)



주: 1. 본 그래프는 빈 일자리와 국가의 자연 실업률(재배치 없이 부족한 일자리)의 차이를 고용 비율 대비 비중으로 나타냄
2. 데이터는 28개국을 기반으로 가중 평균을 산출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1

○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은(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은 직업 알선 서비스와 경력 상담 등을 통해 구직자가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하도록 지원함

■ 효과적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ALMPs) 시스템은 고용 서비스에 충분한 재원을 투입하여 경기 변동과 친환경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Keese and Marcolin, 2023)

- 이러한 시스템은 칠레, 아일랜드, 스페인 등에서 추가 발전 가능성이 있음

■ 일자리 정보 부족과 학습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중장년층의 경력 변경에 주요 장애로 작용

- 경력 상담은 근로자와 실업자가 교육, 훈련, 직업 선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수단

- 청소년 대상 상담은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나, 성인을 위한 경력 상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OECD, 2021e)

■ 개인의 학습 이력과 경험을 반영한 프로파일링 도구는 지원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업 전환이나 실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함

- 고용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프로파일링을 강화하고 개인과 기업의 기술 수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Meghnagi and Tuccio, 2022)

- 산업별 맞춤 프로그램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특히 효과적
  - 특정 고용주의 요구에 맞춘 설계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하며, 구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Rodrik and Stantcheva, 2021)

○ 직업 면허는 최소한의 전문성을 요구함으로써 채용 비용을 증가시키고 지원자 풀(pool)을 축소해 특정 직업의 진입 장벽을 형성할 수 있음(Bambalaite, Nicoletti and Rueden, 2020)

- 유럽과 미국에서는 약 20%의 근로자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Koumenta and Pagliero, 2019)
- 면허 규정을 재검토하여 지역 간 진입 요건의 상호인정을 확대하거나, 특정 수요가 높은 직업에 대해 면허 비용을 공공 보조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노동시장 집중과 수요 독점 구조는 근로자의 이동성을 제한함(Araki et al., 2022)
  - 독점 규제 기구의 역할을 강화하여 합병 및 인재 유출 방지 협약을 규제하고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함(Araki et al., 2022)
- 경쟁 제한 협약(Non-compete agreements; NCAs)은 혁신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업 내 근로자 이동성을 제한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
  - 집단 교섭 강화는 기업과 근로자 간 수익 분배를 개선하고(Belenzon and Schankerman, 2013) 수요 독점 구조를 완화하는 효과적 방안임(Araki et al., 2022)

○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수요 독점(monopsony)을 완화하면 근로자의 교섭력이 강화되어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노동시장 독과점(Labour Market Concentration)이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노동조합이 강할수록 감소(Araki et al., 2022)
- 수요 독점 완화는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 환경을 개선하여 일자리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Causa et al., 2022)
- 효과적인 노동조합은 노동 부족으로 인한 일자리 질 저하를 완화할 수 있음(Zwysen,

2024)

- *The OECD Job Quality Framework*는 임금의 질, 노동시장 안정성, 근로 환경의 질 등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정책 개선을 강조(OECD, 2018a)
  - 여성, 고령 근로자, 이주민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임금, 사회보장 접근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주요 과제로 제시(Causa et al., 2024a)
  - 이는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인적 자본 투자, 기업 생산성 향상, 근로자 웰빙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음
- 채용난을 겪는 많은 기업은 임금 인상과 근무 유연성 강화를 고려하고 있음(그림 Ⅱ-19)

○ 더 나은 임금과 근로조건은 고령화와 숙련 노동 수요 증가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보건, 장기 요양, 교육 분야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보건, 장기 요양, 교육 분야는 주로 정부 부문이 주도하며, 민간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음
  - 2018년 기준, OECD 국가 교사의 급여에 대한 만족도는 39% 수준이며, 계약 조건에 만족하는 비율은 약 67% 수준
- 직업의 사회적 평가가 낮다는 인식과 과도한 행정업무는 직업 선호도를 더욱 저하시킴(OECD, 2020c)
- 핀란드와 같이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전략이 필요(Schleicher, 2019)
- 팬데믹은 보건 인력 부족을 심화시켰으며,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건 및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OECD 국가들은 훈련 역량 확대, 재정적 인센티브 강화, 근로조건 개선, 노동력 공급 부족 지역(농촌)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일부 국가는 간호사 등 특정 보건직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외국 의사와 간호사를 적극 채용하고 있으나, 이는 출신국의 인력 부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Lafortune and Levy, 2023)

○ 주택 접근성 향상은 노동 이동성을 촉진하여 노동시장 매칭을 개선할 수 있으나,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노동시장 타이트함이 전국적으로 나타나지만, 주별 인력 부족 격차가 크게 나타남(Fuller and Jefferson, 2023)
-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지역 간 인력 부족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남(Causa, 2024a)
- EU 국가 간 인력 부족의 차이는 국경을 초월한 매칭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짐(EURES, 2023)
- 주택 접근성 부족은 이민자의 사회적 통합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OECD 국가에서는 이민 근로자가 열악한 주거 환경과 생활 조건이 일반적인 지역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음(Causa et al., 2024a)

○ 많은 OECD 국가에서 주택 비용 상승이 주거 및 직업 이동성을 저해하며, 특히 생산성이 높은 도시 집적지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음(Ganong and Shoag, 2017; Cavalleri, Luu and Causa, 2021)

- 과도하게 제한적인 토지 이용 규제를 완화하면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유지하면, 주택 공급의 수요 반응성이 높아져 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주택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스웨덴은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된 사례로 평가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는 도시 확산 억제를 통해 노동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 가구의 이동성을 지원할 수 있으나, 자격 요건은 이동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주택수당은 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으나, 공급 부족 상황에서는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음
  - 높은 거래 비용, 과도한 임대료 통제, 엄격한 임차인-임대인 규제, 건축 허가 비용은 노동 이동성과 기술 매칭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OECD, 2021f)

○ 팬데믹 이후 저밀도 지역으로의 이동과 재택근무 확산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주지 선택 범위를 확대해 직업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Liu and Su, 2021; Ziemann et al., 2023)

■ 원격 근무 정책은 근로자가 고용주 위치와 관계없이 국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수락할 수 있도록 지원

-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기존 제약을 해결해야 함

■ 현재 원격 근무는 고학력자, 대기업 근로자, 도시 지역 거주자에게 접근성이 높으며, 양질의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이 필수적임

다. 수요 측면 정책과의 시너지 효과

○ 기술 채택, 생산성 향상, 친환경 전환을 목표로 한 수요 측면의 정책은 노동 및 특정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켜 노동시장의 긴장을 심화시킬 수 있음

■ 특히, 성장 기업이나 새로운 기술을 요구하는 기업에서 더 큰 노동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생산성 향상 정책은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공급 측 제약을 최소화할 보완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

라. 모든 연령대의 노동시장 참여율 확대 필요

○ 인구 구조적 제약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통해 완화될 수 있으며, 고용 창출이 동반될 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짐

■ 팬데믹 이후 OECD 국가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했으며, 특히 보건 및 사회복지 부문의 열악한 근로 여건이 주요 제약으로 작용함

■ 일부 부문의 열악한 근로여건이 여전히 고용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경제활동참가율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2024년 OECD 평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활동참가율 정점에 근접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예외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 일부 국가는 여전히 고령 근로자, 청년, 여성의 고용률이 낮아 노동 공급 확대의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특히 라틴아메리카, 남유럽, 튀르키예에서 두드러짐

■ 대부분의 국가에서 모든 연령 및 성별 그룹이 OECD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향후 수십 년간 고령화로 인한 고용 대비 인구 비율 하락을 상쇄할 수 있음(그림 Ⅱ-21)

- 남성의 경우 주로 고령층 고용 확대 가능성이 크며, 특히 남유럽과 튀르키예에서 근로 경력 연장 가능성이 높음

- 여성의 경우 남성 대비 고용 확대 여지가 더 크고, 전성기 연령대와 고령층 모두에서 고용 증가 가능성이 있음

○ 지난 수십 년간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의 주요 동인은 고령 근로자였으며, 55~64세의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1994년 최저점 기록 이후 약 18%p, 2010년 이후 9%p 상승함

■ 건강 상태 개선, 교육 수준 향상,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 감소, 연금 및 세제 개혁을 통한 고령 근로 연장의 인센티브 강화 등의 결과를 반영함

■ 경제활동참가율 상승 추세의 지속 여부는 건강한 고령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에 좌우됨(Oxley, 2009; Kotschy and Bloom, 2023)

- 이를 위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산업 안전 및 보건 투자,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 철폐가 필요(OECD, 2017b; OECD, 2019c)

- 또한 기술 변화 가속화에 따른 숙련도 저하 방지를 위한 평생학습 강화(OECD, 2019b), 유연한 근무 시간 및 재택근무 등 고령 친화적 근로 조건(André, Gal and Schief, 2024), 그리고 더 강력한 근로 장려 금융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OECD, 2023d)

■ 연금 개혁을 보완하여, 정부는 연금과 근로소득 병행 가능성을 포함한 유연한 근로-은퇴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장려해야 함(OECD, 2023e)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히 젊은 연령층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일 여지가 있음

■ 여성과 청년의 노동시장 통합을 촉진하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동시에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 2023년 기준 OECD 평균 성별 고용 격차는 약 14%p로 여전히 크며, 국가별 차이가 큼

-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자격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하며, 경력 개발에서 '출산 페널티'를 겪는 경우가 많음(Kleven et al., 2019)

- 여성 고용을 지원하고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
  - 양질의 저렴한 보육 서비스 접근성 개선
  - 부모가 육아휴직을 보다 균형 있게 분담하도록 장려(예: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 육아휴직 복귀 시 재교육 및 역량 강화 제공
  - 기업 내 성평등 장려
  - 외국 출생 여성에 대한 통합 프로그램 도입
  - 여성 창업 및 금융 포용성 촉진
  - 맞벌이 가구의 세제 형평성 개선(예: 벨기에, 독일)
-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출산율을 자극하고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음(André et al., 2023)
- 여성은 정보통신기술(ICT) 직종에서 전반적으로 저평가되고 있으며, 이 직종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노동력 및 숙련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
  - 오스트리아, 벨기에,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여성의 정보통신기술(ICT) 교육 및 직업 참여를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Eurofound, 2023)

○ 2024년 7월 기준, OECD 평균 청년 실업률은 11%를 초과하여 전체 실업률(5%)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으며, 10개국에서는 2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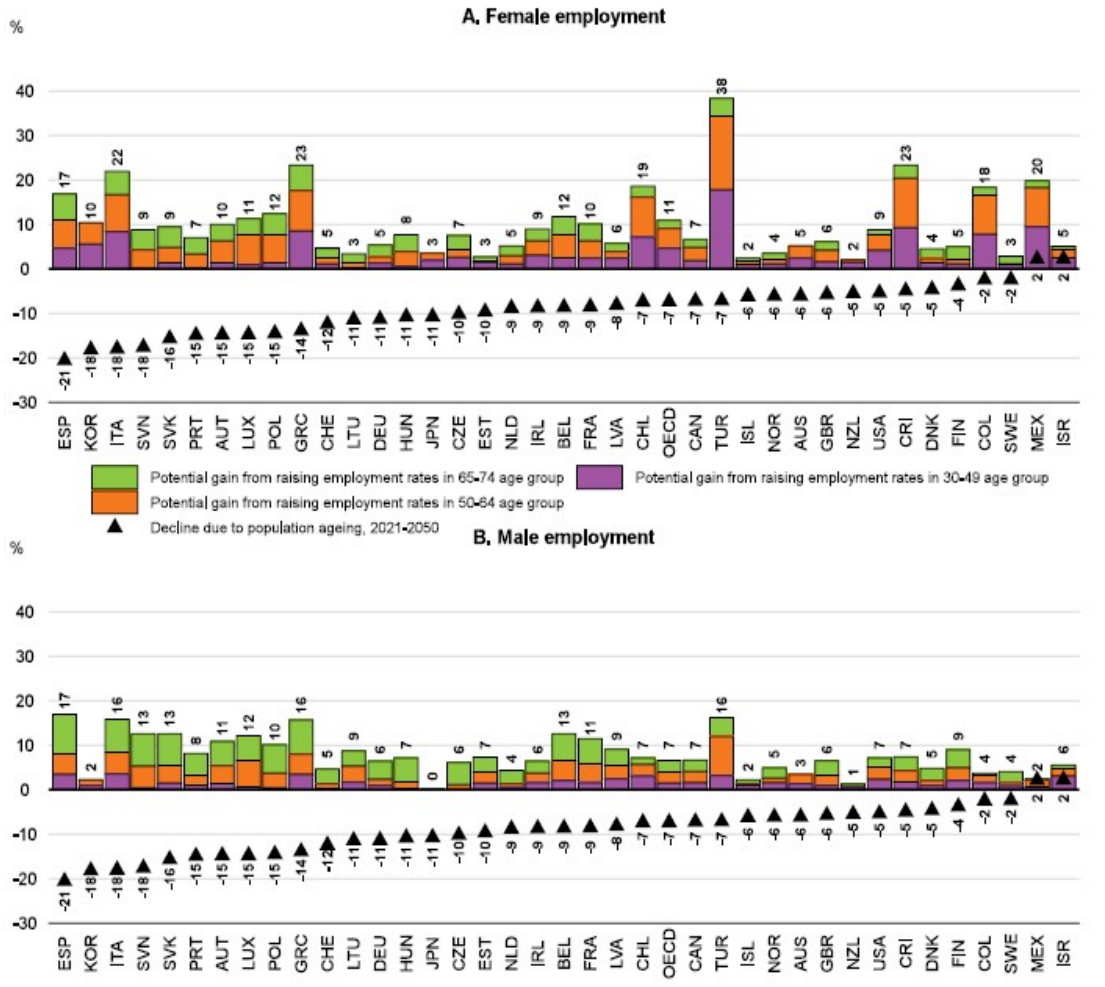
- 2022년 기준, 15~29세 인구 중 12% 이상이 취업, 교육,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인 니트족(NEET)이었으나, 이 비율은 지난 10년간 감소 추세를 보임
- 청년 고용을 확대할 잠재력이 존재하며, 노동력 부족 완화, 숙련된 노동력 확보, 불평등 해소, 사회적 배제 감소에 필수적(OECD, 2013)
- 교육성과를 개선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이 원활히 지원해야 함
  - 상급중등교육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청년을 위한 재도전 프로그램과 양질의 견습 및 인턴십을 지원해야 함(OECD, 2018a)
  - 프랑스는 2016년 니트족(NEET)이 정보통신기술(ICT) 직종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함(Eurofound, 2023)

- 영국은 청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기술 및 직업 숙련도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음

- 아일랜드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훈련과 견습 제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함

[그림 Ⅱ-21] OECD 고용 상위 수준(employment frontier)으로 전환 시 기대되는 고용 효과

(단위: %)



주: 1. 잠재적 고용 증대는 연령 및 성별 고용률이 최고 성과를 보이는 국가들의 수준으로 향상 시킬 때 고용-인구 비율 변화를 유도하는 기여도를 의미
2. 특정 연령에서 '고용 상위수준(employment frontier)'는 해당 연령에서 상위 5개국의 고용률 평균으로 정의됨
3. 각 연령에서 특정 국가의 고용률을 '고용 상위 수준(employment frontier)'으로 향상시킬 경우를 계산(단, 이미 고용률이 상위 수준 이상인 경우는 제외
4. 호주의 경우 65~74세 연령대의 고용률 데이터가 누락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2

마.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미치는 영향

○ 지난 10년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순이민이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함

■ 순이민 유입 규모는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스웨덴에서 특히 크게 나타남

- 반면 라트비아, 그리스, 리투아니아는 순인구 유출을 겪었으며(그림 Ⅱ-22), 리투아니아에서는 최근 이 추세가 역전됨

■ 2023년 OECD 국가로의 영구 이주 규모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외하고 65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 대비 28%, 2013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OECD, 2024d)

■ 이민이 고령화를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지만, 이민자의 기술과 노동시장 수요를 연계하는 정책을 통해 단기 및 중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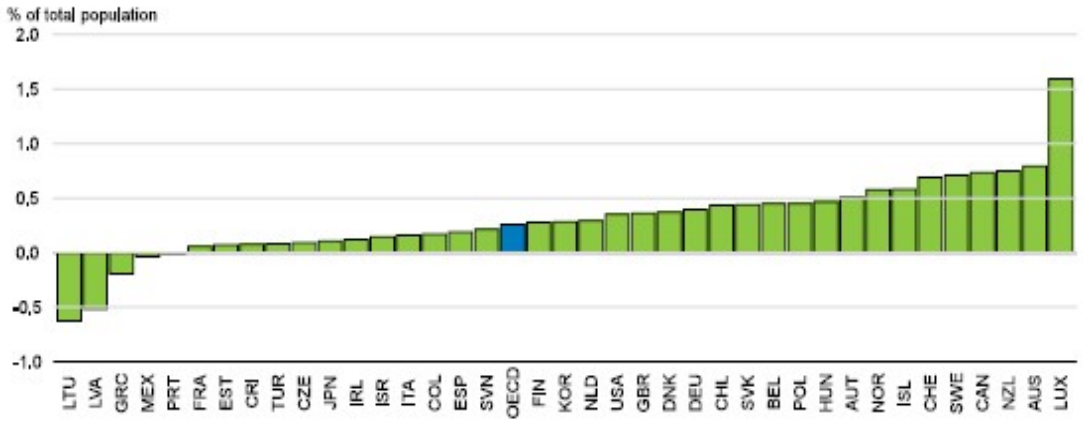
- 폴란드는 목표 지향적인 이민 전략을 통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음

■ 2014년 이후 OECD 국가에서 노동 이민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3년 영구 이주의 20%를 차지(OECD, 2024d)

■ 팬데믹 이후 이민 급증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했으나(Dynan, 2024), 숙련 근로자의 이주로 인해 출신국이 인적 자원을 상실할 가능성도 존재함(Jensen et al., 2019)

[그림 Ⅱ-22]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이민을 통해 인구가 증가함

(단위: %)



주: 1. 2010~2023년 순 이민 연 평균 증가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3

○ 이민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외국 출생 남성의 고용률은 자국 출생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높지만, 국가별 차이가 큼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외국 출생 여성은 자국 출생 여성보다 낮은 고용률을 보임(그림 Ⅱ-23)

- OECD 평균적으로 자녀가 어린(최대 4세) 이민자 어머니 중 절반만이 고용 상태이며, 이는 자국 출생 어머니보다 20%p 낮음

- 이 격차는 벨기에, 프랑스, 독일,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30%p 이상), 헝가리,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에서 작음(10%p 이하)

■ 출산 전 노동시장 참여 기간 부족, 단순 직업군 집중, 출산 후 복귀 지원 부족 등에 기인한 결과로, 공식 보육시설 이용률 부족이 또한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OECD, 2023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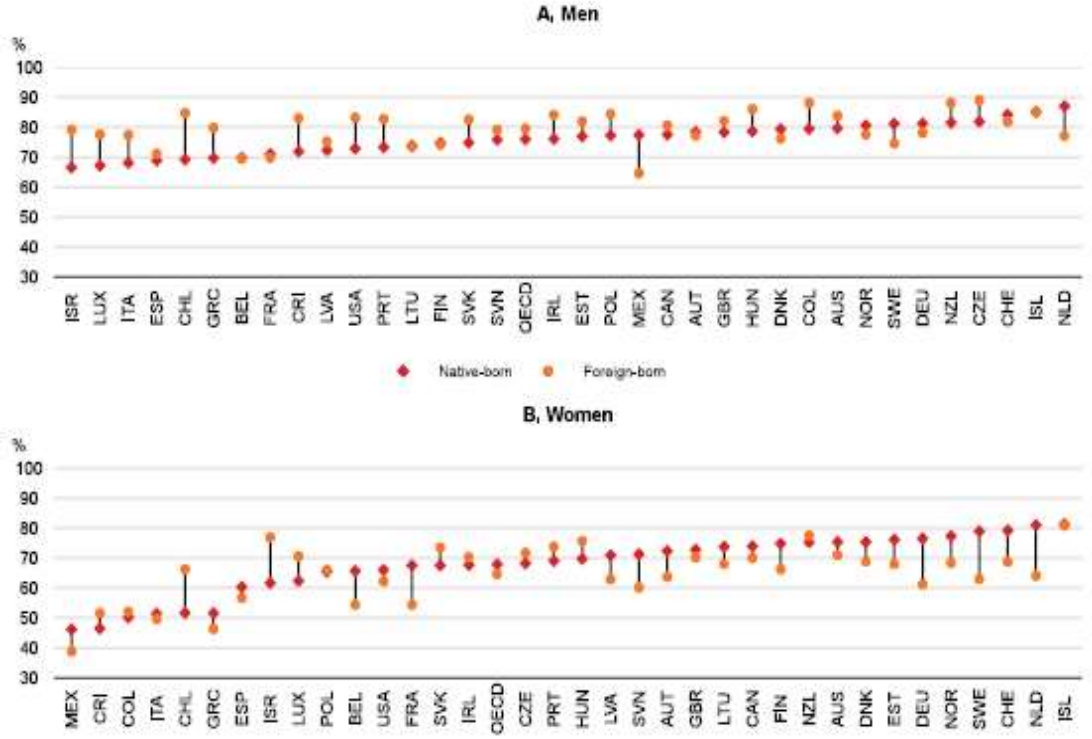
- 저렴한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면 어머니의 고용률을 높이고 자녀발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침

- 특히, 양질의 유아교육은 자녀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낮은 가정의 자녀에게 더욱 중요(OECD, 2018b)

■ 이민 여성 대상 프로그램, 통합 과정, 직업훈련 및 기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참여를 통해 경제적·사회적 통합을 강화할 수 있음(OECD, 2020d)

[그림 Ⅱ-23] 외국 출생 여성의 고용률이 자국민 여성보다 낮음

(단위: %)



주: 1. OECD 15~64세 고용률, OECD 평균은 비가중 평균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Figure 2.24

○ OECD 국가로 이민하는 사람들의 평균 학력 수준은 여전히 자국민보다 낮지만, 인재 확보 경쟁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각국 정부는 특정 기술, 직업, 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선별적 노동 이민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OECD, 2023f)

- 호주의 숙련 이민 프로그램(Australian Skilled migration programme)은 호주 내에서 충원하기 어려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최근 몇 년간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플란데런(Flanders) 지역은 부족 직업군 목록을 확대했으며, 스위스는 숙련 근로자에 대한 이민 규제를 완화
- 캐나다, 스페인, 일본은 고급 정보통신기술(ICT)을 보유한 인력을 대상으로 이민 규정을 완화(OECD, 2023f)

○ 정책은 이민자가 자신의 자격에 부합하는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이민자는 체류 기간이 길어져도 자격 수준보다 낮은 직업군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음
- 정부는 외국 학력 및 자격의 인정 강화(예: 캐나다[6]), 언어 학습 지원, 차별 해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함(OECD/European Union, 2014)
-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부문에 이민자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
  - 오스트리아, 한국, 스페인, 스위스는 노동 수요가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직업 전문 언어 과정을 운영(OECD, 2023f)
  - 독일은 2015년부터 디지털 교육 및 전문 네트워크 접근이 어려운 이민자, 난민 등을 대상으로 무료 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Eurofound, 2023)

5. 결론

○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노동시장 타이트함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노동력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고숙련 직업군과 저임금·열악한 근로 조건의 직업군에서 두드러짐

- 신생기업과 생산성이 낮은 기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더 크게 겪는 반면, 생산성이 높은 기업도 고숙련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을 겪음
-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에 따른 기술 수요 변화가 이러한 문제와 관련되며, 숙련된 노동력 확보가 필수적임
-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은 향후 노동 공급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됨

○ 정책은 노동력 부족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함

-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강화를 통해 기업에는 필요한 인적 자원을, 근로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 저임금 및 열악한 직업군에서는 임금, 근로 조건, 안전, 유연성,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여

6) 2015년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Express Entry'는 기존 경제 이민 프로그램(연방전문인력이민(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연방전문기술인력이민(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FSTP), 캐나다 경력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 CEC))에 적용하여 이민 후보를 선별하는 선발 제도임, 연방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의 지원 요건에서 캐나다 또는 해외의 대학 학위, 교육 자격증, 업무 경험, 직장 경력, 언어능력 등을 인정하고 있음
캐나다 정부, Express Entry, 2024.12.17.,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immigrate-canada/express-entry.html, 검색일자: 2025.1.6.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함

- 노동시장의 이동성과 일자리 매칭을 촉진하는 정책 또한 필수적임
- 모든 연령대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여지가 있으며, 특히 일과 생활 균형 개선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음
- 효과적인 통합 정책이 마련된다면, 이민은 노동력 부족 완화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음
- 급속한 기술 발전의 시대에 인적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경제 성장과 국민 복지의 중요한 과제로 지속될 전망

Ⅱ 주요국의 경제 및 재정전망

1. 호주

○ (경제현황) 통화 긴축과 원자재 가격 하락은 물가상승률 하락에 도움이 되었지만 성장을 저해

■ GDP 성장률은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2분기까지 연간 1%를 밑돌았으며 구매자관리지수(PMIs), 선행지표, 기업 심리를 포함한 고빈도 활동 지표는 2024년 하반기에도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긴축적인 통화 여건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는 가운데 견고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 GDP 성장률이 플러스를 유지

■ 2022년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8월 헤드라인 금리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중앙은행의 목표 금리인 2~3% 이내에 들어갔고, 9월에 2.1%로 더 떨어졌지만 예외적으로 주택비용의 상승압력은 지속되고 있음

■ 2023년 중반에 거의 50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던 실업률은 다시 상승했고, 빈 일자리 수는 감소했지만, 실업자 당 빈 일자리 수 비율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2023년 정부의 최신 기술 우선순위 목록(Skills Priority List)에 따르면 직종의 36%는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건설 및 의료 분야는 노동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호주의 주요 원자재 수출에 대한 대외수요의 약화로 인해 지난 18개월 동안 수출 가격이 하락하고 물량이 정체되었으며, 생산 및 기업 이윤에 악영향을 미침

■ 팬데믹으로 인한 이민자 급증으로 인해 2020년 중반과 2024년 3분기 사이에 3.4%의 평균 연간 노동력 성장률을 기록

- 초기에 원자재 가격 강세, 수출 증가세, 초기의 완화적 통화 여건에 힘입어 평균 연간 노동력 성장률은 고용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

○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은 덜 제한적이고 재정정책은 덜 확장적

-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2023년 11월 이후 명목 정책금리는 변동이 없었던 상황에서, 실질 정책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통화정책은 여전히 제약적이지만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5년 초까지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며, 내년부터 2026년 초까지 점진적으로 정책이 완화되어 정책금리는 3.35%로 하락할 것으로 기대

- 현재 재정정책은 완만하게 확장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3/24 회계연도와 2025/26 회계연도 사이에 연방 재정수지는 GDP 대비 2%p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 올해의 재정정책 완화는 주로 소득세 감면 및 에너지 지원금 확대를 통해 이루어진 연방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반영

    • 일부 주(state)에서도 이번 연도에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27 회계연도부터 재정건전화가 시작될 예정

  - 연간 기준으로, 재정기조는 2024년과 2025년에 다소 확장적이며, 2026년에는 약간 긴축적으로 운영하여 2025~2026년 재정 기조는 대체로 중립적

○ (경제전망) 물가상승률 하락이 지속되더라도 성장은 회복될 것

- 실질임금 상승률 강화, 재정 부양책, 2025년 금리 인하 전망으로 인해 2024년 하반기 이후부터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한 가지 위험은 서비스 분야의 지속적인 가격 압력이나 새로운 원자재 가격 충격으로 인해 물가상승률이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면 금리가 전망보다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되어 수요를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점

- 또 다른 위험은 이민의 급격한 감소가 소비 증가를 저해하고 일부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을 가중시켜 병목 현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 수출이 GDP의 1/4 이상을 차지하는 호주는 주요 무역 파트너의 무역 제한 정책 전환에 노출되어 있음

  - 호주는 특히 중국 경제의 약화에 취약하지만, 중국의 정책 부양책이 호주 수출을 예상보다 크게 늘릴 수 있어 위험의 양면성이 존재

○ (정책제언) 회복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필요

■ 올해의 재정적자 확대는 민간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내 수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향후 예상되는 고령화 관련 재정 압박과 재정 완충력 유지의 이점을 고려할 때 중기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재정 건전화가 필요

■ 향후 몇 분기 동안 통화정책의 완화는 가능하겠지만 서비스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거나 대외 여건으로 인해 호주 달러가 추가적으로 평가 절하되고 상품 가격 상승 압력이 있을 경우 완화 속도를 늦춰야 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 기후 변화, 디지털화의 상황에서 증가하는 수요에 적합한 기술을 갖춘 적응력 있는 노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임

- 이민 정책은 건설과 같은 주요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음

〈표 Ⅲ-1〉 호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9	2.0	1.1	1.9	2.5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2]	6.6	5.6	3.2	2.3	2.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1]	-1.4	-0.7	-2.2	-2.8	-2.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1]	0.8	0.2	-1.7	-2.2	-2.3

주: 1. percentage of GDP
2.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04., 저자 재작성

2. 캐나다

○ (경제현황) 높은 인구 증가가 경제활동을 지원

- 2023년 하반기에 부진했던 GDP 증가율은 2024년 상반기에 강세를 보였음
  - 1분기에 0.4% 상승한 후 2분기에는 0.5% 증가
    - 속보 추정치는 3분기 성장률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
- 민간 소비는 강력한 인구 증가의 혜택을 받고 있지만, 1인당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세를 보임
- 기업투자는 2023년 하반기 침체에서 반등하여 2분기에 2.1% 증가
- 반면, 주택투자는 2022년 초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실업률은 최근 몇 달 동안 상승하여 10월에 6.5%를 기록
  - 높은 인구 증가로 인해 노동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은 노동력보다 더디게 증가
    - 지금까지 해고는 제한적이었음
    - 한편, 결원율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 노동시장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임금 증가율은 생산성 성장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감소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4년 10월 2.0%를 기록
  - 근원 물가상승률은 헤드라인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2.3%이지만, 이 또한 둔화 추세
  - 서비스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물가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
- 2024년 상반기에는 캐나다의 최대 무역 파트너인 미국의 견고한 성장으로 인해 국제환경이 더욱 우호적으로 바뀌었음
  - 그러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은 2024년 2분기에 0.4%까지 감소하여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였음

- 3분기에 상품 수출(실질 기준)은 0.3%로 소폭 증가
- 캐나다 석유 수출은 2024년 5월에 가동을 시작한 Trans Mountain Expansion pipeline[7]의 수출 능력 향상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음

○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정상화되고 있으며 재정정책은 확장적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에 근접함에 따라 통화정책은 2024년 6월부터 완화되기 시작

-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2025년 하반기까지 기준 정책금리가 캐나다 중앙은행이 추정한 중립금리 범위의 중간 지점인 2.75%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점진적인 양적 긴축은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금리 인하가 대출 금리로 전이되기 시작하여 2025년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분명해질 것임
  - 그러나 많은 가구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출을 갱신할 때 부채 상환 비용 상승에 직면하게 될 것임

■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0.6%를 기록

- 주기적인 수입 감소, 높은 이자부담, 예외적인 보상금 지급, 재량지출의 증가로 인해 재정적자는 2024년에 추가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활동 회복에 힘입어 남은 전망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
- 연방정부는 최근 예산에서 주택구입능력 및 사회보장 지출에 중점을 둔 몇 가지 지출 조치를 시행
- 2024년 11월에 두 가지 새로운 재정 인센티브를 발표
  - 적격 상품에 대한 한시적인 소비세(GST)와 판매세(HST) 환급[8]
  - 2025년 초봄에 시행되는 250 캐나다달러 규모의 세금 환급[9]

7) 앨버타주 에드먼튼에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해안까지 원유와 정제 제품을 운반하는 다중 제품 파이프라인 시스템(https://en.wikipedia.org/wiki/Trans_Mountain_pipeline, 검색일자: 2024.12.17.)
8) 캐나다에서 저소득 개인이나 가족이 물건을 살 때 지불하는 세금으로, 납부한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캐나다 IRSA PEI 홈페이지, https://www.irsapei.ca/ko/0608-tax-benefits, 검색일자: 2024.12.26.)
9) 연방정부가 물가와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산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순소득이 15만 달러 미만인 캐나다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할 계획(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 정부 지출의 증가는 지출 효율성 향상과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 인상으로 부분적으로만 상쇄됨

- 전반적인 재정기조는 2025~2026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실질 GDP 성장률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실질 GDP 성장률은 2024년 1.1%로 전망되며, 2025년 이후에는 수출을 뒷받침할 강력한 대외수요와 투자를 뒷받침할 정책금리 인하로 인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 성장률은 인구 증가율 하락 및 노동시장 약화로 인해 2025년 둔화되다가 2026년에 다시 회복할 것으로 예상

- 노동시장 여건은 2025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월별 변동이 일부 있겠지만,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5년에 높은 서비스 가격 물가상승률로 인해 2%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예상

■ 불확실성이 높지만, 전망에 대한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음

- 한편으로는 세계 무역 정책이 더욱 제한적이거나 노동시장이 더욱 크게 악화될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며, 높은 가계 부채 상환 비용은 현재 전망한 것보다 소비자 지출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음

- 반면, 더 강한 대외수요 혹은 증가된 가계저축으로 인한 소비지출의 강화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음

■ 전망 결과는 향후 인구 추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전망은 최근 발표된 이민 목표치 하향 조정에 따라 인구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으나, 특히 일시적인 이민과 관련된 조정 속도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 (정책제언) 생산성 증가를 위한 개혁이 필요

---

https://www.canada.ca/en/crown-indigenous-relations-northern-affairs/news/2024/12/minister-anandasangaree-highlights-the-governments-tax-break-for-all-canadians-and-new-working-canadians-benefit.html, 검색일자: 2024.12.26.)

- 가계의 높은 주택담보대출과 부채 상환비용 증가는 소비자 지출을 억제함에 따라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계속 면밀하게 모니터해야함
  - 저렴한 주택 공급의 증가는 여전히 광범위한 정책 목표이며, 이는 높은 주거 관련 물가상승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최근의 높은 이민자수는 노동공급을 크게 늘렸지만 주택 시장에 부담을 주기도 함
  - 예를 들어, 외국인 자격증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정하는 등 이민자의 기술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음
  - 이는 특히 숙련된 직종과 같은 일부 부문의 노동력 부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최근 몇 년 간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우선순위로 남아있음
  - 세금 부담을 직접세에서 간접세 및 환경세로 전환함으로써 과세 시스템을 좀 더 성장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음
  - 중소기업에 대한 특혜 과세는 재고해야 함
- 특히 물리적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도 우선순위
  - 국가 혁신 역량의 핵심 동력인 R&D 집약도는 공공 R&D 지출의 증가를 통해 향상시킬 수 있음
  - 캐나다의 높은 국내 무역 장벽과 같은 규제 장벽을 줄이면 경쟁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표 Ⅲ-2〉 캐나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8	1.2	1.1	2.0	2.0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5.1	1.7	2.0	1.7	2.0
실업률(Unemployment rate)[2]	5.3	5.4	6.3	6.5	6.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3]	0.1	-0.6	-2.3	-1.3	-0.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3]	102.0	103.7	105.1	106.1	106.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3]	-0.4	-0.7	-0.9	-1.0	-1.0

주: 1. consumer price index excluding food and energy
2. percentage of labour force
3.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20., 저자 재작성

3. 중국

○ (경제현황) 성장이 둔화됨

-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4.8%로 둔화
-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 시장의 약화로 인해 여전히 감소하고 있어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감소 속도는 느려지고 있음
  - 인프라 투자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제조업 투자는 강력한 수출 수요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산업 생산은 첨단기술 산업으로 인해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소비 증가율은 높은 예비적 저축이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운송 및 통신과 같은 일부 서비스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4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0.3%를 기록
- 투입 가격 하락은 전방산업 생산자 가격 하락의 주요 원인
  -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및 혁신은 상대적으로 약한 소비 회복과 함께 물가를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음
- 도시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9월 17.1%로 여전히 높은 수준
- 대외수요의 반등은 특히 첨단 산업에서 중국의 수출에 박차를 가함
  - 투입 가격의 하락은 중국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상품 수입 역시 소폭 증가했지만, 수입 투입재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소비의 수입 비중이 낮아 더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관광 수입의 미약한 회복은 총수입 증가를 제한하고 경상수지 흑자폭을 확대

○ (통화·재정정책) 통화 및 재정정책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원

- 통화정책은 성장을 지원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가을에 소폭 완화됨

- 9월에 주요 정책금리가 20bp 하락하고 10월에 1년물 및 5년물 대출우대금리(LPR)[10]가 25bp 하락하는 등 금리 및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 비율이 여러 차례 하락하였음

-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였으며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금리 조정 메커니즘이 도입되어 특히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도시에 더 낮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게 됨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계약은 연 1회만 가능하였으나 이제는 그 이상 받을 수 있게 됨

  • 두 번째 주택에 대한 계약금 요건 완화 및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아파트 매매 가능과 같은 건전성 규제 완화로 인해 특히 대도시와 1선 도시[11] 및 리조트 타운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

  • 완공되었으나 미분양된 주택을 국가 소유 기업이 매입할 수 있도록 재대출 쿼터 요건을 완화한 조치 역시 주택 수요를 뒷받침할 것

■ 중앙정부는 우선순위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기 10년 이상 초장기 채권(2024년 GDP의 0.8% 규모)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2024년 재정정책은 좀 더 확장적

- 또한, 2023년 발행된 미사용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일부를 2024년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0.4% 규모

- 11월에 상향된 지방정부 특별채권 쿼터를 2024년과 같이 2025년과 2026년에도 GDP의 1.5% 규모로 발행할 계획

■ 지방정부의 부채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GDP의 최대 3%에 해당하는 암묵적 부채를 명시적 지방 부채로 교환할 수 있어 지금까지 인정된 암묵적 부채의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됨

- 지방 특별채권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감독은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 부채 해결 계획을 통해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의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지방정부 차원의 세입 배분과 지출 책임 사이의 근본적인 불균형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지방정부는

10) 은행이 최우량 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로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함(연합인포맥스, 2019.9.2.,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6149, 검색일자: 2024.12.11.)

11) 중국은 도시별로 경제 수준 및 문화와 특색이 다양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성을 1선 도시부터 5선 도시로 분류하고 있음. 1선 도시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으로 경제가 가장 발달해 있고 소비와 생활 수준이 가장 높은 대도시로 GDP 1조 위안 이상의 도시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1선 도시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선전(深圳)이 있음(http://m.shanghaibang.com/shanghai/mobile/news.php?mode=view&num=67548, 검색일자: 2024.12.11.)

여전히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음

■ 제3차 총회에서는 일부 주요 지출 책임을 중앙정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구상

- 이는 전국적으로 최소한의 공공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

-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승인된 프로젝트에만 자금이 할당됨

■ 전반적으로, 2025~2026년에도 지원 정책은 유지될 것

- 기계, 장비, 가전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노후 차량 보상" 프로그램은 소비와 투자를 모두 견인할 것임

○ (경제전망) 성장은 점진적으로 둔화가 지속될 것

■ 중국 경제는 불리한 인구구조 및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둔화가 지속될 것

■ 부동산 부문의 지속적인 조정은 주택투자 및 가구 판매와 같은 소비 품목에 계속 부담을 주고 있음

- 반면, 인프라 투자는 지역 특별 채권 발행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

  • 친환경 전환, 도시 재개발, 기타 환경 및 사회적 목표와 관련된 시급한 과제가 존재

■ 사회보장 개혁의 부재로 예비적 저축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한 소비 증가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음

■ 다른 나라보다 단위 노동 비용 상승이 더 빠름에도 불구하고 기술 향상과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은 수출 경쟁력을 유지시킬 가능성이 높음

- 수입의 가장 큰 단일 구성요소인 관광 수입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음

- 경상수지 흑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

■ 물가상승률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겠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일 것

■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

- 잠재적인 추가 신용 이벤트는 부동산 부문의 질서 있는 조정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

- 부동산 부문의 수요 측면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하면 성장세가 강화될 수 있지만 불균형이 더 심화되고 향후 더 급격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 미루면 암묵적 부채가 추가적으로 누적되고 추후 해결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사회보장 개혁을 미루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예비적 저축 행동이 강화될 수 있음

■ 세계 무역 제한 조치가 증가하면 수출 성장 및 산업 활동이 둔화될 것

■ 재정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가 취해지면 지출의 효과 및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음

■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감소하면 소비가 다소 증가할 수 있음

○ (정책제언)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충분

■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지원하는 통화, 재정, 금융정책이 수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 대출자들이 위약금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면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낮아지고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소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저축을 줄이기 위해 더 강력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

- 실업보험의 적용 범위를 모든 사람에게 확대하고, 연금은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제공해야 함

- 또한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치료와 의약품 목록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함

■ 일부 직종의 노동력 부족은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학교에서 습득한 기술을 더 잘 매칭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

- 컴퓨터 코딩, 영업 및 마케팅과 같은 일부 기술 및 소프트스킬(soft skills)[12]이 가장 부족

12) 개인이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협업하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김지영·윤종혁, 재직자들의 소프트스킬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 경험 분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슈브리프, No.281, 2024.5.16., p.1)

- 진로 지도는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는 기회와 초봉 및 평균 급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함

- 고등교육 졸업생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좀 더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과 더 많은 인턴십 기회가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

- 또한 교사와 커리큘럼의 질을 개선하고, 조기 진학과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줄이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직업의 대중화를 통해 직업 교육의 훼손된 이미지를 바꿔야 함

〈표 Ⅲ-3〉 중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0	5.2	4.9	4.7	4.4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1.9	0.3	0.4	1.1	1.4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1]	-6.5	-6.7	-7.6	-7.4	-6.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1]	2.5	1.4	2.1	2.9	3.2

주: 1.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27., 저자 재작성

4. 유로지역

○ (경제현황)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증가는 경제성장을 저해

■ GDP 성장률은 2024년 2분기 0.2%에서 3분기 0.4%로 증가

-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적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11월 기준 종합 구매자관리지수(PMI)는 완만한 생산 감소와 일치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음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9월 1.7%에서 10월 2%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완만하게 상승

- 근원 물가상승률은 2.7%로 9월과 변동이 없었으며, 시장 기반 물가상승률 기대치는 2025년 이후 목표치인 2%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 물가가 연간 4% 상승하는 등 기조 물가상승률 압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동시에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며 특히 행정 및 지원 서비스, 건설 분야의 노동력 부족이 두드러짐

- 협상으로 결정된 명목임금은 2분기 3.5%에서 3분기 5.4%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EU 지역의 9월 계절 조정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낮은 수준인 6.3%를 기록

■ 금융 여건이 더욱 완화되고 기업의 대출 수요가 증가했으며 주택대출 및 기타 가계 대출이 크게 반등

- 2024년 상반기에 파산 건수는 건설 및 금융 활동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여 최고치를 기록

■ 에너지 제품의 적자 폭이 줄어들고 해외 경제활동이 개선되면서 9월 상품 무역 흑자를 뒷받침

- 동시에 상품 무역은 제한적인 금융 여건, 무역 마찰,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인해 계속 영향을 받음

-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EU 지역의 여파는 완화됨

-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에너지 집약적 기업의 생산량과 수익이 감소하는 등

최근의 에너지 가격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은 고르지 못했음

-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국가들은 2026년 3월까지 400만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임시 보호를 제공

  • EU는 우크라이나 기금(Ukraine Facility)에서 500억 유로(EU 지역 GDP의 0.5%)를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동결된 러시아 자산 수익금으로 350억 유로(EU 지역 GDP 0.4%)의 추가 대출을 승인

○ (통화·재정정책) 거시경제 정책의 긴축이 완화될 것

■ 전반적인 EU 지역의 재정 기조는 2024년 긴축을 유지하고 2025년과 2026년에는 다소 완화되어 3년간 누적 긴축 규모는 GDP의 1.5%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위기와 높은 물가상승률에 대응하기 위한 재량적 재정 조치는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철회될 것으로 전망

- 유럽 중앙은행은 이러한 재정 지원이 2024년 GDP의 0.4%, 2025년과 2026년 GDP의 0.1%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추가적인 군사 지출이 발생하였으며 차세대EU 프로그램[13]은 EU 지역 연간 GDP의 약 0.5%에 해당하는 공공투자를 지원하고 있음

- 많은 국가의 노동력 부족을 고려할 때, 이 지출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해야 함

■ 유럽 중앙은행은 2024년 6월부터 예금금리(deposit facility rate)를 누적적으로 75bp 인하하여 재정 기조의 긴축성을 완화하기 시작

- 정책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여 2024년 말에는 3%, 2025년 말에는 2%로 연속적으로 인하할 전망

- 금리 인하는 총수요를 뒷받침할 것이나,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기조 물가상승률 압력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단기 물가상승률 효과는 노동력 부족과 2026년 말까지 GDP의 2.5%에 달할 것으로

13)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고, 녹색과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7,500억유로를 보조금과 대출 형식으로 회원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국제기구 및 주요국 재정동향 2024년 6월호, p.3)

추정되는 차세대EU 프로그램과 관련된 추가적인 공공지출에서 비롯됨

○ (경제전망) 내수가 회복되면서 경제성장이 강화될 것

- 금융 여건 완화와 안정적인 에너지 원자재 가격에 따라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많은 직종의 노동력 부족과 역사적으로 낮은 실업률이 임금 상승의 정상화를 늦추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할 것
- 물가상승률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실질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소비를 뒷받침할 것
- 민간투자는 자금조달 여건 완화와 차세대EU 프로그램에 따른 공공투자 지출로 뒷받침될 것
-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노동 비용 압력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025년 말에는 근원 물가상승률도 유럽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와 일치하는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전망에 대한 위험이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
  - 중동 분쟁 격화와 같은 지정학적 긴장이 악화되면 대외수요에 부담이 될 것
  - 홍해 운송 차질로 인한 더 높은 수송 비용은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음
- EU 지역에서는 역사적으로 높은 파산 건수와 여전히 존재하는 상업용 부동산 및 비은행 금융 부문의 금융 취약성으로 인해 금융 안정성 위험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은 축적된 가계저축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민간소비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
- 또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지속적인 감소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앞당기고 중국의 재정지원 강화와 함께 대외수요를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신중한 거시경제 정책과 구조개혁이 필요

-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화와 관련된 상당 규모의 투자가 필요
- 이와 동시에 미래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완충력을 재건하기 위해 신중한

재정정책이 요구됨

- 차세대 EU 기금의 효과적인 지출은 중기 생산 능력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단기 물가상승률 위험과 관련이 있으므로 EU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필요

■ 새로운 EU의 재정준칙은 중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과 안전장치를 장려하지만 기존의 초과 적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효과적인 지침이 수반되어야 함

- 공정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과 효과적인 국가 기금의 사용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규제를 더 이상 완화해서는 안됨

■ 금융 부문의 잠재적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정책 도구를 사용하여 통화정책 기조를 섣불리 완화해서는 안됨

■ 또한, 고숙련 비EU 노동자를 유치하고 EU 내 노동 이동에 대한 규제 및 행정 부담을 줄여서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음

〈표 Ⅲ-4〉 유로지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3.6	0.5	0.8	1.3	1.5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3]	8.4	5.4	2.4	2.1	2.0
실업률(Unemployment rate)[1]	6.8	6.6	6.4	6.3	6.2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3.5	-3.6	-3.1	-2.9	-2.7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94.5	95.0	96.0	97.0	97.6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1.2	2.7	3.7	3.7	3.7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49., 저자 재작성

5. 프랑스

○ (경제현황) 2024년 경제활동은 예상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음

- 2024년 초 GDP 성장률은 완만했으나 강력한 대외수요와 지속적인 공공지출에 힘입어 예상치를 상회
- 최근에는, 민간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
  - 민간소비는 2024년 상반기에 약세를 보였으나, 올림픽으로 인해 3분기에는 지출과 생산이 증가
- 실질임금 상승과 가구 신뢰도 개선으로 인해 2025년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보임
  - 평균적으로, 노동력 부족은 완화되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건설, 의료, 농업 부문과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수요는 낮은 금리로 인해 여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투자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기업투자는 3개 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신뢰도도 하락
- 물가상승률은 안정세를 보이며 10월에 조화 기준(harmonised basis) 1.6%로 하락하여 202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그러나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
- 미국의 견고한 성장 및 공급 병목 현상의 지속적인 완화가 수출의 점진적인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음
  - 그러나 해외 수요는 아직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프랑스가 그동안 잃었던 수출 시장 점유율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음

○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 완화는 예상되는 재정정책 긴축을 상쇄하고 있음

- 예상보다 적은 부가가치세 세수 및 에너지 생산자에 대한 특별세 세수로 인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5.5%에서 2024년 6.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2025년까지 재정적자를 5%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조정액의 2/3는 고소득자, 대기업, 항공업, 공해 차량, 에너지 생산업체를 포함한 세금 인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3은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 분야의 지출 삭감으로 충당할 계획

- 지방정부 절감액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한 일부 조치는 아직 완전히 구체화되지 않음

- 따라서 이 전망은 2025년 기초재정수지의 구조적 조정액이 GDP 대비 1%라고 가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 전망치인 1.4%보다 낮은 수준

- 2026년에는 정부의 계획과 유럽위원회 권고에 따라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0.5%p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

■ 통화정책이 완화되면서 주택 신용 감소세가 둔화되고 있음

-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평균 금리는 8월 3.6%로 1월 정점을 찍은 이후 약 60bp 하락

  • 그 결과, 새로운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3월~9월 사이에 50% 정도 증가한 131억 유로를 기록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5월 최고치인 266억 유로에는 훨씬 못 미치며 신규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 대출을 상쇄하지 못해 미상환 주택담보대출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경제전망) 경제성장은 2025년 둔화되다가 완만한 속도로 반등할 것

■ 이월효과의 약화와 공공지출 제약으로 인해 경제성장은 2024년 1.1%에서 2025년 0.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재정긴축은 성장에 역풍이 되겠지만, 그 영향은 물가상승률 하락과 역내 통화정책 완화 효과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소비는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실질임금은 물가상승률이 완화되면서 2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손실을 회복할 것

■ 주거용 부동산 투자는 저금리에 힘입어 2024년 이후 건축 허가가 반등함에 따라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우호적인 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투자는 2025년 초까지

여전히 억눌려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불확실성이 개선되면서 2025년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일 것

- 프랑스 경제회복 프로그램(France Relance)[14]과 프랑스 2030 프로그램(France 2030)[15]이 제한적이지만 공공투자를 뒷받침할 것

■ 고용서비스 등록을 의무화하는 사회보장(Revenu de Solidarité Active) 개혁과 연금수급 연령 상향으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생산량 증가 둔화가 일자리 창출을 약화시켜 2025년 실업률이 약간 상승할 것으로 보임

■ 2025년 2월에 규제된 전기요금이 인하되면서 물가상승률은 약 0.3%p 하락하여 추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

■ 2026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0%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주택 및 기업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질임금 상승과 저축률 하락이 민간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보임

■ 위험은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음

- 최근 몇 달 동안 50bp에서 안정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국채 금리 스프레드는 국회 해산 이후 70~80bp까지 급등

-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은 봄에 강등된 후 가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이러한 차입 비용 상승은 부채 상환 비용을 상승시키고 민간투자를 구축할 위험이 있으며 잠재적으로 성장을 저해

- 정책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정부의 예산안 합의는 시장을 빠르게 안심시키고 스프레드를 좁히며 재정 압박을 완화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산이 채택되지 않으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

14) 코로나19 경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9월에 발표한 경제회복 프로그램(프랑스 외교부 홈페이지, https://www.diplomatie.gouv.fr/en/french-foreign-policy/economic-diplomacy-foreign-trade/promoting-france-s-attractiveness/france-relance-recovery-plan-building-the-france-of-2030/, 검색일자: 2025.1.2.)

15) 2021년 10월에 발표한 산업부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로드맵으로 2030년까지 총 30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할 계획(에너지경제연구원, https://www.keei.re.kr/boardDownload.es?bid=0014&list_no=87592&seq=1, 검색일자: 2025.1.2.)

- 또한 예상보다 약한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은 세입을 감소시켜 정부의 5% 재정적자 목표를 달성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높아진 재정위험을 완화해야 함

■ 2025년 정부 예산이 채택된다면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긍정적인 진전이지만 정부 부채를 크게 줄이려면 추가적인 조치가 필수

- 중기 재정전략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도 필수적
-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도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
- 디지털 기술의 광범위한 도입과 규제 장벽의 감소는 생산성 향상을 뒷받침할 것
- 2023년에 도입된 사회수당과 연금 개혁은 이미 고령층과 저숙련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음
  - 그러나 경력이 중기와 말기에 있는 근로자를 위한 교육, 특히 디지털 기술 교육을 장려하는 등 노동시장 통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
  - 또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를 줄이기 위한 이니셔티브는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

〈표 Ⅲ-5〉 프랑스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6	1.1	1.1	0.9	1.0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3]	5.9	5.7	2.4	1.6	1.8
실업률(Unemployment rate)[1]	7.3	7.3	7.4	7.7	7.6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4.7	-5.5	-6.1	-5.5	-5.2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115.5	116.8	120.3	123.9	127.0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1.2	-1.0	-0.2	-0.1	-0.1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3. 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excluding food, energy, alcohol and tobacco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56., 저자 재작성

6. 독일

○ (경제현황) 높은 불확실성과 약한 대외수요는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음

- 2024년 2분기 GDP는 연율 기준 1.1% 감소한 이후 민간소비 및 공공소비에 힘입어 3분기에 0.4% 증가
-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및 정책 설계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이 투자자와 소비자 신뢰도에 부담을 주고 있음
- 9월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4.6% 감소
  - 에너지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9월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생산은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으며 변동성이 큰 자동차 생산은 8월 크게 상승한 이후 감소
  - 그러나 제조업 주문은 9월 크게 증가(+4.2%)
- 연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식품 및 서비스 가격의 증가에 힘입어 9월 1.8%에서 10월 2.4%로 상승
  - 10월 서비스 가격 물가상승률이 4.8%로 강하게 나타남에 따라, 근원 물가상승률은 9월 3.0%에서 10월 3.3%로 증가하여 고착화됨
- 2024년 3분기 근로자 1인당 명목임금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하여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소매 판매량 회복을 뒷받침
  - 노동시장은 일부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안정적인 실업률과 역사적 기준에 비해 높은 빈 일자리수로 인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전히 심각한 노동력 부족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7월과 8월 모두 증가했던 수출액은 9월에 1.7%로 감소
  - 비 EU 국가의 수출은 10월에 추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약화로 인해 2023년 10월 수준보다 낮은 6.5%를 유지
  -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어 최근 몇 달 동안 수출 주문이 반등

○ (통화·재정정책) 재정정책이 긴축되고 있음

■ 지속적인 물가상승 하락으로 인해 재정기조는 GDP 대비 2024년 0.6%, 2025년 0.4%씩 긴축하고 대체로 2026년에 중립을 유지할 것

- 긴축은 2023년 11월 대법원이 특별기금을 연이어 투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한 영향을 부분적으로 반영
  - 이 판결로 인해 기후 및 전환 기금(Climate and Transformation Fund, KTF)의 가용 자금이 600억 유로로 감소하고 에너지 지원 기금이 폐지됨
- 이는 친환경 전환에 대한 공공투자 지출 및 가구와 기업의 민간투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감소시킴
  - 전기차 보조금은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판매량이 크게 감소하였고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한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장하려던 계획이 취소됨
  - 전반적으로, 기후 및 전환기금 지출은 2024년 GDP 대비 1.1% 감소하였으며, 2025년에는 이의 절반인 0.6%가 감소
  - 에너지 지원 기금 종료로 인해 2024년 1월부터 에너지 가격 지원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계획하였던 전력망 요금 인하 정책이 취소됨

○ 2025년 예산안 협상 실패와 연립 정부의 몰락으로 중기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음

■ 2024년의 지출 수준이 2025년 잠정 예산안에도 그대로 이어져 재정 여건이 긴축적일 것으로 보임

- 2023년 대법원 판결 이후 기후변화기금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가 보류되었으며 2025년 나머지 프로젝트의 1/3은 아직 결정되지 않음
  - 2024~2025년 특별방위기금에 GDP의 1.9%를 지출할 계획은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음

■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투자에 대해 더 관대한 감가상각 허용, 전기차 구매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행정 부담 감소, 고령 근로자 및 이민자의 노동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등 여러 조치를 시행할 계획을 세움

-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대부분은 2025년 2월로 예정된 조기 선거 이전에는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전망) 민간 소비 증가로 경제가 서서히 회복될 것

■ 2024년에 정체되었던 GDP는 2025년에 0.7%, 2026년에 1.2%로 성장할 것

- 명목임금 상승, 물가상승률 하락, 금리 하락이 민간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
-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조달 및 지원책 설계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 여건의 점진적인 완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대기업 현금 완충력 및 투자 수요, 디지털화, 친환경 전환은 투자를 서서히 회복시킬 것
- 주요 수출 시장 회복으로 인해 2025년 수출 성장률은 강화될 것
- 제한적인 재정정책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5년 2%로 수렴할 것이지만, 숙련된 노동력 부족에 따른 임금 상승의 영향을 반영하여 근원 물가상승률은 고착화될 것

■ 친환경 전환 과정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자금조달 및 지원책 설계와 관련된 정책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면 소비자와 투자자 신뢰도 회복에 악영향을 미치고 기업투자와 민간 소비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

- 국제 무역 장벽이 강화되면 세계 가치사슬에 고도로 통합되어 있는 독일 제조업에 특히 영향을 미칠 것
-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 에너지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산업 생산과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 긍정적인 점은,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강해지면 투자 및 기타 상품 수출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

○ (정책제언) 성장을 지원하고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

■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계획에 대한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계획 및 승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

- 디지털화 속도를 높이려면 디지털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며 공통의 IT 표준을 설정하고 각급 정부 간 행정 절차의 조화를 촉진하는 등 빠른 속도의 공공 부문 현대화가 필요

■ 숙련된 노동력 부족도 투자의 주요 장벽

- 기업 자산에 대한 상속세 면제와 기존 건물 투자에 대한 자본소득세 면제를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노동에서 자본소득 및 자산으로 이동하면 노동공급 인센티브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여기에는 현행의 부부 공동소득 과세 및 건강보험 개혁이 포함되어야 함

  • 현행 제도는 부 소득자(second earners)에게 매우 가파른 한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여성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시간제 일자리에 하향 지원하게 만들기 때문

- 조기 퇴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면 고령의 고숙련 근로자의 노동공급 인센티브를 개선하고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압박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금 지출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최근 도입된 중앙 집중적이고 투명한 전자조달 플랫폼을 모든 수준의 정부 입찰에 의무화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조달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면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

〈표 Ⅲ-6〉 독일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4	-0.1	0.0	0.7	1.2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	8.7	6.0	2.4	2.0	1.9
실업률(Unemployment rate)[1]	3.1	3.0	3.5	3.6	3.5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2.2	-2.6	-2.3	-2.0	-1.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64.2	64.5	66.0	67.2	68.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4.4	5.9	6.5	6.6	6.6

주: 1. percentage of labour force
2. percentage of GDP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60., 저자 재작성

7. 일본

○ (경제현황) 견조한 수익과 임금 성장이 내수를 뒷받침하고 있음

■ 2024년 3분기 실질 GDP는 견조한 민간 소비에 힘입어 0.2% 증가

- 2024 회계연도 임금 협상 결과와 여름 보너스를 반영하여 명목임금이 상승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이 40년 만에 5.1%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더욱 상승할 것
- 기업투자는 기업 이익 호조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 9월 실업률은 2.4%이며 정보 서비스, 건설, 운송, 숙박업에서의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한 상황
- 10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 목표치를 상회하는 2.3%인 반면,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상승률은 1.6%로 완만해짐
- 실질임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월간 지표에 따르면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민간소비의 하방 압력이 약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남

■ 수출은 반도체 관련 제품 시장의 회복과 2024년 상반기 생산에 부담을 주었던 인증 테스트 문제 이후 자동차 출하의 재개에 힘입어 증가하고 있음

-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해 산업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
- 일본 중앙은행의 9월 탄칸 설문조사(Tankan Survey)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은 2024 회계연도에 명목자본지출이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기업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음
- 관광 부문의 회복이 탄탄해지면서 서비스 수출을 뒷받침하고 있음

○ (통화·재정정책) 거시경제 지원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지난 7월, 일본 중앙은행은 단기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하고 2026년 1분기에 일본 국채(JGB) 매입 규모를 반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

- 일본 중앙은행은 2026년 1월 약 3조 엔을 목표로 매월 국채매입을 분기 당 약 4,000억 엔씩 줄여서 2026년 3월까지 국채 보유량을 약 7~8% 감소시킬 것

- 2% 내외의 지속적인 물가상승률과 견조한 임금 성장에 대한 OECD 전망에 따르면 단기 정책금리를 2026년까지 1.5%로 점진적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남

■ 기조 기초재정수지적자(underlying primary deficit)는 2024년 GDP의 1.6%에서 2026년 GDP의 1.3%로 축소되기 전에 새로운 경제 패키지의 영향으로 2025년 일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경제 패키지에서는 가스 및 전기 보조금을 재개하고 높은 연료 가격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확대

- 또한 반도체 생산 및 R&D에 대한 장기 투자 지원 및 채무 보증(2030 회계연도까지 GDP의 1.7%인 10조 엔)과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현금 지급(각 3만 엔)도 포함

- OECD 전망은 2025 회계연도와 2026 회계연도에 국방 지출이 약 1조 엔(GDP의 0.2%) 더 늘어날 것으로 가정

- 2028 회계연도까지 약 3조 6천억 엔(GDP의 0.6%) 증가하는 아동 관련 정책 예산은 지출 개혁을 통해 보전

- GDP 대비 총공공부채 비율은 2026년 235%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 (경제전망) 내수는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

■ 2025년 실질 GDP는 1.5%로 성장하고 2026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내수는 타이트한 노동시장과 높은 이윤이 임금 성장과 민간 소비를 뒷받침함에 따라 성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

- 기업투자는 기계 및 건설 분야의 높은 수주 잔고와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반영하여 2025년에 견고한 수준을 유지할 것

- 실업률은 2026년에 2.3%로 낮아질 것

-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임금 상승으로 인해 단위 노동 비용이 상승하면서 2% 목표에 수렴할 것으로 전망

■ 하방 위험으로 무역 파트너 국가의 예상보다 약한 수요와 수출을 감소시키는 지정학적 긴장이 존재

- 급격한 엔화 절상은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킬 것이며 비용과 임금이 물가에 전가되는 정도가 줄어들면 가격-임금 선순환이 깨져 투자가 위축될 수 있음

- 일본의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 상실과 국가 위험 프리미엄의 증가는 금융 부문과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높은 임금 상승세가 지속되면 소비가 전망보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강한 대외수요가 수출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음

○ (정책제언) 높은 정부 부채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

■ 인구통계학적 역풍을 해결하려면 노동공급을 더욱 늘리고 생산성 성장을 다시 활성화해야 함

- 여성과 고령 근로자가 상승하고 있으나, 일본의 이원화된 노동시장에서 높은 비율의 비정규직이 여성과 고령자의 고용을 저해하고 직무 교육을 감소시키며 생산성 성장을 둔화시킴

  •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 사회보장 혜택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 확대가 핵심

-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0년 동안 3배 가까이 증가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 이민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그들의 교육 및 주택 문제를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이민자 통합 정책이 일본의 외국인 근로자 유치 능력을 향상시킬 것

- R&D 세금 공제를 재설계하고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혁신 프레임워크와 스타트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하는 것은 생산성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인구 고령화 또한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악화시킬 것

-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 조치와 함께 중기 재정건전성 경로를 설계하고 실행하며, 대규모 거시경제 충격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재정 완충력을 재건하는데 도움이 될 것

〈표 Ⅲ-7〉 일본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2	1.7	-0.3	1.5	0.6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2.5	3.3	2.6	1.9	2.1
실업률((Unemployment rate)	2.6	2.6	2.5	2.4	2.3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4.2	-3.8	-2.3	-2.2	-1.8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239.6	238.1	237.9	236.5	235.3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1.9	3.8	4.5	4.2	3.9

주: 1.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2. percentage of GDP, 2015년 가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91., 저자 재작성

8. 한국

○ (경제현황) 수출이 성장을 주도했지만 약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실질 GDP는 2024년 1분기에 크게 성장하고 2분기에 약간 축소된 이후, 3분기에 소폭 성장하는데 그침

- 민간 소비, 민간 비주택투자, 공공소비 및 투자의 긍정적인 기여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세를 보임
- 2024년 10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1.3%로 약화되어 2% 물가상승률 목표를 훨씬 밑돌았으며, 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1.8%를 기록
- 실업률은 2.7%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근접한 반면, 고용률은 2024년 10월 62.7%로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
- 빈 일자리 수는 감소하고 명목임금상승률은 완만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조선, 보건 및 복지와 같은 부문에서는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음

■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제조업 제품에 대한 세계 수요 강세가 지난 몇 분기 동안 성장을 견인했지만, 제조업 수출의 성장 기여도는 약화되고 있음

- 3분기 수출은 감소했지만, 수입은 공장 투자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
- 통관 수출은 최근 약세 이후 강화되고 있으며, 11월 첫 20일 동안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

○ (통화·재정정책) 통화정책은 완화되고 있음

■ 한국의 중앙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 11월 말 3.0%로 인하하여 완화 주기를 보이고 있음

- 물가상승률이 목표치를 밑돌면서 정책금리는 2025년 2.5%로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
- 지속적인 법인세 수입 결손으로 인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
- 정부 예산안에 따른 지출 증가율이 낮을 것이며 2024년 기업 실적 호조로 향후 세수가 증가하여 재정수지는 2025년부터 개선될 것
- 에너지 위기 이후 일시적인 유류세 감면은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나 2025년 중반 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 2026년에도 약간의 추가 긴축이 예상되며, 2025~26년 기간 동안 누적 재정 긴축은 GDP의 약 1%에 달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내수가 점점 더 성장을 견인할 것

■ 2024년에 2.3%로 강화된 생산량 증가율은 2025년과 2026년에 2.1%로 안정될 것으로 전망

- 저금리와 실질 소득 증가로 구매력이 높아짐에 따라 민간소비 및 투자가 경기 확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

■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은 2%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통화정책 완화를 위한 확고한 노력으로 인해 2025년 말까지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

- 경제활동 참가율은 특히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실업률은 낮은 수준에서 안정되어야 함

■ 고금리 및 가처분소득 성장 약화로 인해 예비적 저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낮아질 수 있음

- 반대로, 소비자 심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면 성장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음

○ (정책제언) 상호 연결된 문제에 일관된 정책이 필요

■ 통화정책이 금융 안정성의 부차적인 목표보다 물가 안정성 목표를 명시적으로 우선시하지 않으면, 물가상승 기대심리가 안착되지 않아 불필요한 생산량 감소와 일자리 손실로 이어짐

- 거시경제 규제 강화, 주택 소유에 대한 재정적 지원 축소, 주택공급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데 훨씬 더 바람직한 수단

-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하면 재정 긴축은 계획대로 계속되어야 하며, 제안된 재정준칙을 이행해야 함

- 환경세, 배출권 거래제 경매 확대 및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 효율화는 사회보장 및 가족

정책의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창출할 수 있음

- 한국의 노동력 부족은 조선업, 의료, 복지 분야에서 고령화로 인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 수명 및 연금 납입기간 연장, 이민자 수 증가 및 이민자 통합 정책 개선, 청년 고용 증가 등이 필요

-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고용과 출산율을 동시에 올리기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보호를 완화하는 동시에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보호를 개선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과 가족보다 일이 우선시되는 문화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 요소

〈표 Ⅲ-8〉 한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7	1.4	2.3	2.1	2.1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5.1	3.6	2.3	1.8	2.0
실업률((Unemployment rate)	2.9	2.7	2.7	2.6	2.7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0.0	-0.7	-3.1	-2.8	-2.1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46.2	53.6	56.6	59.4	61.5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1.3	1.9	4.6	4.5	4.3

주: 1. 식품 및 에너지가격 제외
2. percentage of GDP, 2015년 가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195., 저자 재작성

9. 네덜란드

○ (경제현황) 경제가 개선되고 있음

■ 2024년 GDP는 2분기에 1% 증가한 후, 3분기에 0.8% 증가

- 최근의 개선은 주로 민간 및 공공지출, 투자가 주도
- 헤드라인 및 근원 물가상승률은 타이트한 노동시장이 지속적으로 비용 상승 압력을 가하고 있어 2024년 10월 3.3%를 기록
- 실업자 당 빈 일자리 수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파산은 2022년부터 증가하여 2024년 초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서면서 일부 노동공급이 증가
- 단체 노동 협약에 의한 임금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2024년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
  - 실질임금 상승률은 2024년 1분기에 2019년 수준을 넘어섰고, 소비자 신뢰도는 2024년 초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11월에 장기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유지
- 기업 심리는 2024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다양한 분야와 기술 수준에서 노동력 부족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가운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 소규모 개방 경제인 네덜란드는 세계 무역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

- 최근 무역 개선이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현재 EU 무역 파트너의 약세로 인해 제조업의 단기 수출 여건 평가가 악화되고 있음

○ (통화·재정정책) 재정정책은 확장적

■ 재정적자는 정부의 사회보장 및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인해 2024년 GDP 대비 1.3%에서 2026년 2.4%로 확대될 전망

- 2023년 예산에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후 정부는 인프라, 질소, 기후정책, 국방 지출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킬 것
- 정부는 소득세에 새로운 세율 구간을 도입하여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의 구매력을 지원함에 따라 수입을 GDP 대비 0.4% 감소시킬 계획

- 추가 조치에는 임대료 수당 인상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추가 지급이 포함

- 이러한 지출 증가는 교육, 공공 서비스 및 개발 원조 분야의 지출 삭감으로 부분적으로 상쇄됨

- 전반적으로 부채 비율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인 2023년 GDP 대비 45.1%에서 2026년 47.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성장이 강화됨

■ 세계 무역 개선에 힘입어 GDP 대비 성장률은 2024년 0.9%에서 2025년과 2026년 1.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임금이 과거의 높은 물가상승률 수준을 따라잡으면서 실질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소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

  - 연간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4년 3.2%, 2025년 2.7%, 2026년 2.5%로 둔화될 것

  - 근원 인플레이션은 2025년 중반까지 3%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6년에는 2.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상승세가 계속 상승 압력을 가할 것

- 파산율이 정상화되면서 노동력 재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실업률은 2024년 3.7%에서 2026년 3.9%로 소폭 상승할 것

- 투자는 점진적인 금리 하락에 힘입어 회복할 것

- 이러한 전망은 상당한 위험에 둘러싸여 있음

  -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대외수요에 타격을 주고 수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유로존 정책금리가 하락함에 따라 다른 EU 국가보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국내 물가상승률 압력이 높아져 가격 경쟁력, 구매력, 가계소비에 부담을 줄 수 있음

- 긍정적인 측면은, 가구가 그들의 초과저축의 많은 부분을 소비하여 성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 (정책제언) 타이트한 노동시장을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필요

■ 네덜란드의 건전한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 확장적인 기조를 가능하게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 압력과 상당 규모의 투자 필요성이 중기적으로 증가할 것

- 에너지 믹스[16]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 정부는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지원해야 함

- 정부는 노동시장 압력을 완화하고 생산성을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오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세금 및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고 특정 유형의 투자에 대한 왜곡을 제거하면 노동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생산성 향상 투자를 늘릴 수가 있음

  • 복지와 세금 공제가 적은 시스템은 추가 근로 시간의 순이익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근로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음

  • 비슷한 직종의 계약 유형 간에 세율과 사회보장 기여금을 일치시키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용이해져 노동 생산성 향상에 필요한 숙련 기회를 개선할 수 있음

  • 디지털 기술 향상과 디지털 기술 채택의 증가는 생산성 증가를 더욱 촉진할 수 있음

〈표 Ⅲ-9〉 네덜란드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5.0	0.1	0.9	1.6	1.6
조화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1]	11.6	4.1	3.2	2.7	2.5
실업률((Unemployment rate)	3.5	3.5	3.7	3.8	3.9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0.0	-0.4	-1.3	-2.1	-2.4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52.7	49.8	49.8	51.0	52.6
마스트리히트 국가채무(Maastricht definition)[2,3]	48.4	45.1	45.1	46.3	47.9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6.6	9.9	10.1	10.3	10.4

주: 1. 식품, 에너지가격, 알코올 및 담배 제외
2. percentage of GDP, 2015년 가격
3. 마스트리히트 정의는 일반 정부 채무를 시장 가치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출, 채무 증권, 통화 및 예금만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213., 저자 재작성

16) 에너지믹스는 섞는다는 뜻의 단어인 'Mix'를 적용한 합성어로 에너지원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사이언스온, 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Trend.do?cn=SCTM00111008, 검색일자: 2024.12.20.)

10. 스웨덴

○ (경제현황) 성장은 여전히 미약하지만,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경제활동은 민간소비 및 투자가 모두 위축되는 등 여전히 침체된 모습을 보임

- 월별 GDP, 3분기 GDP 잠정치, 산업 생산을 포함한 최근 지표에 따르면 이러한 부진한 추세가 3분기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임

- 스웨덴 중앙은행의 주요 지표인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된 소비자물가지수로 측정된 물가상승률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해 2024년 6월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10월 1.5%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과 금리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재정은 여전히 긴축적이어서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시하고 있음

- 건설 부문은 주택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차입 비용 상승과 미지근한 주택 시장으로 인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교육과 의료 등 일부 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이 지속되고 있지만, 실업률이 상승하고 빈 일자리수가 줄어드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약화되었음

- 기업의 채용 계획과 기업 신뢰도와 같은 선도적 지표는 점진적인 회복을 보이고 있음

■ 독일과 기타 유로 국가와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의 수요 약화와 함께 스웨덴 크로나 약세는 스웨덴의 수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침

- 세계 금융 여건의 완화와 낮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단기적인 금융 안정성 위험이 일부 완화되었음

○ (통화·재정정책) 거시경제 정책 기조가 완화로 전환되었음

■ 중앙은행은 2024년 5월 4%였던 정책금리를 11월 2.7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 2025년 초까지 정책금리가 50bp 더 하락하는 등 지속적인 통화 완화가 예상

- 2025년 재정정책은 약간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

  • 2025년 예산안에는 가구, 의료, 노인복지, 국방에 초점을 맞춘 총 606.5억 SEK(GDP의 0.9%) 규모의 새로운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재원은 구조적 절감을 통해 마련

- 고용 세액 공제 감소, 연금 수급자 세금 감면, 한계세 인하, 운송 연료 및 항공 세금 감면, 투자 저축 계좌 세금 감면 등 가구 감면에 GDP의 약 0.4%가 할당됨
- 재정 프레임워크와는 별도로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액 233.5억 크로나를 배정
- 2026년 재정기조는 현재의 국내 프레임워크 하에서 약 600억 크로나로 추정되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반영하여 약간 확장적일 것으로 예상

○ (경제전망) 재정 여건과 실질 소득이 좋아지면서 성장 전망이 개선

■ 경제는 2024년에 0.6%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한 후 2025년 1.8%, 2026년 2.8%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민간 소비는 실질 소득 증가, 부채 상환 비용 감소, 노동시장 강화에 힘입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
- 신용 조건의 점진적인 완화와 건설 비용 하락은 민간투자를 뒷받침할 것
- 통화정책 완화가 효과를 발휘하고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물가상승률은 현재의 낮은 수준에서 목표치인 2%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예상
  - 통화정책 전달경로의 예상보다 강한 지연 효과와 예상보다 더 지속적인 예비적 저축은 가계의 소비 회복을 둔화시킬 수 있음
- 주요 무역 파트너의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 수출 중심의 스웨덴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상방 위험은 가계 저축률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낮아져 민간 소비가 더욱 활발해지는 경우가 포함됨

○ (정책제언)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진

■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

- 낮은 물가상승률과 약한 내수를 감안할 때, 물가상승률 기대를 고착화하기 위한 명확한 선행지침(forward guidance)[17]으로 보완하여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장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 지침(한국경제, 2019.12.23. https://www.hankyung.com/amp/2019122235131Y)

- 인구고령화에 따라 스웨덴은 저숙련, 고령, 외국인의 활용도가 낮은 노동력을 동원하고 기술의 미스매치를 해결해야 함

  • 교육시스템을 개혁하여 중등 및 고등 교육 제공자가 노동시장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맞춤형 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면 기술 미스매치, 노동력 부족, 장기 실업률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 엄격한 임대 규제를 완화하고 토지 이용 계획을 간소화하면 주택공급과 노동 이동성 개선을 촉진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친환경 전환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송 연료와 항공에 대한 세금 감면 계획을 재고해야 함

〈표 Ⅲ-10〉 스웨덴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1.6	-0.1	0.6	1.8	2.8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1]	8.4	8.5	2.8	0.8	1.9
실업률((Unemployment rate)	7.5	7.7	8.4	8.3	8.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1.0	-0.6	-1.1	-1.6	-1.2
마스트리히트 국가채무(Maastricht definition)[2,3]	33.8	31.7	32.1	32.4	32.4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5.0	6.5	8.1	8.3	8.1

주: 1. 부동산 담보대출 이자비용이 포함됨
2. percentage of GDP, 2022년 가격
3. 마스트리히트 정의는 일반 정부 채무를 시장 가치가 아닌 액면가를 기준으로 하며 대출, 채무 증권, 통화 및 예금만을 포함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246., 저자 재작성

11. 영국

○ (경제현황) 경제활동은 건강하지만 다소 둔화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음

- 속보치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의 강력한 성장세에 이어 3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0.1%로 둔화
  - 하지만 2024년 초부터 소매판매가 상승 추세를 보이는 등 모멘텀은 여전히 긍정적
- 민간 부문에 대한 신용은 11개월 연속 위축되다가 1월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은행 금리는 8월 이후 두 차례에 걸쳐 25bp 인하됨
  -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8월과 9월에 4% 미만으로 1년 전보다 50bp 하락했다가 10월 말부터 4.25%를 넘어섬
- 주택 구입을 위한 월별 주택담보대출 승인 건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되었고,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크게 하락
  - 주택 가격은 여름 이후 더욱 상승하였으며, 건설 수요는 견고해 보여 서비스업의 일부 약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기업 심리를 뒷받침하고 있음
- 9월 CPI 물가상승률은 1.7%로 하락했지만, 10월에 OFGEM[18] 에너지 가격 상한선이 10% 인상되면서 헤드라인 금리는 2.3%로 다시 상승
  - 9월까지 3개월 간 민간 부문의 정규직 연간 임금 상승률이 4.8%로 상승하고 10월에도 5%의 높은 서비스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는 등 국내 가격 압력이 지속
- 엔지니어와 금융 전문가 등 일부 기술 인력 부족은 여전하지만 전반적인 빈 일자리 수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
- 올해부터 9월까지 파운드화 가치가 상승하고 세계 에너지 가격이 정상화되면서 수입 물가상승률 하락 압력을 가했지만, 이러한 영향은 최근 미국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여 부분적으로 상쇄됨

○ (통화·재정정책) 정책 조합이 완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제한적

18) Office of Gas and Electricity Markets: 영국의 에너지 규제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재정동향, 2024년 3월호, 2024.3., p.44)

■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목표 수준으로 수렴됨에 따라 은행 금리는 4.75%에서 3.5%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6년 초까지 통화정책이 계속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영란은행은 자산매입기금에서 통화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의 재고를 현재와 같은 속도로 계속 축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1,000억 파운드의 금 보유량을 줄이는 목표를 1년 더 연장할 것

■ 통화정책은 2024~2026년에 걸쳐 긴축적일 것이지만, 가을 예산에서 발표한 세금, 지출, 차입 패키지의 상당한 재정 완화로 인해 예상보다 덜할 것

- 현재의 지출과 공공투자는 모두 증가할 예정
  - 증가분의 약 절반은 세금 인상으로 충당되며,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고용주 사회보장기여금 비율의 인상이며, 나머지 부분은 추가 차입을 통해 충당
- 새로운 재정 규칙은 공공투자를 위한 추가적인 여지를 제공
  - 현재 목표로 사용하는 부채 측정에 금융 자산을 포함함으로써 추가 차입이 가능해지며, 현 예산의 균형 요구사항은 차입을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 정부가 준칙을 준수함에 따라 세수입은 향후 2년간 GDP의 38% 이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

○ (경제전망) 경제는 잠재력 이상으로 성장할 것

■ 생산은 2025년에 1.7%, 2026년에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선제적인 재정완화로 인해 2025년 정부 소비와 투자가 성장을 견인한 이후에 세금 인상이 민간소비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고 정부의 추가 차입이 기업 투자를 구축할 것
- 초과 가계 저축, 인구 증가, 통화 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투자가 강세를 보일 것이며, 세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무역의 성장 기여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공공지출이 노동수요를 뒷받침하고,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노동력 참여율 하락과 기술 부족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직원을 유지하면서 실업률은 2026년에 4.0%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물가상승률은 고착화되고 지출 패키지로 인한 수요 증가로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상회함에 따라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5~2026년 동안 목표치를 상회할 것

- 예산적자는 2025년 GDP의 4.5%, 2026년 3.9%로 예상되며, 공공 부채는 2025~26년 동안 GDP의 100% 이상으로 유지될 것

■ 재정 완충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대외 충격은 전망에 상당한 하방 위험이 될 수 있음

- 여기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영국 가구의 의존도를 고려할 때 세계 에너지 가격의 상승이 포함됨

- 또한, 정부 지출의 강력한 증가와 노동시장 둔화 정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지속적인 물가상승 압력으로 인해 좀 더 장기간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할 수 있음

- 예상보다 작은 민간투자의 구축효과는 상방 위험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재정 완충력을 재건하고 노동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 과제

■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 완충력을 재건하고 세금 제도의 허점을 막고 왜곡을 줄이는 등 추가 세수를 지속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필요

- 새로운 재정준칙에 따른 차입이 계획대로 공공투자의 생산성 향상에 투자하도록 보장하면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소득 지원이 근로 무능력 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근로역량평가(Work Capability Assessment)를 개혁하여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감소를 반전시키는 것이 핵심

- 보육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저소득층에 우선순위를 두는 등 맞벌이 가구를 위한 보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해야 함

- 견습생 부담금 계획(Apprenticeship Levy scheme)에 따라 현직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낮추고,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기술 및 직업 능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음

〈표 Ⅲ-11〉 영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4.8	0.3	0.9	1.7	1.3
소비자물가지수(Harmonised index of consumer prices[1]	9.1	7.3	2.6	2.7	2.3
실업률((Unemployment rate)	3.9	4.0	4.2	4.0	4.0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2]	-4.6	-5.7	-5.6	-4.5	-3.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2]	99.6	100.0	103.0	104.8	106.2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2.1	-2.0	-2.8	-2.6	-2.6

주: 1. 식품, 에너지가격, 알코올, 담배 제외
2. percentage of GDP, 2019년 가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258., 저자 재작성

12. 미국

○ (경제현황) 견조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2022년과 2023년 차입 비용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2023년 GDP는 2.9%의 견조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강한 성장세를 유지

- 이 기간 동안 민간소비 성장률은 실질임금의 활발한 상승을 반영하여 견고
- 공공소비 성장률 역시 세수 회복과 팬데믹 기간 동안 배분된 역사적으로 큰 규모의 연방정부 지원금 덕분에 탄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를 유지하고 있음
- 고금리의 영향을 받는 주택투자는 여전히 침체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입법화된 새로운 산업 정책의 효과를 반영하듯 투자 성장률은 일부 부문에서 강세를 보임
- 동시에 헤드라인 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7.2%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4년 10월에는 2.3%로 낮아져 부분적으로는 에너지 가격 하락에 힘입어 연방준비제도의 2% 목표치에 근접
  - 근원 물가상승률도 그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2% 목표치에 가깝게 떨어지고 있음
  - 강한 성장 속에서 이와 같은 물가상승률이 하락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시대의 불리한 공급 요인, 이민자 급증, 노동 생산성 증가가 계속 완화되고 있기 때문
- 의회예산처(Congressional Budget Office)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연간 순 이민자 수는 팬데믹 이전 5년 동안 관찰된 평균 이민자 수에 비해 약 3배 증가
- 한편,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2022년 최저치에서 반등하여 최근 팬데믹 이전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
  - 다양한 생산량, 물가, 노동시장 지표는 현재 경제가 완전 고용에 근접해 있음을 시사

■ 이러한 견조한 내수를 부분적으로 반영하듯 경상수지 적자는 3%로 팬데믹 이전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달러 강세와 2000년대 초반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본원소득수지(primary income balance)[19] 감소로 인해 적자는 2023년에 소폭 축소된 이후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

19)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에 발생하는 급료 및 임금, 투자소득의 차이(한국은행 홈페이지, [제866회] 국제수지

동안 확대되었음

- 주로 미국 동부 및 걸프 연안의 항구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파업이 10월에 시작되어 세계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위협이 되었음

  • 파업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협상이 계속되는 동안 항구를 2025년 1월 중순까지 개방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짐

○ (통화·재정정책) 대규모 예산적자가 지속되는 반면, 정책금리는 마침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안정될 것

■ 2024년 3분기부터 통화정책 완화가 시작되었으므로 2026년 초까지 추가 정책금리 인하는 계속될 것이며, 정책금리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약 3.25~3.5% 정도에서 안정될 것으로 보임

-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2025년까지 재무부 증권과 기관부채 및 기관 주택담보증권(MBS)의 자산 보유를 계속 축소할 예정

- 예산적자는 일반 정부 기준으로 GDP의 7.5%를 초과하는 매우 큰 규모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20%를 상회하고 증가 추세에 있음

  • 팬데믹 시대의 가구, 기업,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완화되었지만, 고령화로 인한 의무적 사회보장정책을 포함한 높은 지출과 10년간 축소된 과세 기반 사이에 구조적인 불일치가 존재

  • 이 예측은 2025년 말에 만료될 예정인 원문 표현 표기(TCJA)의 세금 감면이 광범위하게 연장될 것으로 가정

○ (경제전망) 성장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위험은 하방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음

■ 실질 GDP 성장률은 2025년과 2026년에 점진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이민의 정상화, 노동수요 냉각, 그리고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저축이 완전히 소진됨에 따라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될 것

통계의 이해,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7/view.do?nttId=10067215&menuNo=200144, p.20)

- 팬데믹 기간 동안 낮은 금리에 고정되어 있던 가구와 기업들이 이제는 높은 금리로 재융자해야 하는 부담이 금리 인하의 촉진 효과를 일부 상쇄하여 민간투자 증가율이 완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특히 지방정부 수준의 공공소비 및 투자 증가율은 각 지방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받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을 소진함에 따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될 것

- 실업률은 상승하겠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명목임금상승률은 부분적으로 물가상승률 하락을 반영하여 다소 둔화될 것

- 물가상승률은 2026년 초에 목표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

■ 최근의 예상치 못한 회복력 패턴이 지속될 수 있으나, 성장에 대한 위험은 하방에 치우쳐 있을 가능성이 높음

- 통화정책 완화를 지연시키는 예상보다 고착화된 서비스 물가상승률, 중동 분쟁 악화와 관련된 유가 급등, 무역 긴장의 현저한 증가, 노동력 증가세 약화 모두가 생산량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긍정적인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인공지능의 새로운 발전에 힘입어 생산성 성장이 예상보다 더 강하게 지속될 수 있음

- 경제 주요 부문의 규제 완화 역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정책제언) 지속적인 재정 건전화가 필요

■ 강한 성장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재정적자와 증가하는 부채 비율은 내수를 증대하고 단기 및 장기적으로 재정위험을 높임

- 인구 고령화는 향후 의무 연금 및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킬 것

- 예산적자를 축소하고 정부 부채 비율을 보다 신중한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인 중기 재정 조정이 필요

- 과세 기반을 확대하고 보다 효과적인 방식으로 세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연금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우 높은 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견고한 중기 프레임워크의 채택은 이러한 압박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숙련 노동자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혁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취업 기반 영주권 이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 분야의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 비자 발급을 조정하여 인력부족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최근 학업을 중단한 고등학생을 다시 학업에 참여시키는 정책과 경제적으로 취약한 학생들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우선순위가 높음

〈표 Ⅲ-12〉 미국 경제 및 재정전망

(단위: %)

	2022	2023	2024	2025	2026
시장가격기준 국내총생산	2.5	2.9	2.8	2.4	2.1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deflator)	6.6	3.8	2.5	2.1	2.0
실업률((Unemployment rate)	3.6	3.6	4.0	4.1	4.1
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1]	-3.7	-7.6	-7.6	-7.9	-7.9
국가채무(General government gross debt)[1]	118.4	120.6	122.0	125.8	129.8
경상수지(Current account balance)[2]	-3.9	-3.3	-3.7	-3.8	-3.7

주: 1. percentage of GDP, 2017년 가격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4,* p.215., 저자 재작성